

연구보고서 2024-14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 -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장인수  
임지영·유삼현·계봉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유삼현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4-14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31-1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14>

## 발|간|사

지난 20여 년 간의 저출산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지속적인 고착화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심화 양상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심도 있게 구성된 정책 평가와 부재와 더불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교한 관측(모니터링) 및 해석에 대한 한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출생 관련 집계지표의 특성은 정책 요인이 부부 단위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집계지표로 나타나는 출산 관련 일련의 미-거시적 체계에서의 다양한 인과적 요인에 의한 결과적 특성으로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개입의 높지 않은 실효성, 부부 단위의 미시적 측면에서의 출산 이행에 대한 다양한 저해 요인 등이 작용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간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특성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특히 현재의 청년 세대가 띠고 있는 내, 외생적 취약성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다음 생애주기 과정인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비하여 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련의 출산력 수준이 사회구조적 특성의 양극화로 인한 개인 수준의 격차 심화, 그리고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띠는 다양한 불평등 특성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특히 한국사회의 또 다른 주된 당면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는 불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도 착안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불안정성의 기제가 세대 간, 세대 대 불평등 특성에 기인하고, 이는 특히 현재 청년 세대의 내, 외적 취약성과 밀접하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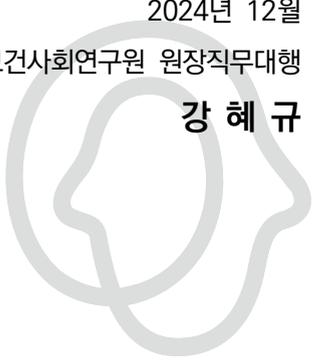
맞물려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결혼 및 출산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가 띠는 차별성은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 양상을 사회구조적 특성과 결부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미시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통시적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예전 청년 세대에 비하여 현재 청년 세대가 띠는 취약적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장인수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 임지영 전문연구원, 그리고 원외의 국민대학교 계봉오 교수, 한양대학교 유삼현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수행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연구 기간 내 상기 논의를 충실하게 담아준 본 연구의 내, 외부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전반적인 구성과 발전에 대하여 유익한 논의를 나누어 주신 원내 박종서 연구위원과 연세대학교 최성수 교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모든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긴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혜규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15</b>
제1절 연구의 배경 .....	1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21
<b>제2장 관련 논의 검토 .....</b>	<b>25</b>
제1절 경험적으로 보고된 한국사회의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 .....	27
제2절 불평등과 차별적 인구 행위 .....	29
제3절 저출산 현상과 인구학적 논쟁 .....	33
<b>제3장 불평등과 불안정성, 그리고 차별적 인구 행위 .....</b>	<b>41</b>
제1절 분기하는 흐름과 불평등 .....	43
제2절 불확실성의 확대와 새로운 논의 .....	46
제3절 한국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	53
제4절 소결 .....	60
<b>제4장 불안정성의 기제와 특성 탐색: 최근 세대 간,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가치관 .....</b>	<b>63</b>
제1절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 최근 추세 .....	66
제2절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황 .....	79
제3절 세대 내 불평등과 미혼자의 결혼·출산 관련 특성 분석 .....	92
제4절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출산 등에 대한 가치관 차이 특성 .....	111

---

제5절 소결 .....	121
<b>제5장 노동시장 지위 이동으로 본 세대 간 불평등 특성과 함의 .....</b>	<b>125</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27
제2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28
제3절 자료와 분석방법 .....	132
제4절 분석결과 .....	139
제5절 소결 .....	169
<b>제6장 출생코호트별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 연관성 .....</b>	<b>171</b>
제1절 분석의 배경 .....	173
제2절 분석자료와 방법 .....	175
제3절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출생코호트 간 차이 탐색 .....	187
제4절 소결 .....	210
<b>제7장 결론 .....</b>	<b>213</b>
제1절 주요 연구내용 요약 .....	215
제2절 정책적 함의 .....	219
<b>참고문헌 .....</b>	<b>223</b>
<b>Abstract .....</b>	<b>241</b>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1〉 출생코호트별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집계 특성 비교 .....	68
〈표 4-2〉 청년층 10분위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2009-2016) .....	80
〈표 4-3〉 청년층(만 19-34세) 소득 수준(소득 1분위 대 소득 5분위) .....	81
〈표 4-4〉 청년취업자의 임금 관련 지표(2015-2019) .....	82
〈표 4-5〉 청년층(만 19-34세) 자산 수준(소득 1분위 대 소득 5분위) .....	85
〈표 4-6〉 미혼자의 일반 특성 .....	94
〈표 4-7〉 미혼자의 경제활동 특성 .....	96
〈표 4-8〉 연령별 미혼자의 결혼 의향과 평균 희망 결혼 연령 .....	97
〈표 4-9〉 연령별 미혼자의 출산 의향과 희망 자녀 수 .....	98
〈표 4-10〉 연도별 미혼자의 소득수준 .....	99
〈표 4-11〉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소득수준별 결혼 의향 .....	101
〈표 4-12〉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소득수준별 출산 의향 .....	102
〈표 4-13〉 경제적 특성에 따른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결혼 의향(있음) .....	104
〈표 4-14〉 경제적 특성에 따른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출산 의향(있음) .....	105
〈표 4-15〉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거주지역별 결혼 및 출산 의향 .....	106
〈표 4-16〉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교육수준별 결혼 및 출산 의향 .....	107
〈표 4-17〉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가치관별 결혼 의향 .....	109
〈표 4-18〉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가치관별 출산 의향 .....	110
〈표 4-19〉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차이: 세대 간 .....	112
〈표 4-20〉 결혼 결정 시 중요 요인 차이: 세대 간 .....	113
〈표 4-21〉 자녀 출산 결정 시 중요 요인 차이: 세대 간 .....	114
〈표 4-22〉 자녀에 대한 시각 차이: 세대 간 .....	115
〈표 4-23〉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차이: 세대 내 .....	116
〈표 4-24〉 결혼 결정 시 중요 요인 차이: 세대 내 .....	117
〈표 4-25〉 자녀 출산 결정 시 중요 요인 차이: 세대 내 .....	118
〈표 4-26〉 자녀에 대한 시각 차이: 세대 내 .....	119
〈표 4-27〉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 차이: 세대 간 .....	120

〈표 4-28〉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 차이: 세대 내 .....	120
〈표 5-1〉 결합노동시장 지위 구분 .....	133
〈표 5-2〉 출생 코호트별 20세 이후 관측 연령대(노동패널 1-25차 기준) .....	135
〈표 5-3〉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전체 남성 .....	160
〈표 5-4〉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전체 여성 .....	162
〈표 5-5〉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남성 40대 .....	164
〈표 5-6〉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여성 40대 .....	165
〈표 5-7〉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남성 20대 .....	167
〈표 5-8〉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여성 20대 .....	168
〈표 6-1〉 모형에 투입한 최종변인에 대한 설명: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 가공 .....	177
〈표 6-2〉 모형에 투입한 최종변인에 대한 설명: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 가공 .....	179
〈표 6-3〉 각 출생코호트 구분 및 각 범주별 표본 수: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 가공 .....	181
〈표 6-4〉 각 출생코호트 구분 및 각 범주별 표본 수: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 가공 .....	186
〈표 6-5〉 모형에 투입한 최종변인의 평균에 대한 집단별 차이 .....	187
〈표 6-6〉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	189
〈표 6-7〉 출산 확률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	190
〈표 6-8〉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기간(시점) 및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	192
〈표 6-9〉 모형에 투입한 최종변인의 평균에 대한 집단별 차이 .....	193
〈표 6-10〉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2000년 .....	195
〈표 6-11〉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2021년 .....	196
〈표 6-12〉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2000년 .....	198
〈표 6-13〉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2021년 .....	199
〈표 6-14〉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기간(시점) 및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	201
〈표 6-15〉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기간(시점) 및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	202

#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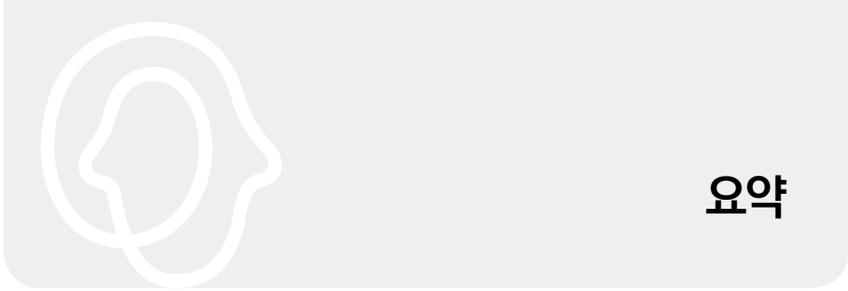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그림 1] 본 연구의 구성 .....	2
[그림 1-1] 연구의 구성 .....	23
[그림 2-1] 여성의 교육과 출산율의 관계 변화에 관한 가설적 모형 .....	32
[그림 4-1] 전체 전체 근로자 월임금총액 평균 대비 20~39세의 평균 월임금총액 비중 (2001-2023년) .....	69
[그림 4-2] 고용형태에 따른 연령대별 평균임금(2007-2023년) .....	70
[그림 4-3] 소득분위(5분위)에 따른 가구주 연령대별 특성(2007, 2023년) .....	73
[그림 4-4]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소득 증감률 .....	76
[그림 4-5]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소득 구성별 증감률 .....	76
[그림 4-6]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감률 .....	77
[그림 4-7]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자산, 순자산 증감률 .....	77
[그림 4-8]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의 증감 ..	78
[그림 4-9] 청년층(25-39세)의 노동시장 결과물: 평균과 불평등지수 .....	82
[그림 4-10] 청년층(만 19-39세)의 정규직 비율(2008-2022) .....	83
[그림 4-11] 연령별 '매우 불안정'한 집단의 변화 경향 .....	84
[그림 4-12]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	86
[그림 4-13] 청년(만 40세 미만)의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와 주거불안 경험(2022) .....	87
[그림 4-14] 가구소득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	88
[그림 4-15] 가구소득과 성적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	89
[그림 4-16] 청년층(만 19-39세)의 정치성향 변화(2003, 2013, 2023) .....	90
[그림 4-17] 청년층(만 19-39세)의 남녀 갈등에 대한 인식(2017, 2020, 2023) .....	91
[그림 4-18]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가치관 분포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108
[그림 5-1] 결합노동시장 지위 연령분포(1998 - 2022) .....	140
[그림 5-2] 결합노동시장 지위 연령분포의 변화(2000, 2010, 2020) .....	143
[그림 5-3] 결합노동시장 지위 연령분포, 1960년대생과 인접 출생 코호트 비교(남성) .....	145
[그림 5-4]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1960년대생과 인접 출생 코호트 비교(여성) ..	147

---

[그림 5-5] 출생 코호트별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40대 .....	148
[그림 5-6] 출생 코호트별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20대 .....	150
[그림 5-7] 연령별 이행률, 전체 .....	153
[그림 5-8] 연령별 이행률 출생 코호트 비교, 40대 .....	155
[그림 5-9] 연령별 이행률 출생 코호트 비교, 20대 .....	156
[그림 6-1] 출산에 대한 미시, 거시적 인과 체계 .....	174
[그림 6-2] 연도별 출생아 수와 주요 변인 간 연관성 도식 .....	203
[그림 6-3] 연도별 상대소득, 상대자산과 자녀의 필요성 변인 간 연관성 도식 .....	20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는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 다각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고착화된 저출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인구 변동과 사회 위험 간 연관성, 다양한 영역(지역 간, 세대 간, 사회계층 간, 노동시장 및 산업 구조 내 등)에서의 삶의 질 격차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구 변동 대응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 등) 개편과 법, 제도, 인프라 개선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회적 위험과 맞물린 불평등 특성과 저출산 간 연관성에 대한 개연성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가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노동시장 격차(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등), 교육 수준 격차(고학력-저학력, 대학서열 등), 정치 성향 격차에 따른 이념 갈등 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러 사회정책 분야의 다차원적 불평등과 맞물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격차(간극), 동일 세대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은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향후 미래의 인구 변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심층적 논의 및 진단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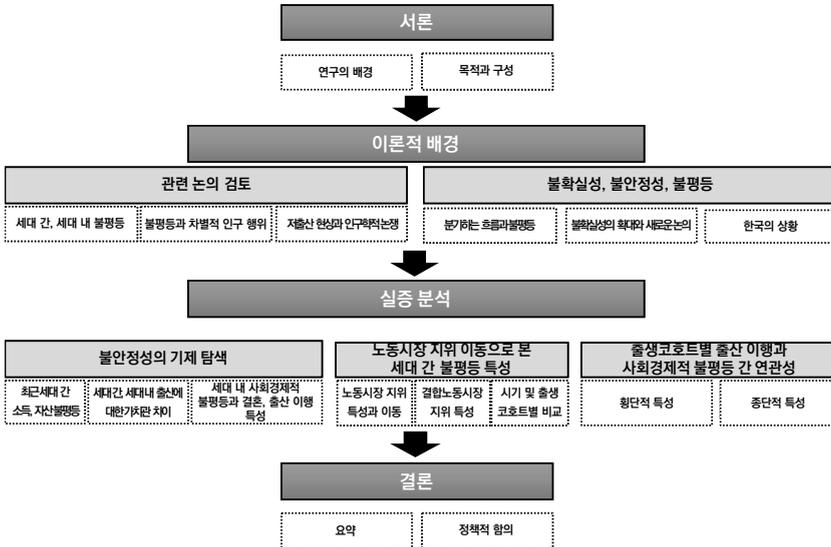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다차원적으로 전개, 심화되는 대전환 시대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의 개편과 정책 개선 방향 모색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다분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

2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서의 사회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대 간 불평등의 특성을 집중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저출산 양상을 포함한 제반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 중장기적 시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본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양상 진단 및 해석,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미시적 층위에서의 세대 간 불평등 특성이 출산 행위(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띠고 있다.

[요약 그림 1] 본 연구의 구성



출처: 저자 작성.

## 2. 주요 연구 내용

### 1) 한국사회의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

세대 불평등이 학술적으로,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 두루 주목하고 있는 주된 현안이자 쟁점으로서의 큰 의미를 띠고 있음과 동시에 정책 당국에서도 주된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양적 축적과 별개로 이들 연구 사례의 논의는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대 내 및 세대 간 불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세대 불평등의 통시적 경향은 점차 완화되었거나 큰 변화 없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논의, 그리고 대체적으로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 사례로서 김창환, 김태호(2020)는 그간 세대의 소득 불평등을 실증한 연구 사례가 가구소득을 활용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개인 소득 자료를 활용한 결과 세대 내 불평등의 감소 및 세대 간 불평등의 미증가 특성을 관측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15년 간 세대 불평등의 증가 양상은 소득 격차의 심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김창환, 김태호, 2020).

반면, 세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관련 사례는 대체로 386세대의 부의 불평등 축적 과정의 양상으로서의 불평등 심화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이철승, 2019b; 신진욱, 조은혜, 2020; 신진욱, 2022). 이들이 공통적인 주된 논거는 386세대 등과 같이 특정 출생코호트의 부의 집중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특성을 진단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따른 세대 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 불평등과 차별적 인구 행위

인구변천에서 높은 출산율이 낮은 출산율로 전환되는 과정은 구조적인 불평등에 따른 차별 출산력과 사고와 행위의 상대적 변화인 확산(diffusion process)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경제학적 설명이 활용되고, 후자는 주로 사회학 및 인류학적 관점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 한 사회 내 계층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교육,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출산력도 유지될 것이다. 반면 전근대사회에서 효과적인 출산 조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계층 간 출산율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우 출산율 차이는 사회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고와 행위를 수용하는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이며, 새로운 사고와 행위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경우 사라지게 된다. 혁신의 수용과 전파 과정에서 이른바 선도(leaders) 집단과 추종(followers) 집단이 발생하며 상대적인 출산율 차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 3) 저출산 현상과 인구학적 논쟁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논쟁과 수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어떤 이론이 다른 이론과 명확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부분적으로 대립 및 보완하며 발전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 템포효과, 성평등주의와 젠더혁명 관점, 불확실성 논의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4)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저출산 연관성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차이를 넘어,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심리적 요인과 깊이 연관된다(Kim, 2023). 청년층이 인식하는 불평등은 혼인, 출산 등 그들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회계층과 구조적 요인에 따라 불평등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혼인과 출산을 포함한 개인 행위 역시 차별적인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 수준과 불평등에 관한 청년층의 인식이 실제 혼인과 출산 등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적 개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득 계층 간 출산율 차이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출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할지 모른다(Comolli et al., 2021).

불평등과 불안정성은 한국 사회의 인구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출산 등 인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과 종합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청년층이 안정된 경제적 조건과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5)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 최근 추세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 최근 추세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특

징 중 하나는 유경원(2023)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이 코로나 19 전후 보다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심화의 배경 중 하나로 특히 상대적으로 20-30대 청년층의 취약한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이들의 주거 유형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자가보다는 전월세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들의 부채 증가가 이러한 주거 유형과 연관된 전월세 보증금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소득의 증가, 부동산 및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유형의 고착화, 주거 보증금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 등 순자산 증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변화폭을 보이는 것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의 사회경제적 불안 및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출산 이행에 부정(-)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인 세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었지만, 세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특성은 청년층의 상대적, 절대적 취약성과 맞물려 그 의미가 배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렇게 배가된 특성이 이들의 결혼 및 출산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일련의 연쇄적 과정의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층의 상대적 취약성은 통시적 관점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 청년층과 다른 취약한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구조적 양극화의 심화에 의한 결과적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절대적 취약성은 이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연령층과 두드러지게 다른 특성에 따라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의 주거 유형은 상대적으로 전월세 비율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개인

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대적 취약성은 그 자체로도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이에 더하여 이로 인한 경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생애주기 사건 이행, 가령 결혼, 출산 등의 사건 이행과 부적(-) 연관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 6)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황과 결혼, 출산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황 및 세대 내 불평등과 미혼자의 결혼·출산 특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 내부에서 소득, 근로조건, 자산과 주거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과 교육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간극이 클 것이라 예상한 정치성향과 젠더갈등의 경우에는 그 인식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일부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크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데이터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5분위배율이 2.8배(2009년)에서 5.6배(2021년)로 상승하여 내부적인 차이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균등화 실질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5분위배율은 2009년 4.6에서 2021년 4.3으로 불평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는 근로(사업)소득과 총소득 모두 2021년에 더 커져 내부의 차이가 커진 것을 시사한다. 총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 특성 역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도 결혼과 출산 의향

이 차이를 보였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과 출산 의향이 제일 높았고 반대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은 미혼남성의 경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높았지만 미혼여성은 일정한 패턴이 파악되지 않고 최근에는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집단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치관의 경우 미혼여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혼과 출산 의향이 더 높았으나 미혼남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혼 의향은 더 낮고 출산 의향은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미혼자의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개인이 가진 자원과 개인이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결정된다.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의향이 하락하는 추세에 더불어 미혼자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이 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 의향은 더 차이를 보이게 된다.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서 나타나는 격차가 증첩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해서 증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선권, 2019, p.13) 정책적으로 대응하여 격차를 줄여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과 관련된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일자리와 소득에 모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성과의 측면에서까지 확장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임금격차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불안정성이 높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경우 결혼과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임금이 낮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격차를 해소하여 청년 내부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이들의 원하는 결혼과 출산 이행을 도울

필요가 다분하다.

## 7)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 분석 결과 드러나는 최근 젊은 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한 높지 않은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불안정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린 내, 외적 취약성의 결과적 양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결혼과 출산 결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 마련 필요에 대한 강한 인식, 부모/이웃 등 주변인에 대한 비의존적 성향은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여건 마련이 준비되기 전까지 결혼, 출산을 미루려는 경향과도 맞물려 있다(최선영 외, 2022). 또한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중앙정부, 지자체)에 대한 높지 않은 신뢰도는 결혼, 출산 친화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저하, 정책과 기대 여건 간 괴리 심화에 따른 결혼 및 출산 연기 내지는 포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장인수, 2023.5.25., p.22).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세대 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은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1) 결혼에 대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 결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 2) 출산에 대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 및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 3) 전통적인 자녀의 순기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자녀를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최근 세대는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하여 결혼, 출산,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낮으며, 1981년 이후

출생 집단 내에서도 최근 코호트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8) 노동시장 결합 지위 이동으로 본 세대 간 불평등 특성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되는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노동시장 경험을 인접 출생 코호트와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 결합 지위 이동으로 본 세대 간 불평등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남성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1950년대생보다는 1970년대생보다 낮는데,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대생들의 30-40대 비고용 비중이 다른 코호트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생애과정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90년대생 남성의 2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이전 세대보다 낮아진 반면 1990년대생 여성은 이전 출생 코호트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단,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출생 코호트의 교육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향상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확률효과 다항로짓 분석은 대체로 기술통계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즉, 1960년대생이 다른 출생 코호트보다 높은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경험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1990년대생들의 경험은 이전 세대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형성 주기 변화가 노동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출생 코호트 간 변화에는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960년대 출생 코호트의 자원 독

과점은 적어도 노동시장 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1990년대생들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은 이전 세대보다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9) 출생코호트별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 연관성 분석 1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분석대상으로 25-49세 기혼 취업 여성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소위 ‘불평등’을 느끼는 의 주체가 어떤 집단인지 구체화할 필요성을 인식한데 기인하고 있다. ‘청년’의 어려움, 청년들이 느끼는 불평등이 상당함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들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띠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사회적 유급 근로 이외에도 가사노동 등 다각적인 부담과 더불어 출산 이행과 직, 간접적으로 맞물린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을 체감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횡단 측면의 집단 간 차이에 있어서는 설명되는 부분 중 교육수준과 정규직 더미 변인이 상대적으로 큰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도출된 반면, 종단적 측면의 차이에서는 설명되는 부분 중 수도권과 상대소득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 등의 집계적이고 거시적인 출산 관련 지표가 이러한 미시적 분석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동시에, 수도권과 상대소득의 변화에 따른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출생아 수와 출산 이행에 대하여 분석대상 본인의 소득과 자산보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상대소득에 보다 큰 부적(-) 연관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최근 출생코호트와 그 이전의 출생코호트 간 출생아 수와 출산 확률의 유의한 차이

에 대해서는 상대소득의 기여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 입장에서의 사회불평등 요인으로 모형 내에서 고려한 상대소득과 상대자산 변인이 출생아 수 감소와 출산 이행 확률 감소라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이 출생아 수 감소와 출산 이행 확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서, 다양한 측면, 층위에서의 사회구조적 특성, 특히 세대 내, 세대 간 격차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누적된 젊은 층의 내, 외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분석대상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횡단적 측면의 분석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2000년의 경우 두 집단 간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소득, 자산, 가치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보다는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보다 기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2021년도의 경우에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취업 여부, 상대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차이 설명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종단적 분석 결과에서는 상대자산과 상대소득, 자녀 필요성 변인이 두 집단 간 출생아 수 평균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점인 2021년도의 상대자산과 상대소득, 자녀 필요성 변인이 모두 출생아 수와 정적(+)인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인의 영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과 저출산 간 특성을 설명하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결론 및 시사점

출생코호트별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 연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의 제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개선 방향은 프로그램,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거시구조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의 잠재적 수요자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국민적 역량 결집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간의 부분균형적 측면(partial equilibrium)에서의 접근을 지양하고, 일반균형적 접근(general equilibrium)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다각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사회적 양극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사업의 추진의 실효성이 저해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현재의 저출산 문제의 짐을 고스란히 넘기거나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느낌으로의 정책 수립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연령효과와는 상이한 코호트효과 측면에서 이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과거의 청년층과는 다른 현재의 청년층이 경험하고 마주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러한 상황과 맞물린 이들의 여건과 특성이 어떠한지, 이들 중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하다. 관련하여,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과 설계가 모든 잠재적 정책 수혜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제시되고 공개될 필

#### 14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요가 있다. 가령, 젊은 층과의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의 결과 내지는 설문 조사 결과가 충실하게 반영된다면 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책의 안정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와 안목 등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현재의 저출산 대응은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현재 청년층의 고민과 내, 외적 취약성을 더 많이 고민하고 특히 자녀 출산을 원하지만 내, 외적 여건의 한계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고민과 미시적인 정책 설계가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사회경제적 불평등, 청년 세대, 불안정성, 저출산, 출산력, 사회구조, 노동시장, 차이 모형, 횡단 연구, 종단 연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거의 대부분 주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출산력 수준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1년 1.31을 기록한 이후, 1.3 미만의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나마 1.0~1.3 수준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다시 내림세로 전환되며 2023년 0.72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시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출산율 하락을 막거나 반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산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그에 상응하는 많은 연구와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서로 다른 배경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마다의 논리와 분석 방법을 통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된 연구와 정책들이 모두 단편적 또는 파편적인 경우가 많고, 관련 논의 역시 중구난방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 분야의 특성상 경제학, 사회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인구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확대되면서 해당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던 학자나 연구자들까지 뒤늦게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럽 내 다양한 국가들이 겪은 이질적인 경험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수용되거나, 과거 전통적 인구변천을 설명하던 논의를 그대로 적용되는 등 이론적, 학술적 측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이 2008년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경제위기의 장단기 효과는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구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복지제도와 성평등 사회의 모범사례로 간주하던 노르딕 국가에서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합계출산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이론적, 정책적 지향점으로 간주하던 많은 연구자와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사회는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 다각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고착화된 저출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인구 변동과 사회 위험 간 연관성, 다양한 영역(지역 간, 세대 간, 사회계층 간, 노동시장 및 산업 구조 내 등)에서의 삶의 질 격차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구 변동 대응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 등) 개편과 법, 제도, 인프라 개선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이상의 논의는 사회적 위험과 맞물린 불평등 특성과 저출산 간 연관성에 대한 개연성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가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노동시장 격차(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등), 교육 수준 격차(고학력-저학력, 대학서열 등), 정치 성향 격차에 따른 이념 갈등 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러 사회정책 분야의 다차원적 불평등과 맞물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격차(간

극), 동일 세대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은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향후 미래의 인구 변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심층적 논의 및 진단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 완화 및 형평성 제고가 주된 화두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양상은 세대 간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현재의 공적연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하여, 상기 세대 불평등은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양상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양육 및 돌봄 여건과 맞물린 사회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격차 및 불평등 특성 내 존재하고 있는 세대 간, 세대 내 차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증대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시적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노동시장, 교육 수준 등의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 격차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의 청년 세대가 띠고 있는 내, 외적 취약성과 맞물린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특성이 과거의 청년에 비하여 생애 주기 내 결혼, 자녀 출산 등의 사건 이행을 보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러한 개연성은 결혼 이후 자녀 돌봄, 양육 여건과 직, 간접적으로 맞물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저출산 양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녀 돌봄, 양육 관련 (경제적 측면의) 여건은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 돌봄, 양육 여건과 결부된 여러 사회경제적 불평등 내 존재하고 있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은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대 간 주거 자산 격차 심화는 직접적인 자녀 돌봄 및 양육 여건의 기반으로서 청년세대의 기반 약화가 결과적으로 결혼 및 출산 기피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비정규직 중심 취업 증가는 직업 안정성 저하에 따른 가사노동 비율 감소와 자녀 돌봄, 양육 여건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출산 의향 및 이행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그간 경험적으로 두루 보고된 논의를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사회구조적 격차 심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청년과 과거 청년 즉 동일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출생코호트별로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을 개연성을 고찰할 필요성에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저변에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잠재적 수요 집단으로 이해되는 청년 세대의 통시적 변화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는 동시에, 이러한 청년 세대의 통시적 변화가 사회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후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단적으로 주거 특성에서도 최근의 청년층의 상대적 취약성을 찾아볼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이들 청년층의 주거 유형에 상대적으로 자가보다는 전월세가 많은 특징을 띠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징은 부동산 및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유형의 고착화, 주거 보증금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폭의 순자산 증가 특성 등으로 귀결되어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특성과 맞물려 이들의 불안정성을 가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일련의 인과적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거 측면에서의 논의만을 단편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최근 젊은 세대들의 불안정성 형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들의 생애 주기 내 결혼 및 출산 이행에 부적 연관성을 미쳤을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다차원적으로 전개, 심화되는 대전환 시대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의 개편과 정책 개선 방향 모색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다분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사회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대 간 불평등의 특성을 집중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저출산 양상을 포함한 제반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 중장기적 시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본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그간의 거시적 측면의 저출산 양상 진단, 미시적 측면의 출산 행동(의향) 특성 분석 관련 논의가 관련 영향 요인을 단편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과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지역사회,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한 정책 여건을 단편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고, 이러한 특성에 대한 촉발원인과 과정 등에 대한 통시적 접근이 미흡한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다차원적 요소(예를 들어, 세대 간 불평등 특성 등)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 양상 진단 및 해석,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미시적 층위에서의 세대 간 불평등 특성이 출산 행위(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시점에서의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특성 개연성은 별개의 구분된 외생적 요인이 아니라 여러 사회정책 분야에서 두루 촉발되어 존재하고 있는 잠재적, 내생적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다분하며, 특히 다차원적 형성 과정과 개인의 출산 행동(의향) 간 연관성 등이 핵심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2장에서는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이들은 경험적으로 보고된 한국사회의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과 관련된 상반된 논의, 불평등과 차별적 인구 행위, 그리고 저출산 양상을 바라보는 인구학적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3장에서는 관련 논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그리고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는 최근 갈라지는 상반된 흐름과 불평등에 대한 논의, 불확실성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양상과 맞물려 제기되는 새로운 논의, 그리고 이와 맞물린 한국사회에서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 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2,3장에서 논의한 불안정성의 기제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과 가치관 차이 특성을 검토한다. 5장에서는 특히 노동시장 지위 특성과 이동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세대 간 불평등의 특성을 직, 간접적으로 진단한다. 6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약 10여년 간 한국사회의 저출산 양상과 맞물린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젊은 층의 외, 내생적 취약성에 주목하여 출생코호트별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 연관성에 대한 횡단적, 종단적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논거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이상의 본 연구의 구성과 흐름은 다음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서론	이론적 검토	실증 분석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연구의 배경</li> <li><input type="checkbox"/> 목적과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관련 논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li> <li>• 불평등과 차별적 인구 행위</li> <li>• 저출산 현상과 인구학적 논쟁</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하는 흐름과 불평등</li> <li>• 불확실성의 확대와 새로운 논의</li> <li>• 한국의 상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불안정성의 기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li> <li>• 세대 간, 세대 내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li> <li>•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결혼, 출산 이행 특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노동시장 지위 이동으로 본 세대 간 불평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 지위 특성과 이동</li> <li>• 결합노동시장 지위 특성</li> <li>• 시기 및 출생 코호트별 비교</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출생 코호트별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간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적 특성</li> <li>• 종단적 특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요약</li> <li><input type="checkbox"/> 정책적 함의</li> </ul>

출처: 저자 작성.





## 제2장

### 관련 논의 검토

제1절 경험적으로 보고된 한국사회의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

제2절 불평등과 차별적 인구 행위

제3절 저출산 현상과 인구학적 논쟁



## 제 2 장    관련 논의 검토

### 제1절 경험적으로 보고된 한국사회의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

불평등은 사회 구조를 관통하고 결정하는 가장 거대한 원인이자 결과적 양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평등을 직,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사례는 적지 않게 축적되었으며, 시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축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평등이 다양한 사회 범주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당면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불평등은 다양한 관점과 의도,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하고 접근할 수 있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특성 중 하나로서 세대 불평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동일 세대 내에서 관측되는 특성, 그리고 세대 간 격차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세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인구변동, 그리고 사회구조적 양극화 특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인구 초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대, 사회보험 기능과 관련된 여러 현안과 쟁점,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불안정성과 취약성, 급격한 출생아 수 하락과 사망자 수 증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복잡다단한 요인 간 상호작용에 따른 세대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대 불평등은 경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세대라는 상이한 출생코호트 내 그리고 출생코호트 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범주에서의 불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령,

세대 내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면, 1970년대생, 1980년대생과 같이 동일한 출생코호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의 차이 내지는 격차(내지는 격차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1970년대생과 1990년대생 등 다른 출생코호트의 평균적인 자산의 격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대 불평등이 학술적으로,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 두루 주목하고 있는 주된 현안이자 쟁점으로서의 큰 의미를 띠고 있음과 동시에 정책 당국에서도 주된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양적 축적과 별개로 이들 연구 사례의 논의는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대 내 및 세대 간 불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세대 불평등의 동시적 경향은 점차 완화되었거나 큰 변화 없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논의, 그리고 대체적으로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 사례로서 김창환, 김태호(2020)은 그간 세대의 소득 불평등을 실증한 연구 사례가 가구소득을 활용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개인 소득 자료를 활용한 결과 세대 내 불평등의 감소 및 세대 간 불평등의 미증가 특성을 관측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15년 간 세대 불평등의 증가 양상은 소득 격차의 심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김창환, 김태호, 2020).

반면, 세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관련 사례는 대체적으로 386세대의 부의 불평등 축적 과정의 양상으로서의 불평등 심화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이철승, 2019b; 신진욱, 조은혜, 2020; 신진욱, 2022). 이들이 공통적인 주된 논거는 386세대 등과 같이 특정 출생코호트의 부의 집중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특성을 진단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따른 세대 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제2절 불평등과 차별적 인구 행위

인구학 분야에서 불평등과 인구 행위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불평등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거시 지표지만, 인구 행위는 대개 개인 등 미시적 수준에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간혹 상대소득 또는 실업률 등 거시 지표와 출산율 등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 인구학 지표와 연계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예를 들면, Easterlin, 1976; Butz & Ward 1979). 하지만 많은 경우 인과성 등의 문제로 해당 변수 사이의 그 연관성을 파악하는 정도로 제한된다.

불평등과 인구 행위의 관계는 대개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 인구 행위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 소득, 직업 또는 인종이나 이민자 지위 등 출신배경에 따른 혼인 및 출산 등 차별적 행위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이나 소득에 따른 차별 혼인력과 차별 출산력은 인구학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Hajnal 1965: 133). 신가정경제학 관점에 따르면 결혼을 통한 분업과 전문화로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부모들이 자녀의 질(quality)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자녀의 양(quantity)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Becker 1960).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가로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동시에 자녀의 양과 질의 교환(quantity-quality trade off)으로 자녀의 수가 감소한다고 설명한다(Becker, 1974). 결과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는 다양한 배경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다수의 경험연구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을 대체로 부적 관계를 갖는다(Skirbekk, &

Samir, 2012). 사회학적·인구학적 측면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은 그 자체로 여성의 혼인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역할을 하며, 졸업 후에 상위 학교에 진학하거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형태로 출산에 부적 효과가 있다. 또한 교육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피임 등 출산 조절은 물론 사회경제적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가족이나 피임법 등 혁신적인 사고와 방법을 익히고 전파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교육과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출산율 차이는 출산력 차이에 관한 횡단분석에서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출산력 차이의 시계열 변화 등 다른 요인과 출산율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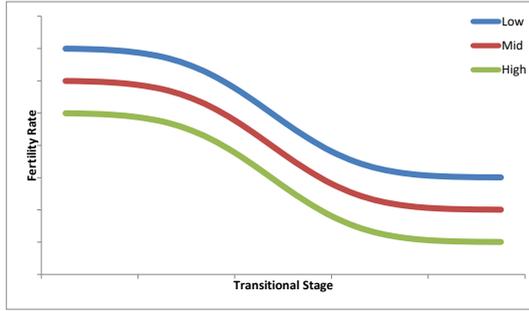
예컨대, 인구변천에서 출산력 하락이 시작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Coale은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Coale, 1973). 이른바 RWA모형으로 불리는 이 설명은 출산 조절의 수용성(readiness), 출산 조절의 의지(Willingness), 그리고 출산 조절의 유효성(availability)으로 구분한다. 우선 출산 조절이 신의 섭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는 인식과 실제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출산을 제한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에 이익이 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출산 조절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델(RWA)은 전근대사회의 높은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혁신적 사고와 행위의 도입 과정에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출산력 하락에 필수적인 소규모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피임 등 출산 조절 방법의 확산에 관한 설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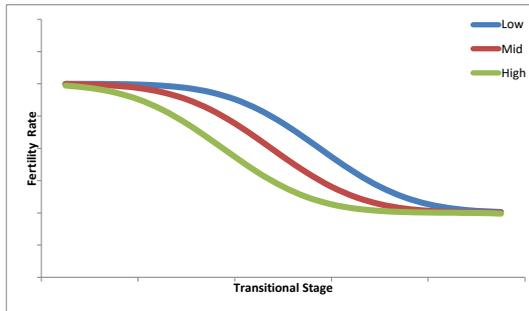
다. 특히 혁신적인 사고와 행위는 신문물에 대한 접근이 쉬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 하층으로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빠른 출산율 하락이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없이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국가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지리적 근접성이나 언어, 종교 등 문화적 유사성에 따라 국가의 출산율 하락이 공유되는 점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구변천에서 높은 출산율이 낮은 출산율로 전환되는 과정은 구조적인 불평등에 따른 차별 출산력과 사고와 행위의 상대적 변화인 확산(diffusion process)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경제학적 설명이 활용되고, 후자는 주로 사회학 및 인류학적 관점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 한 사회 내 계층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교육,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출산력도 유지될 것이다. 반면 전근대사회에서 효과적인 출산 조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계층 간 출산율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우 출산율 차이는 사회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고와 행위를 수용하는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이며, 새로운 사고와 행위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경우 사라지게 된다. 혁신의 수용과 전파 과정에서 이른바 선도(leaders) 집단과 추종(followers) 집단이 발생하며 상대적인 출산율 차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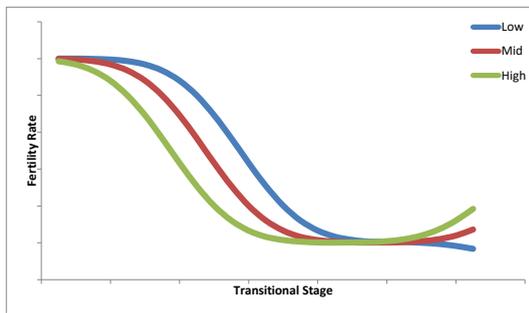
[그림 2-1] 여성의 교육과 출산율의 관계 변화에 관한 가설적 모형



a. 구조적 차이 모형



b. 선도-추종 모형



c. 교차 모형

출처: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저자가 여성의 교육-출산 관계 변화를 가설적으로 도식화하여 작성.

많은 경우 실제 출산력 차이의 변화는 구조적 차이가 지속되는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 가설과 선도-추종(leader-follower) 가설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중간 형태의 모습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Abbasi-Shavazi et al., 2009; Yoo, 2014). 이는 전통적인 인구변천 과정을 토대로 작성한 가설적인 설명(Cleland, 2001)으로 그 이후 전개되는 새로운 인구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림의 마지막 교차(cross-over) 모형은 저출산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사회구조와 출산율의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에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과 초저출산의 등장과 전개를 설명하기 위해 제2차 인구변천 이론과 젠더 관점에 기초한 설명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가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다양한 인구학적 변화, 경제적 요인 또는 젠더 요인과 출산율의 관계 등을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계층 등 구조적 요인과 출산율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여기에서는 우선 저출산 현상의 전개와 인구학적 논쟁을 서술하고, 그 후 최근의 출산율 변동을 계층과 불평등, 불안정성의 확산 등의 논의를 위주로 살펴본다.

### 제3절 저출산 현상과 인구학적 논쟁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논쟁과 수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어떤 이론이 다른 이론과 명확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부분적으로 대립 및 보완하며 발전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 템포효과, 성평등주의와 젠더혁명 관점, 불확실성 논의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1. 제2차 인구변천

지난 1960-1980년대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2.1 미만인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출산율이 대체수준 근처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통적 인구변천 이론의 예상과 달리, 다수의 국가에서 저출산의 지속은 물론, 동거의 확산, 혼외출산의 증가, 이혼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비전통적인 인구학적 행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등 관념의 변화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한다(Lesthaeghe, 2010; Lesthaeghe & Surkyn, 1988; Lesthaeghe & van de Kaa, 1986). 경제성장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고, 특히 여성의 대학 진학과 사회 참여가 확대되었다. 결혼과 출산 등 가족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교육이나 커리어 등 개인적인 성취와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 형성이나 출산은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게 되면서, 동거, 혼외출산, 가족해체 등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대체수준 미만에 머무르게 된다. 매우 빠른 출산율 감소나 한국처럼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의 주요 내용은 결국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출산율 하락을 암시하고 있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초기에 전통적인 인구변천 이론과 구분되는 것인지, 또는 제2차 인구변천이 유럽 외 다른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논쟁이 이어지기도 하였다(Atoh et al., 2004; Lesthaeghe & Neidert, 2006; Raley, 2001; Zaidi & Morgan, 2017). 하지만, 주요 인구학적 변화가 전통적인 인구변천과 구별되는 것이 인정된다. 또한 지

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개선에 따른 출산의 지연과 감소, 다양한 가족의 등장 등 가족구조의 변화 등 주요 인구학적 현상의 전개 과정에 일부 공통적인 부분이 확인되었다. 다만, 2008년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출산율 하락 등 주요 인구학적 변화의 원인이 탈물질주의가 맞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 2. 초저출산의 등장과 템포효과

인구학 분야에서 합계출산율 1.3은 안정인구를 가정한 인구모형에서 45년마다 인구가 반감하는 출산력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1.5~1.6 이상의 저출산과 구별되는 초저출산 수준(lowest-low level)으로 불리고 있다(Kohler et al., 2002; Billari & Kohler, 2004). 매우 낮은 출산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1.3 미만의 합계출산율이 1980-1990년대 유럽의 일부, 1990년대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도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31을 기록하였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2000년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 원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인구변동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형식인구학적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에서 관찰되는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주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상승과 연관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여성의 출산연령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사회적 변화로 인해 특정 연도에 여러 연령대에서 여성의 출산이 미뤄지거나 늦어질 경우,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낮아지게 된다. 마치 출퇴근 시간 주요 도심 구간마다 발생한 교통체증으로

네비게이션의 도착예정시간이 크게 늦어지는 것과 같다. 연령별 출산의 지연 또는 포기로 인해 전체 출산 예정 시간이 늦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막힌 도로가 부분적으로 풀릴 때 도착예정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출산 예정 시간도 빨라지거나 출산율이 높아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로 여성의 출산 시기가 지연되면 합계출산율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며, 출산 시기가 당겨지면 합계출산율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되는데 이를 '템포효과(tempo effect)'라고 한다(Bongaarts & Feeney, 1998, 2000).

서구 국가에서는 1980-1990년대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역시 상승하였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20대 초중반에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미뤄지며 템포효과와 함께, 합계출산율 하락을 유발하였다. 이는 여성의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의 큰 변화 없이, 출산 시기만 지연된다는 점에서 '지연변천(postponement transi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Kohler et al., 2002). 유럽과 동아시아의 다수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했던 초저출산은 많은 경우 '지연변천' 탓으로 설명된다. 이를 토대로 일부는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이 완만해지면 합계출산율은 반등하리라 전망하기도 하였다(Frejka, 2011; Kohler et al., 2002; Neels & De Wachter, 2010; Sobotka, 2004; Sobotka, Skirbekk et al., 2011). 실제 다수의 국가에서 합계출산율 반등을 경험하였으며, 최대 17개국이었던 유럽의 초저출산 국가는 2022년 현재 5개국으로 감소한 상태다(Eurostat, 2024).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템포효과는 매년 측정되는 합계출산율을 크게 변화하게 만드는 반면, 실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완결 출산율(completed fertility)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

만, 템포효과가 출산 시기의 변화로 인해 단순한 합계출산율의 내리 오름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평균 출생아 수, 완결출산율의 감소에 기여한다. 또한 출산 시기의 지연이 한 세대 이상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의 반등 없이 그대로 실제 출산력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 사회처럼 2020년대에도 초저출산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지속된 출산 지연이 출산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Yoo & Sobotka, 2018).

합계출산율은 대표적인 기간 출산력 지표로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지표이지만, 여성의 출산 시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처럼 여성의 출산 시기가 빠르게 변화하거나 사회경제적 변화가 역동적인 곳에서는, 그 수준과 변화 추이를 해석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 3. 성평등주의와 젠더혁명 이론

성평등주의와 젠더혁명 이론은 출산율 변화 특히, 초저출산 현상의 등장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성역할 및 태도로 설명한다. 맥도날드(McDonald, 2000a, 2000b)는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기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성평등 수준을 교육과 법률 등 공적 영역의 제도적 측면과 기업이나 가정 등 사회 내 사적 영역의 실질적 측면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대학 진학, 상속 등 공적 영역 내 제도적 성평등을 이루었지만, 기업이나 가정 내 성역할이나 태도 등 사적 영역의 실제 성평등 수준이 그에 조응하지 못한 사회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고등교육을 받은 직장이 여성이 승진이나 업적평가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가사를 도맡아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은 전문직이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형태로 행동하려 할 수 있다.

성평등주의는 특히 한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초저출산을 경험한 사회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 내에서도 이탈리아와 독일 등 가족주의 전통과 가족 또는 가구 단위 제도와 정책이 있는 사회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 수준과 스웨덴 등 개인주의 전통과 제도, 정책이 있는 북유럽 사회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이 대비되곤 하였다.

성평등주의는 유럽 내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젠더혁명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젠더혁명 이론에 따르면,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첫 번째 단계에서 성평등 수준의 개선은 공적 및 사적 영역의 여러 분야에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 예컨대, 여성의 교육 수준 개선과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역할에 관한 갈등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율 하락, 가족해체와 불안정성 증가, 미혼과 미혼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속된 긴장과 갈등으로 법률과 제도는 물론 실질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며,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실제 가족 안정성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질적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면 현재의 초저출산 국가도 북유럽처럼 출산율의 반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는 매우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거나,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불안정성이 증가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가부장제 또는 가족주의 전통이 남아 있거나, 여성의 지위 향상에 비해 실제 성역할 태도의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은 사회일수록 초저출산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들은 남성이 가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정비된다면 북유럽 국가들처럼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Anderson & Kohler, 2015;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scheider et al., 2015).

성평등주의는 초저출산의 등장을 성평등의 발전 과정으로 설명하지만, 향후 출산율 변동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초저출산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암묵적으로 성평등 개선, 제도와 정책의 보완을 통해 매우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반면 젠더혁명 이론은 사회가 성평등을 지향하며 추가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족 안정성이 회복되며, 대체 수준 미만에서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젠더혁명 이론은 북유럽 국가의 높은 젠더 수준과 복지체제와 함께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받았다(Myrskylä et al., 2009;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scheider et al., 2015). 거시적 수준의 이론적 논의이지만, 젠더 관점을 적용하여 비교연구나 미시 분석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젠더혁명 이론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젠더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단기간 변동 폭이 크고 템포 왜곡의 가능성이 높은 합계출산율을 사용하였다. 젠더 수준에 따른 출산율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역동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간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호트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젠더 수준과 출산율의 이차함수 관계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국가 간 비교에 따른 횡단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같은 해 스웨덴

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젠더 및 출산율 수준을 비교하며 관계를 파악하고, 독일도 스웨덴의 젠더 수준 개선을 달성하면 스웨덴만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독일만큼 합계출산율이 낮았던 적이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반등’도 경험한 적이 없다.

또한 출산율 반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U자형 반등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 실제 관련 논의에서 제시된 근거자료는 실제 U자형 반등이라기보다 좌우가 바뀐 J형 반등에 가깝다. 이를 실제 35개국 자료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종단분석에서는 성평등과 출산율의 U자형 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Kolk 2019).

실제 완결출산율 등 코호트 지표를 활용할 경우, 동유럽을 제외하고, 유럽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의 장기적인 감소가 확인된다(Frejka et al., 2018; Zeman et al. 2018; Beaujouan et al., 2023). 다만, 북유럽 국가 등 젠더 혁명 이론에 따라 2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출산율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Frejka et al., 2018).

북유럽 특히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성평등 수준과 복지 체제, 그리고 비교적 높은 출산율 등으로 한국 사회에게 정책적 지향점이 되는 존재로 고려된다. 하지만, 최근 2010년 이후 노르딕 국가의 합계출산율도 분명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Hiilamo, 2019; Hellstrand et al. 2021; Hellstrand et al., 2022). 10년 이상의 꾸준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더 이상 북유럽 국가를 출산율과 가족정책의 모범사례로 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제3장

### 불평등과 불안정성, 그리고 차별적 인구 행위

제1절 분기하는 흐름과 불평등

제2절 불확실성의 확대와 새로운 논의

제3절 한국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제4절 소결



## 제 3 장

# 불평등과 불안정성, 그리고 차별적 인구 행위

### 제1절 분기하는 흐름과 불평등

선진국에서 이른 곳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2차 인구변천은 아이들이 주로 핵가족 하에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제2차 인구변천의 특징은 혼인과 출산의 지연, 동거, 이혼, 혼외출산의 증가, 여성 고용의 증가 등이다(Lesthaeghe, 1995; Lesthaeghe & Surkyn, 1988). 제2차 인구변천을 이끄는 사회변화는 한 사회의 여성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경로로 안내하고 있다.

‘분기하는 미래(diverging destinies)’란 용어는 맥라나한(McLanahan, 2004)이 소개한 개념으로, 자녀의 자원과 관련된 가족 행위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아이들의 삶에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을 일컫는다(Raymo et al., 2023, p.442).

혼외출산, 이혼, 청소년 출산, 원치 않은 출산 등을 포함한 행위는 점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수준에 집중되는 반면,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산하거나, 안정적 고용, 안정적 결혼, 자녀 양육의 아빠 참여 등의 행위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수준에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여기서 언급되는 많은 행위는 제2차 인구변천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된다(Lesthaeghe, 2010). 결과적으로 제2차 인구변천의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의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자원의 상대적 감소,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자원의 상대적 증가(McLanahan & Jacobsen, 2015)로 나

타난다. 부모의 시간, 돈, 다른 자원들이 자녀의 결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가족 행위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된다(McLanahan, 2004).

제2차 인구변천은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사회 상층 여성의 자녀들이 상당한 자원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그들의 어머니는 좀 더 성숙하고 고소득 직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녀들은 안정적인 관계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아버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여성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자원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들의 어머니는 저소득 직장에서 일하며 불안정한 관계에 있거나, 많은 경우 생부로부터의 지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적으로 상층 여성은 보다 좋은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의 여성은 더 뒤처지게 된다. 분기된 미래는 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을 토대로 시간과 소득 관련 지표로 측정한다(McLanahan, 2004; McLanahan & Jacobsen, 2015). 교육 수준별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중위연령, 경제활동 참여, 혼인 안정성, 자녀와 함께 보내는 아버지의 시간 등을 고려한다.

예컨대,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을 살펴보면, 교육 수준 상위 1 사분위 여성의 중위연령은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교육 수준별 경제활동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른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고려하면, 자녀의 경제적 자원의 차이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한 부모 여성의 비율은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다(Goldstein & Kenney, 2001).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이혼율이 모두 증가한 1960-1970년대와 달리 1980년대 이후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의 이혼율만 하락하였다(Martin, n.d.).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 교육을 받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자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Bianchi 2000).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부모의 시간과 소득으로 측정한 자녀의 자원 불평등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혼인 시장의 동질혼 경향을 고려하면 불평등은 더욱 가중된다. 이는 여성의 교육 수준별 가구 중위 소득과 빈곤율에서도 확인된다.

자녀의 자원 관점에서 바라본 양극화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등 다른 서구 국가에서도 확인된다(McLanahan, 2004, pp. 615-616).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대체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연령, 고용률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지만, 한 부모 비율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다른 서구 국가의 불평등은 미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고소득 집단에 집중될수록, 사회 하층의 커플들은 결혼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경향은 보편적인 사회 제도의 혜택과 크게 관련이 없을지 모른다. 결혼이 행위와 생활 수준에 관한 정체성과 연계되는지 또 결혼에서 얻는 심리적 이익이 이 같은 이상에 얼마나 조화로울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Akerlof & Kranton, 2000).

특히 한 부모 가정이 저소득 집단의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은 해당 가구의 자녀들이 자원을 더 빠르게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 부모 가정의 여성이 빈곤, 우울증, 약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좀 더 노출되어 있다(Rainwater & Smeeding, 2003; McLanahan, 2004).

분기하는 미래에 대한 논의는 최근 동아시아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Raymo et al., 2023). 이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 내 뿌리 깊은 성불평등, 자녀 성공을 위한 보편적인 강조, 그리고 저학력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동아시아 사회의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aymo et al., 2023, p.445).

구체적인 요인에 따라 '분기하는 미래'의 정도와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혼외 출산과 십대 출산의 경우는 드물었으며, 초산 전후의 광범위한 노동력 이탈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과 자녀 성공에 대한 보편적인 투자와 지지가 사회적 차이를 완화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혼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여성들은 빈곤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더하여,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이 결합한 결과로 여겨진다 (Raymo et al., 2023, p.456).

## 제2절 불확실성의 확대와 새로운 논의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이 보편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Giddens, 1991). 경제위기, 정치적 혼란과 갈등, 전염병의 확산,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개인의 삶과 생애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개인의 교육, 취업, 결혼, 출산 등 주요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지연시키기도 한다. 다만, 역사적인 사건과 그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은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며, 그에 따른 인구학적 반응 역시 구별될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 경험되는 불확실성은 측정될 수 있다. 외부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동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데, 사람들은 대개 출산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예컨대, 경제공황과 세계화, 경제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동요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형태로 출산율 하락을 가속한다(Caldwell 2004). 경제적 측면의 요인이 아니더라도, 불확실성은 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는 HIV/AIDS 유병률이 높은 청년들이 자신의 감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출산 시기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Trinitapoli & Yeatman, 2011).

한편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 하층이나 저소득 집단의 여성에게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주요 수단이 될 수도 있다(Edin & Kefalas, 2005; Friedman et al., 1994). 이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큰 사회에서 저소득 계층의 여성에게 대안적인 생애 경로가 많지 않다고 가정하자.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과 정체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소득 계층 여성들의 혼외출산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에 관해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예컨대, 혼인과 출산에 대한 그들의 선호나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며, 다만 파트너가 안정된 직업과 소득을 가지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결혼할 만한 좋은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일 수 있다(Cherlin et al., 2008).

## 1. 경제위기와 불안정성

전통적으로 경제적 조건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은 혼인과 출산의 연기와 포기 또는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Hajnal 1965, p.133).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 자녀의 양보다는 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소득 수준의 향상이 자녀의 양과 질의 교환을 초래하여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설명한다(Becker, 1960). 다른 학자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출산 결정에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Easterlin, 1976).

경제적 불안정성은 실업, 시간제 근로, 계약직, 또는 노동시장 진입 장벽 등으로 특징짓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과 연관된다(예, Mills & Blossfeld 2003; Blossfeld et al. 2008). 뿐만 아니라 집합 수준에서 경기침체 동안 여러 사람이 느끼는 일반적인 불확실성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Sobotka, Zeman et al., 2011).

거시경제적 조건과 출산력 사이에는 경기 순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tz & Ward, 1979). 하지만 거시적인 인구변동 추세에 비해 2008-2009년 경제위기 같은 경기침체는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대개 기대보다 작거나 단기적인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Lesthaeghe, 2010). 공교롭게도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이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중되는 형태로 나타났다(Sobotka, Skirbekk et al., 2011).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 상황과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Kreyenfeld, et al., 2012).

대공황이나 경기침체 시기에 발생하는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주로 출산의 연기 때문으로 인한 합계출산율 하락이다. 하지만 출산의 연기가 길어질 경우,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출생한 아이들(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처럼 예외적으로 작은 출생 코호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Elder, 1999). 즉, 단기적으로 출산력과 관련된 경기침체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완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출산력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실업이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는 출산을 지연시킨다. 유럽 12개국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실업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둘째아 출산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dserà, 2011). 또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누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2004-2007년 이탈리아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직업 모두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남성 배우자의 높고 안정적인 소득이 출산의 결정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Vignoli et al., 2012).

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말 경제위기 당시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발생한 출산율 하락은 당시 노동시장 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Comolli, 2017). 하지만, 같은 연구에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소비자 신뢰(consumer confidence), 국가채무위험(sovereign debt risk) 등 불확실성 관련 지표들이 함께 분석되었는데, 이 같은 거시 수준의 불확실성 지표들의 상승이 출산율 감소와 연관된 것을 확인하였다(Comolli, 2017).

한편, 노르딕 국가들은 경제위기 이후 201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는데, 2008-2009년 경험한 경제위기가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Comolli et al. 2021). 이 연구는 경제위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경로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미래 기대소득 수준이 감소하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위험을 회피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는 배우자 및 혼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Mills & Blossfeld, 2003), 이는 이혼, 별거 등 가족해체를 통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Fishback et al., 2007; Jalovaara & Fasang, 2017; Miettinen & Jalovaara, 2020).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인지되는 경우, 개인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wait-and-see)’ 혼인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Vignoli, Guetto et al., 2020). 마지막으로 복지 제도도 중요한데, 경제위기 동안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출산율 변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Comolli et al., 2021).

## 2.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서사

불확실성의 확산과 출산율의 연관성에 관해 최근 “미래에 대한 서사(narratives of the future)”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Vignoli, Bazzani et al. 2020).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인이 미래에 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따라 혼인과 출산 등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생한 일부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과 서사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노르웨이에서 팬데믹 초기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노르웨이 정부가 시행한 보상과 지원 정책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Ursin et al., 2020). 복지제도와 지원을 통해 사람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출산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Vignoli, Bazzani et al., 2020).

팬데믹 기간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전염병의 확산과 사회적 혼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과 부작용, 경제적 불안정 등 불확실성의 확산과 지속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불안정성의 확산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일 경우, 출산 계획이나 의도는 미뤄지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연스레 출산을 감소로 이어진다(Guetto et al., 202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였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였다. 노르웨이 정부의 효과적인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로 인해 미래에 관해 긍정적인 서사를 형성했기 때문에 여겨진다(Price et al., 2021).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팬데믹 이전부터 오래 지속되고 있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팬데믹 기간 경험한 출산율 증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른다(Comolli et al., 2021).

핀란드에서는 201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한 연구는 이에 관해 많은 청년이 자녀를 가지기 전에 이른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ernhardt & Bergnerh, 201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결국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증가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핀란드의 청년층은 부모가 되는 것에 많은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핀란드에서 출산율이 감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이 부모가 되는 것을 상당한 부담과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Rotkirch, 2020).

팬데믹은 고소득 국가에서 출산율을 추가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서사로 출산율 상승이 관찰될 수도 있다. 예컨대, 죽음의 존재는 가족과 혈연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돕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Berg et al., 2020). 또한 팬데믹 이후 일부에서 관찰되는 종교성의 증가는 사실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hilipov & Berghammer, 2007). 대만에서 자녀가 한 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는 개인주의와 위험사회, 미완의 젠더혁명이 추가 자녀 포기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Freeman et al., 2018).

새로운 미디어 환경 역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핀란드에서는 자녀가 없는 미혼 청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불확실성과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avelieva et al., 2023). 특히 부모가 되는 것이 '희생'과 연계되고 비유되지만, 무자녀로 남는 것은 더 많은 수면, 섹스, 커리어 등 삶의 긍정적인 측면과 연계된다(Rotkirch, 2020). 1인 미디어와 SNS를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특정 가치관과 태도, 이미지 등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불안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빠르게 전파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찾기가 쉽지 않다.

많은 여성이 교육, 커리어, 라이프스타일, 관계 등을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일부는 난임 시술이나 난자동결 등을 택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위험 등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Daniluk, 2015; Lemoine & Ravitsky, 2015). 절대다수의 부모는 자녀를 갖는 것을 매우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여기지만, 이러한 경험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해지기 어렵다.

요컨대, 현대사회에서 출산력 하락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불확실성과 라이프스타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서사가 출산율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Vignoli, Bazzani et al. 2020). 반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서사는 출산을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성 제공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모가 되는 것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등 미래에 대한 서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적 개입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Vignoli, Bazzani et al., 2020).

## 제3절 한국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 1. 한국 사회의 불평등

우리 사회는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따라서 사회 불평등과 그 변화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전개되었다.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스스로 중층 또는 상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수의 사람이 부모보다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성취하는 세대 간 상승이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 갈등과 경제적 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으며, 계급 갈등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감소해 왔다(Kim, 2023).

불평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소득 불평등을 중심으로 그 추이와 측정 방법에 관한 논의가 많은 편이다. 학자 간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21세기 이후 불평등이 감소세에 있다는 의견이 있다. 신광영(2009)은 2000년 초반까지 소득 불평등이 상승하였고, 이는 세대 간 격차보다는 세대 내 격차의 확대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철승(2019a; 2019b)은 21세기 세대 간 불평등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9년 이후 많이 증가하였으며 세대 간 불평등이 전체 소득 불평등의 3분의 1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세대 간 불평등은 소득의 차이와 인구분포 변화의 합으로 구성된다(Cowell, 2011). 인구의 연령 분포가 빠르게 변화하면 세대 간 소득격차가 감소하더라도 세대 간 불평등은 증가할 수 있다. 설사 인구분포 변화가 급격하지 않더라도, 연령구조와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대 불평등의 변화를 과소, 과대 추정하는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출생 코호트별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세대 간 소득격차와 인구분포 변화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Kim, 2023).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가구의 혼인상태와 세대 구성 등 가구원의 수와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청년층의 미혼·비혼 증가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은퇴한 독거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김대일, 2015). 특히 노인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 구성 효과가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성명재, 박기백, 2009; 윤종인, 2018). 가구 구성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고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세대 불평등을 측정하면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김창환, 김태호, 2020)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세대 간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이는 연령의 분포효과에 따른 착시이며, 분석 대상을 25-59세 핵심 노동인구로 대상을 제한하면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불평등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한국 사회 21세기 노동시장 소득 불평등의 변화는 초기 몇 년간의 세대 내 불평등 증가와 대비되는, 세대 내 불평등의 전반적인 감소에 의한 것이다. 한국 사회 불평등 추세는 세대 내 불평등에 의해 결정되

며 모든 연령층에서 세대 내 불평등이 감소했다(신광영, 2009; 김창환, 김태호, 2020).

## 2. 청년 세대의 불평등과 불평등의 인식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하며, 인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2020년 서울에 사는 20-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최광은, 박민진, 2021), 우리 사회 자산 불평등에 대한 5점 리커트형 척도 변인(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심각하다, 5: 매우 심각하다)의 평균은 4.48점으로서 불평등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고, 주거, 소득, 고용 불평등도 각각 4.28점, 4.24점, 4.02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광은, 박민진, 2021). 또한 이들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는지(더욱 심각해졌는지)에 대한 5점 리커트형 척도 변인(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평균 역시 4.29점으로 우리나라의 불평등 심화에 대하여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 같은 불평등 인식은 실제 불평등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보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88만 원 세대와 삼포 세대, 우리 사회의 청년은 매번 부정적이고 어려운 세대의 이미지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청년층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식의 수사가 이어진다. 최소한 최근 청년세대가 상대적 박탈감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것처럼 최근 연구들은 세대 간 불평등이 증가했다

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김창환, 김태호, 2020). 세대 간 불평등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고령인구 증가 탓으로 인한 오해일 뿐이다.

청년들이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청년층 내에서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전개된다(이희정, 2022). 사회적 계층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소득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김영미 2016; 황선재, 계봉오, 2018). 청년들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계층화되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또한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이나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낮을수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며, 그 결과로 소득 분배율의 정당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이희정, 2022).

### 3. 불평등과 출산율의 새로운 전개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혼인과 출산 행위가 계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2015-2019 청년패널을 분석한 황광훈(2021)은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저임금 근로 상태를 유지하거나 실업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임금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 하층 청년이 경험하는 고용과 소득 측면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행위의 계층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사회 계층별 혼인과 출산의 수준과 시기가 과거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 수준별 초혼 이행에서 남성의 경우 30세 전에 저학력자가 더 빨리 결혼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학력자가 더 많이 결혼하여 따라잡거나 역전되어 최종적으로 교육과 혼인의 정적 관계가 관찰되곤 하였다(우해봉, 2009; 오지혜, 임정재, 2016; Yoo, 2016). 반면 여성은 고연령에서 고학력 집단의 따라잡기가 관찰되지만, 여전히 교육과 혼인의 부적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행된 한 연구(함선유 외, 2023)에 따르면,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혼인과 출산 이행이 높아지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혼인과 출산에 대한 교육의 정적인 효과 남녀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여성의 교육이 고용 지위를 통해 혼인과 출산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여성이 혼인과 출산을 경험하며 일종의 패널티를 경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함선유 외, 2023).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최선영 외, 2022) 역시 중하위 계층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지연하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그 이유가 성별에 따라 다른데, 중하위 계층 남성은 '부양자'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결혼 시기를 늦추는 반면, 여성은 가족이라는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혼비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출산을 역시 교육이나 소득 등 계층에 따라 구별된다. 예컨대, 2010-2019년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출산율을 분석한 연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출산율 하락이 더욱 컸다고 밝히고 있다(유진성, 2022). 마찬가지로 출산율 하락이 사회 하층에서 발생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혼인 및 출산의 부적 관계의 변화 조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여 혼인이나 출산 시기를 분석한 형태가 아니라면, 개인의 교육이나 소득과 혼인 및 출산의 관계는 연령별 누적 비율이나 코호트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혼인-기간 기반 지표로 측정된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교육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계봉오 외, 2022). 이 지표는 혼인이나 출산 시기의 변화에 따른 템포효과를 배제하면서 교육 수준별 출산율 수준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사실 해외에서도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는 역동적인 사례가 더러 있다. 예컨대, 국제 비교 연구(Skirbekk, 2023)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초산 연령이 높아지지만, 둘째 또는 셋째 출산율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경우 급격한 고등교육 확대를 경험했던 여성 코호트 이후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전통적인 부적 관계가 비선형적 관계로 전환되기도 하였다(Yoo, 2014). 코호트 관점의 최근 연구 역시 여성의 교육 수준과 무자녀 비율 사이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Hwang, 2023). 구체적으로 고졸 미만 집단의 무자녀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자들의 무자녀 비율이 가장 낮으며 대학원 이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대졸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양극단에 있는 여성들의 미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유배우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과 출산 사이의 부적 관계가 주로 결혼으로의 이행의 차이로 형성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의 배경도 혼인과 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교육, 취업, 혼인으로의 이행에서 부모의 배경과 자원의 중요성이 확인된다(김영미, 2016). 경험연구를 통해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결혼 가능성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배우자와 결혼할 가능성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고 있다(권오재, 2017; Oh et al., 2020; 오지혜, 2020).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모의 자산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계층에 따른 차별적 인구 행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혼인 및 출산에 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 외 상대적 박탈감과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서사 등의 영향에 관한 논의는 관찰되지 않는다. 출산력의 집단 간 차이와 그 변화를 설명하는 바탕이 여전히 구조적 요인에 집중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의 변화가 계층 등 사회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혁신적인 형태로 발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사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차별 출산력을 관찰할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의 분기하는 흐름, 또는 유럽 중심의 젠더혁명에 따른 출산율 변동은 사실 여성의 교육과 출산의 관계가 전환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과거 분명했던 여성의 교육과 출산의 부적 관계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장기적인 인구변동의 이행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혼인과 출산 행위는 과거에 비해 계층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계층화된 인구학적 행위의 원인은 객관적 수준의 불평등 심화라기 보다는 청년세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점은 교육이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혼인 및 출산 등 인구 행위의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중하층 남녀의 혼인과 출산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다(최선영 외, 2022; 함선유 외, 2023).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출산의 관계는 그 부적 관계가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있다(Yoo, 2014; Hwang, 2023). 결과적으로 청년 남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혼인

과 출산이 갖는 전통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반면, 청년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부적 상관관계가 사라지거나 정적 상관관계가 새로이 관찰되는 양상을 보인다.

## 제4절 소결

사회계층과 불평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의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부적 관계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Skirbekk, & Samir, 2012).

하지만,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인구변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의 전통적인 관계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젠더혁명 이론은 사회의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단순한 선형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단계의 구분에 따라 가변적이다(Esping-Anderson & Billari, 2015).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알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 지속해 발전하면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정적 관계에서 부적 관계로 전환된다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 ‘분기하는 미래(diverging destinies)’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족구조와 자원 분배가 달라지면서, 자녀의 삶에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상을 말한다(McLanahan, 2004). 고학력 여성은 고소득의 직장을 갖고 안정적인 결혼을 유지하는 반면, 사회 하층 여성은 낮은 교육 수준과 불안정한 고용 속에 가족해체를 겪으며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자녀 세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게 된다. 이 같은 설명 역시 사회계층에 따라 혼인과 출산 등 생애과정이 양극화되거나, 둘의 관계가 가변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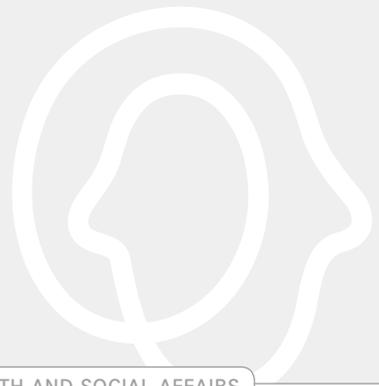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불확실성은 경제적 불안정성, 정치적 혼란, 글로벌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출산 등 인구 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Giddens, 1991).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확산은 사람들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크고 작은 삶의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는 청년세대의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Vignoli, Bazzani et al. 2020).

한국의 청년층이 인식하는 불평등은 실제 불평등의 증가보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혼인과 출산 같은 인구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광은, 박민진, 2021).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이 더욱 계층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소득층에서 출산율 하락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광훈, 2021; 유진성, 2022).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차이를 넘어,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심리적 요인과 깊이 연관된다(Kim, 2023). 청년층이 인식하는 불평등은 혼인, 출산 등 그들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회계층과 구조적 요인에 따라 불평등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혼인과 출산을 포함한 개인 행위 역시 차별적인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 수준과 불평등에 관한 청년층의 인식이 실제 혼인과 출산 등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적 개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득 계층 간 출산율 차이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출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할지 모른다(Comolli et al., 2021).

불평등과 불평등에 관한 인식, 불확실성은 혼인과 출산 등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혼인과 출산 등 인구 행위의 계층화 수준과 변화, 불평등과 양극화가 어떻게 인구변동과 연계되는지, 그리고 청년층이 인지하는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어떻게 출산율과 연관되는지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평등 수준이 높고 우수한 복지 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노르딕 국가의 출산율 감소 경험과 그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안정성의 확산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를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추가로 하락한 이유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4장

### 불안정성의 기제와 특성 탐색: 최근 세대 간,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가치관

제1절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 최근 추세

제2절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황

제3절 세대 내 불평등과 미혼자의 결혼·출산 특성 분석

제4절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  
특성

제5절 소결



## 제 4 장

# 불안정성의 기제와 특성 탐색: 최근 세대 간,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격차가 커진다는 논의는 이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대 사이에서의 갈등도 엿보인다. 좋은 때를 타고 태어난 세대가 누구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실제로 불평등과 양극화, 격차의 심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심해졌다는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고 시기별로 다르다는 결론도 있다. 세대 내·세대 간의 불평등 역시 그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실재하는지, 있다면 심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세대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심지어 양극화되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출산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삶을 둘러싼 많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은 결국 세대 내 불평등을 불러온다. 자산의 (사적)이전이 조부모에서 손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은 서로 얽히며 점점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세대 내 불평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정형화된 특성으로 관측되는 세대 내·세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토, 진단한다. 추가로, 세대 간, 세대

내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불안정성의 기제임과 동시에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특성과 맞물려 있을 개연성을 동시에 진단한다. 종합적으로 본 장의 주요 관측 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향후 저출산 현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제1절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 최근 추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주된 논의 중 하나는 세대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이 사회변동이 주된 원인이 아니며, 세대 간 불평등이 한국사회의 전반적 불평등 변동을 크게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세대 간 불평등이 한국사회의 주된 불평등의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 특성과 저출산 간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약 5-10년간 나타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양상이 이 기간 다른 기간과는 다른 세대 간 불평등 특성과 맞물려 있을 개연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대 간 소득 불평등의 특성은 간단한 집단 간 특성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각각의 출생코호트별 동일 시기에서의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20-39세라는 동일 집단에 대하여 시기를 달리하였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관측되는 집계적 특성이 상이함을 살펴보는 것이다. 20-39세라는 젊은 층에 대하여 2001년에는 1962-1981년 출생코호트로 구분되고, 2023년에는 1985-2003년 출생코호트로 구분된다. 이들은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가

혼재되어 구분되는 특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사회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코호트효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기 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의 20-39세는 전체 인구의 약 35.87%이며, 2023년의 20-39세는 25.14%로 나타나고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보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43.49% > 28.45%). 특히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해당 코호트의 비중은 2001년 49.82%임에 반해 2023년 32.43%이며, 임금근로자 중 비율은 전자가 62.76%이지만, 후자는 39.8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하여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용이하지 못한 정책 환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월임금총액의 경우에도 전자는 전체 근로자 월임금총액 평균 대비 약 90.08% 수준임에 반해, 후자는 85.3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도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1-2023년 간 전체 전체 근로자 월임금총액 평균 대비 20-39세의 평균 월임금총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01년에 비해서 낮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 4-1〉 출생코호트별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집계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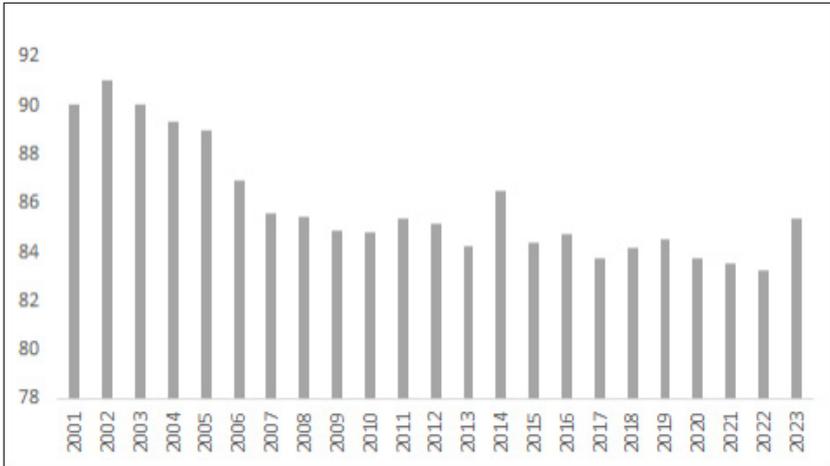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39세	
	2001년 (1962-1981년 출생코호트)	2023년 (1985-2003년 출생코호트)
전체 인구 중	35.87	25.14
15세 이상 인구 중	43.49	28.45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49.82	32.43
근로자 중	62.76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용이)	39.84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움, 고령자들도 계속 근로)
월임금총액 중	전체 근로자 소득 평균 대비 90.08(대부분 양질의 일자리에 있음)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 평균 대비 85.37 (근로자도 적고 될 좋은 일자리에 있음)

출처: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데이터파일], 통계청, 2024a, 국가통계포털, 2024. 9. 1.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데이터파일], 통계청, 2024b, 국가통계포털, 2024. 9. 1.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 “학력,연령계층,임금계층(총액),성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데이터파일], 통계청, 2024c, 국가통계포털, 2024. 9. 1.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11&conn_path=I3); “근로자의 평균임금(성/사업체규모/연령별)” [데이터파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24. 9. 1. 인출.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TD1171&conn\\_path=I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TD1171&conn_path=I3).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 전체 전체 근로자 월임금총액 평균 대비 20-39세의 평균 월임금총액 비중 (2001-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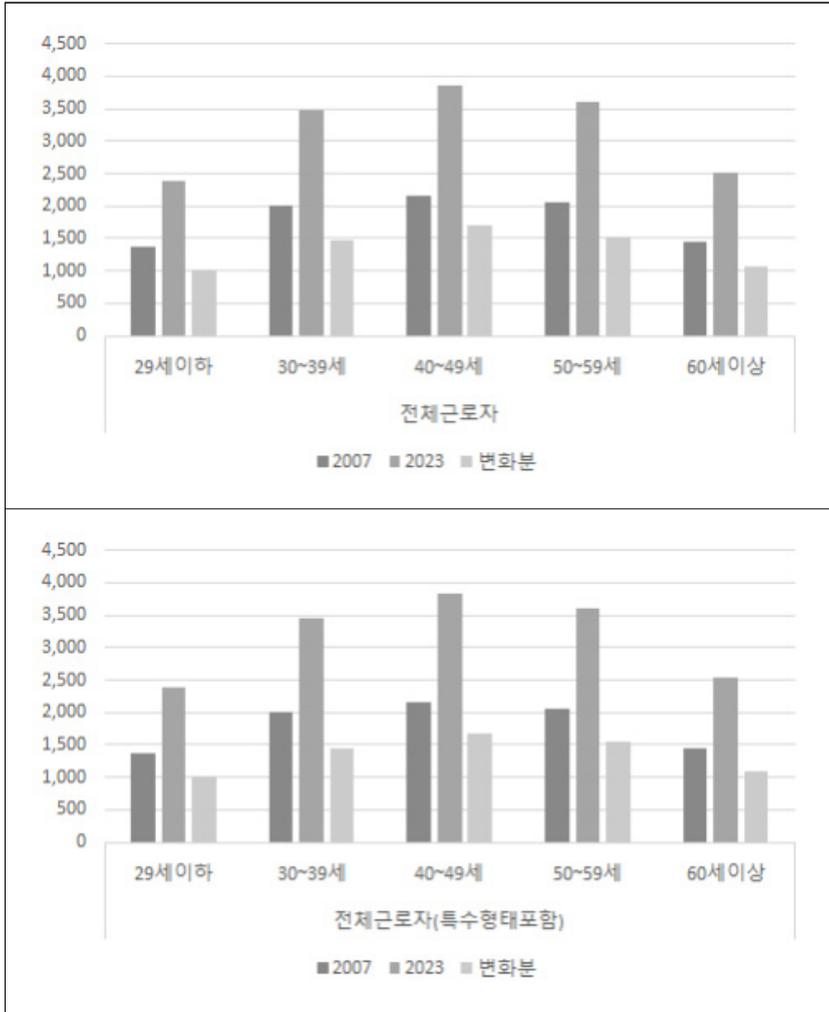
출처: “근로자의 평균임금(성/사업체규모/연령별)” [데이터파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24. 9. 1. 인출.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TD1171&conn\\_path=1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TD1171&conn_path=13).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세대 간, 세대 내 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연령대별 평균임금 수준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근로자의 월급여액 평균은 상대적으로 40-50대 연령층이 29세 이하 및 30대 연령층에 비하여 2007-2023년 기간 간 다소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수형태의 고용을 포함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의 경우 29세 이하 연령층의 상승폭이 가장 큰 반면, 평균임금 수준은 가장 낮으며, 이는 60대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에 비하여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29세 이하 연령층은 절대적 임금 평균 수준이 가장 낮고, 증가폭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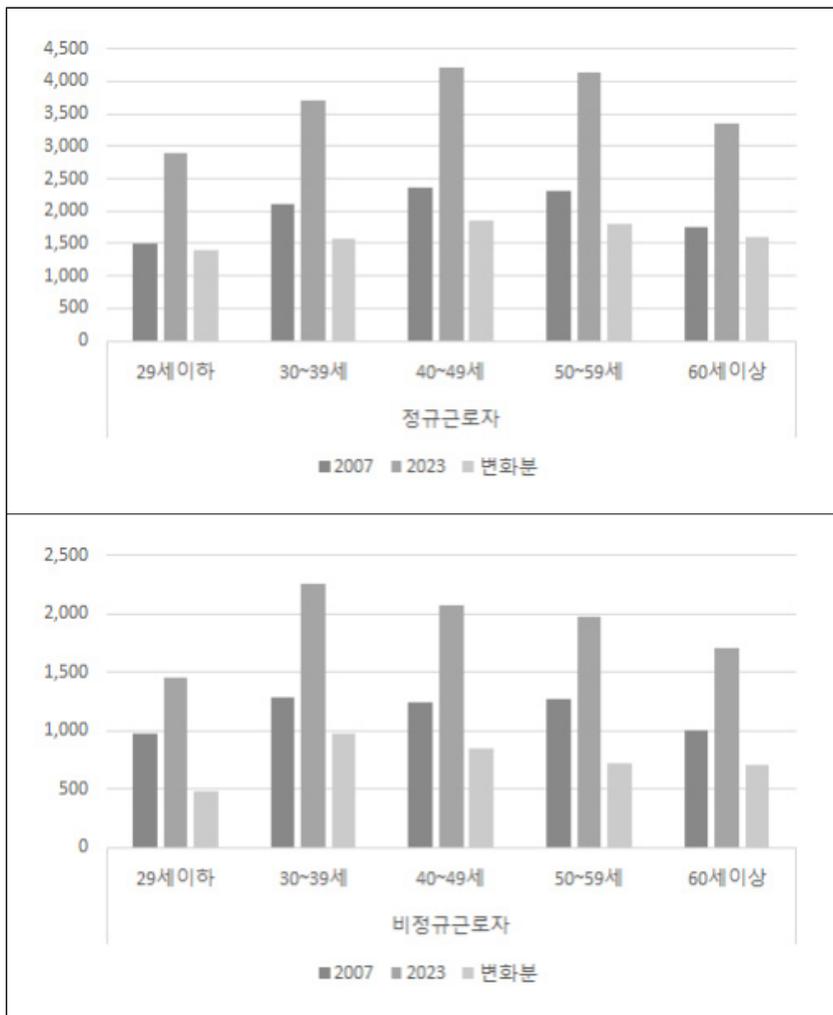
70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그림 4-2] 고용형태에 따른 연령대별 평균임금(2007-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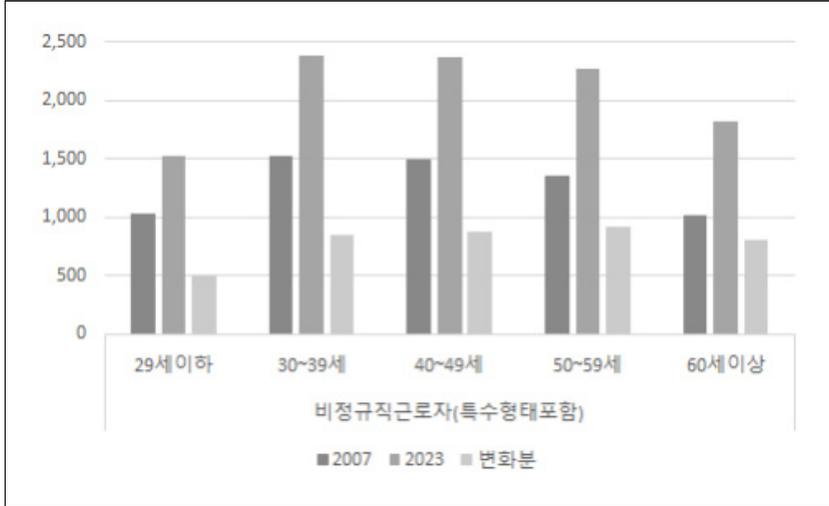
(단위: 천 원)



제4장 불안정성의 기제와 특성 탐색: 최근 세대 간,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71



72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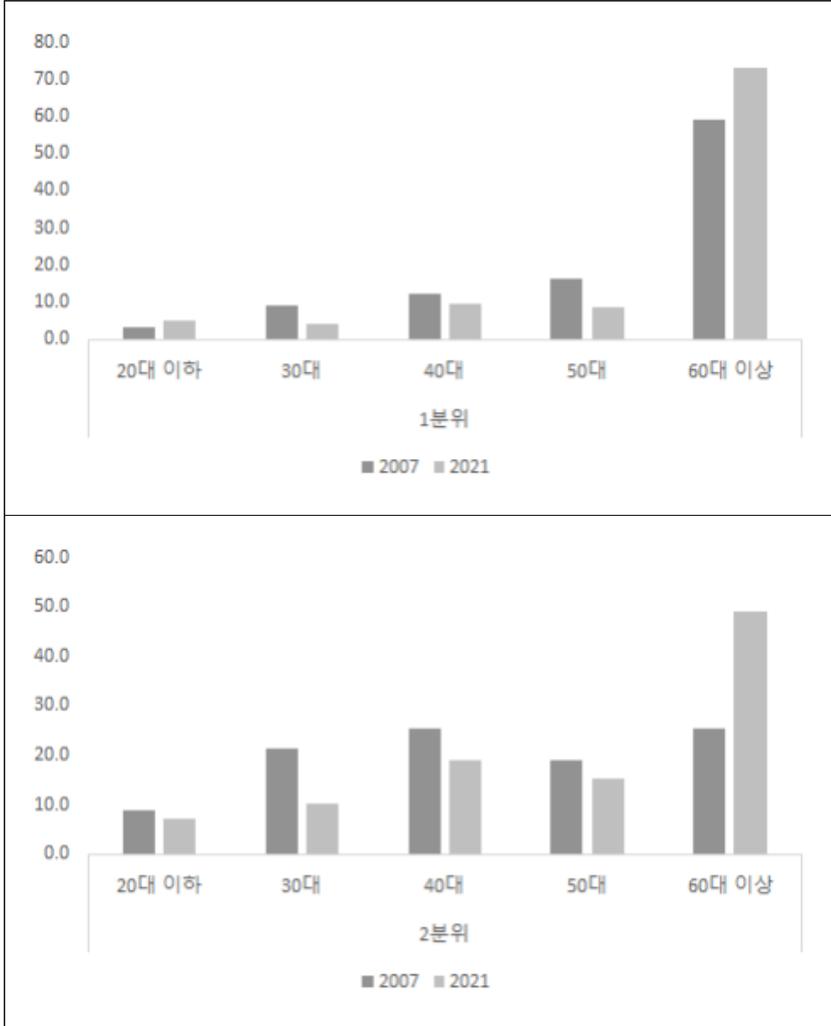


출처: “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데이터파일], 통계청, 2024d. 국가통계포털, 2024. 9. 1.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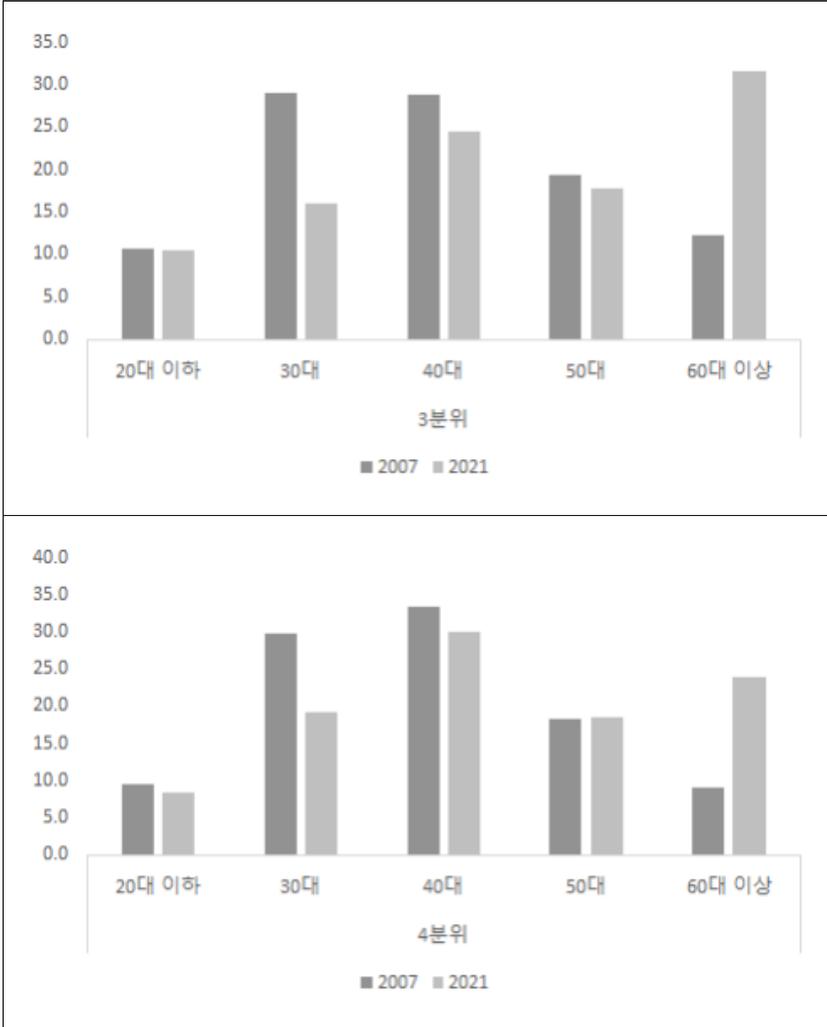
소득분위에 따른 가구주 연령대별 특성 역시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1분위는 전체 가구주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지만, 3, 4분위는 30-40대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1년의 특성은 5분위의 경우 20대 이하, 30, 40대가 감소하였고, 이 중 30대가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50대, 60대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분위에서의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증가폭이 가장 큰 동시에 소득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폭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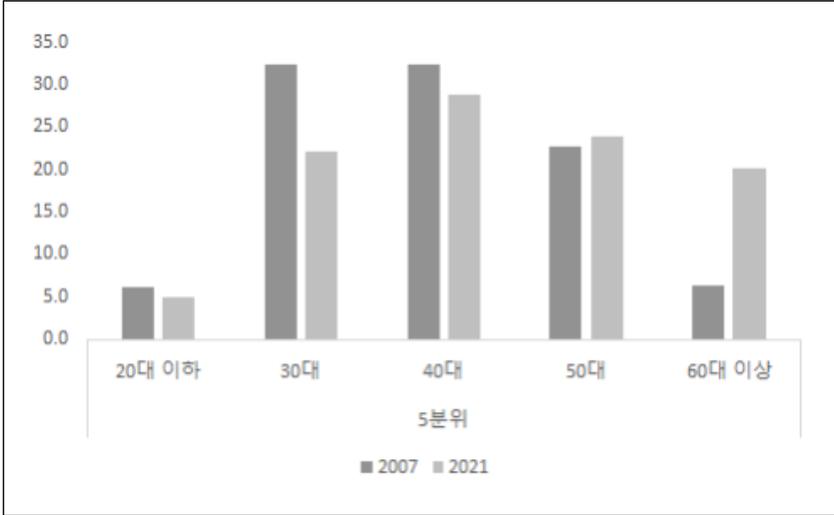
[그림 4-3] 소득분위(5분위)에 따른 가구주 연령대별 특성(2007, 2023년)

(단위: %)



74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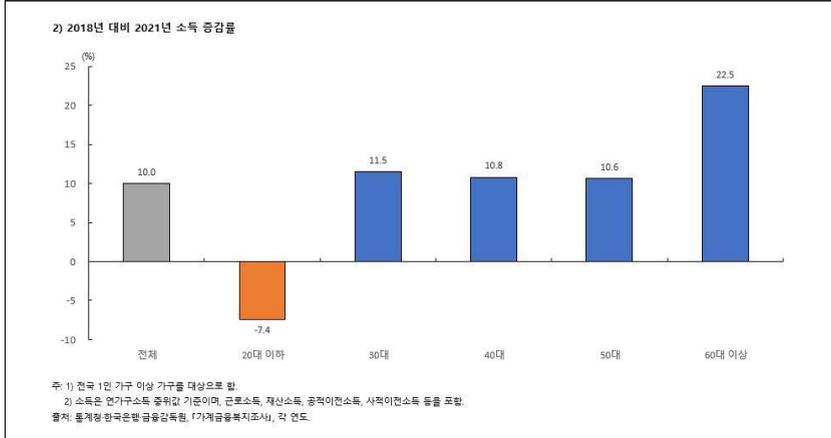
출처: “소득5분위별 가구주 특성” [데이터파일], 통계청, 2024e, 국가통계포털, 2024. 9. 1.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41&tblId=DT\\_34101\\_001&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41&tblId=DT_34101_001&conn_path=13)

추가로, 관련하여 특히, 유경원(2023)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이 코로나 19 전후 보다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심화의 배경 중 하나로 특히 상대적으로 20-30대 청년층의 취약한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이들의 주거 유형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자가보다는 전월세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들의 부채 증가가 이러한 주거 유형과 연관된 전월세 보증금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76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그림 4-4]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소득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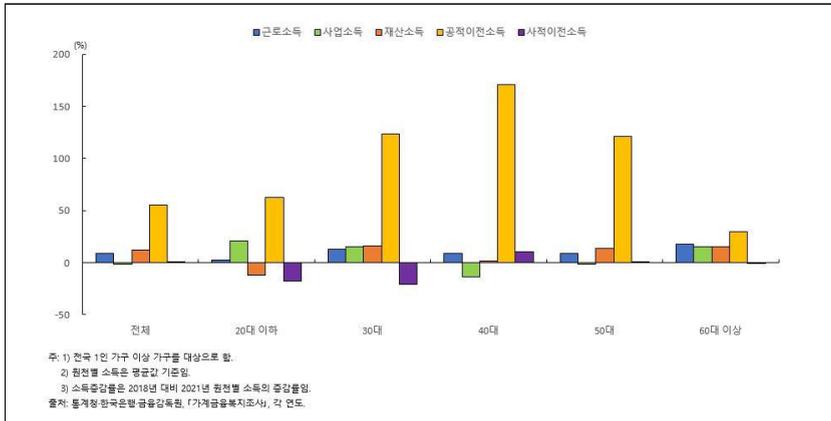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2023. 한국의 사회 동향 2023, 통계청, p.201

[그림 4-5]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소득 구성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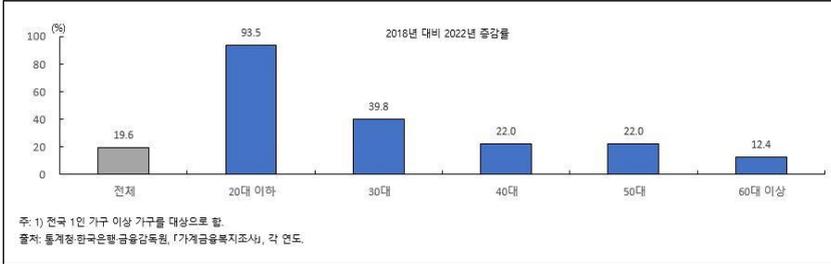


출처: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2023. 한국의 사회 동향 2023, 통계청, p.201

제4장 불안정성의 기제와 특성 탐색: 최근 세대 간,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77

[그림 4-6]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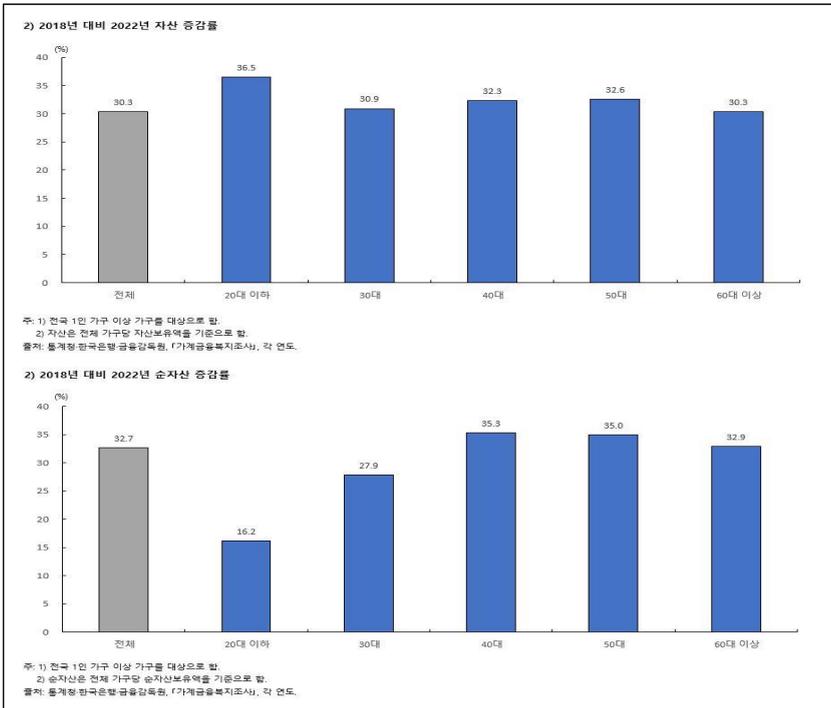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p.203

[그림 4-7]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자산, 순자산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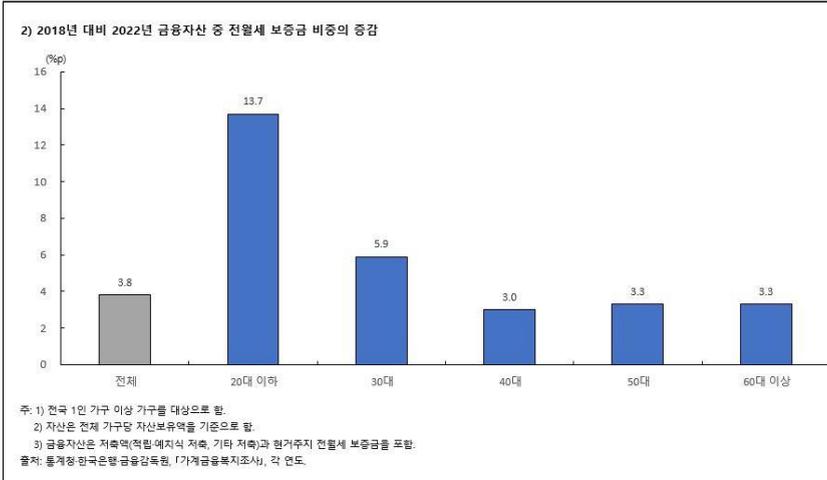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p.205, 207

[그림 4-8] 가구주 연령대별 2018년 대비 2021년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의 증감

(단위: %포인트)



출처: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p.207

상기 여러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형화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소득의 증가, 부동산 및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유형의 고착화, 주거 보증금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 등 순자산 증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변화폭을 보이는 것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의 사회경제적 불안 및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유경원, 2023), 결과적으로 이들의 출산 이행에 부정(-)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최근 젊은 세대들의 불안정성 형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들의 출산 이행에 부정 연관성을 미쳤을 개연성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러한 부정 연관성이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 소득 및 자산 불평등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세대 간 이전, 세대 간 불평등과 청년 세대의 출산 이행 간 연관성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황

이 절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말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선정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불평등을 둘러싼 논점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대상을 청년층으로 한정된 것은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논점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 1. 경제 지표로 보는 세대 내 불평등

#### 가. 소득과 근로조건

김유빈 외(2019)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분배지표 세 가지(10분위 분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를 분석하였다. 소득은 균등화 가치분소득을 이용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10분위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도 변동은 크게 없다. 지니계수 역시 0.30에서 0.33 사이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총소비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에도 지수별로 값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이 연구는 청년층의 상대적 소득빈곤과 지출빈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다른 가구원의 상황에 영

향을 많이 받아 순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김유빈 외, 2019, p.18) 실제 청년층의 소득 불평등이 분석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낮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출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빈곤층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김유빈 외, 2019, p.23) 취약한 청년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지점에 우려를 표하였다.

〈표 4-2〉 청년층 10분위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2009~2016)

연도	균등화소득			총소비		
	10분위배율	GE(2)	지니계수	10분위배율	GE(2)	지니계수
2009	4.39	0.26	0.33	2.95	0.11	0.24
2010	4.40	0.21	0.31	2.91	0.11	0.24
2011	4.06	0.19	0.31	2.83	0.11	0.24
2012	4.07	0.19	0.30	2.81	0.11	0.23
2013	3.99	0.24	0.31	2.82	0.10	0.23
2014	4.03	0.20	0.30	2.73	0.09	0.22
2015	3.80	0.20	0.30	2.70	0.09	0.22
2016	3.80	0.32	0.32	2.74	0.10	0.22

주: GE(2)는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를 말함.  
출처: “청년 삶의 질 연구(II) -빈곤, 여성, 지역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김유빈 외, 2019, 한국노동연구원, pp.17, 23. 〈표 2-8〉과 〈표 2-14〉.

김유빈 외(2019)의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기간 내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주미와 김태완(2022)의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존재한다 보았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1분위와 5분위 집단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전소득을 제외한 일차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만 고려해 보았을 때 5분위배율은 2011년 7.5배에서 2017년 8.0배까지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7.8배로 나타났다. 일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

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의 5분위배율은 2011년 6.6배에서 증감을 보이다 2019년 6.2배로 낮아졌다. 그러나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경상소득의 차이는 2011년 395.4만 원에서 2019년 558.1만 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 청년층(만 19-34세) 소득 수준(소득 1분위 대 소득 5분위)

(단위: 만 원/월)

연도	소득 1분위				소득 5분위			
	일차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경상소득	일차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경상소득
2011	61.1	4.0	5.8	70.9	459.6	1.3	5.5	466.3
2012	65.5	3.5	5.8	70.9	478.9	1.0	6.2	486.1
2013	69.2	3.3	6.5	79.1	503.2	1.0	6.8	511.0
2014	72.6	2.2	7.7	82.5	502.3	0.8	7.2	510.3
2015	73.6	2.9	8.6	85.0	512.1	0.8	8.3	521.2
2016	75.6	3.6	10.9	90.1	598.6	0.9	9.0	608.5
2017	79.2	4.2	11.8	95.2	631.3	1.1	9.0	641.3
2018	84.3	5.2	13.9	103.3	651.7	1.0	8.5	661.2
2019	83.9	4.6	19.4	107.8	653.9	1.5	10.6	665.9

주: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소득 분위, 개인 가중치 적용.

출처: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이주미와 김태완,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 저작권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크게 확대되는 일 없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표4-4〉와 [그림 4-9] 참조).

82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표 4-4〉 청년취업자의 임금 관련 지표(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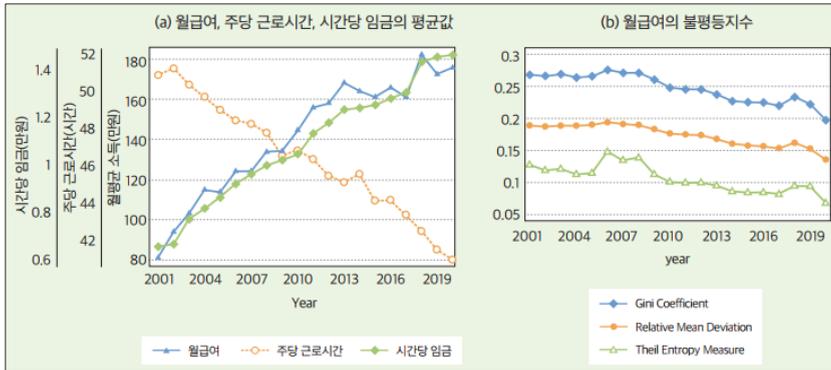
(단위: 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위임금	208.3	216.7	220.0	230.0	250.0
평균임금	228.3	235.8	241.5	244.7	256.3
10% 분위수	140.0	150.0	150.0	150.0	170.0
25% 분위수	170.0	180.0	180.0	185.0	220.0
75% 분위수	266.7	280.0	291.7	291.7	300.0
90% 분위수	333.3	350.0	354.2	350.0	358.3
P90/P10	2.38	2.33	2.36	2.33	2.11

주: P90/P10은 자료를 이용하여 저차 계산.  
출처: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특성 및 지속성 분석”, 황광훈, 2021, 한국고용정보원, p. p.116. 일부 발췌.

〔그림 4-9〕 청년층(25-39세)의 노동시장 결과물: 평균과 불평등지수

(단위: 만 원, 시간, 지수)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만 25-39세 표본 중에서 취업중이면서 월급여 소득 정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정함.  
출처: “청년 임금격차 추세 분석 및 정책함의,” 김문정, 2022, 재정포럼 2022.10(Vol.316),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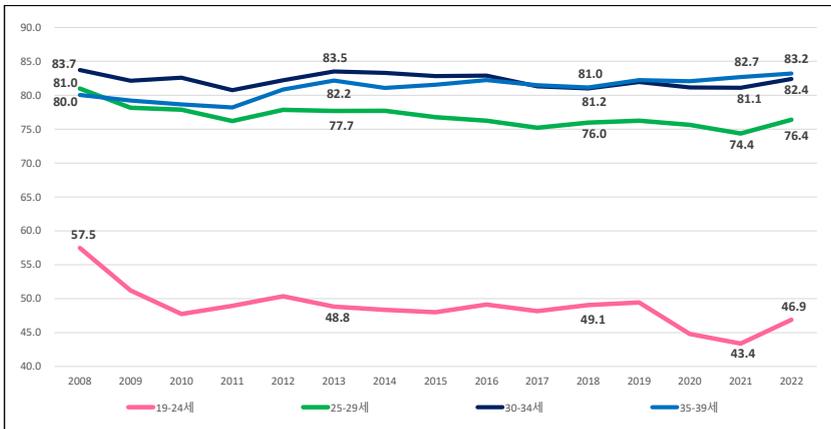
김문정(2022)은 청년층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일반적으로 흔히 할 수 있는 예상과는 달리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인식과 간극이 크기 때

문에 심층 분석을 추가하였다(김문정, 2022, p.24). 그러나 추가 분석에서도 양극화를 파악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추가 분석에서는 고등교육 임금에의 영향 메커니즘이 상위 분위의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반면 하위 분위의 임금은 크게 상승하여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낮아지게 된 주요 배경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김문정, 2022, p.25).

다음으로 근로조건 차원에서 정규직 비율과 불안정성을 파악해본다.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은 하위 연령대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19-24세와 25-29세 구간에서는 점차 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0] 청년층(만 19-39세)의 정규직 비율(2008-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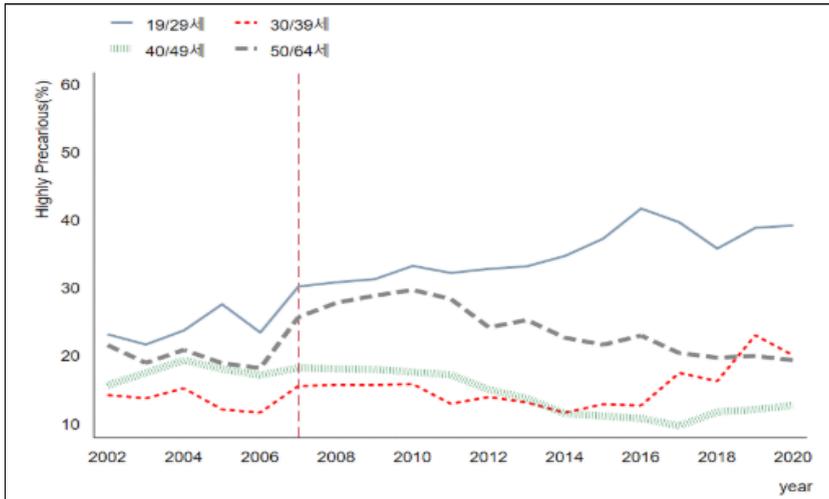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산함.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데이터파일], 통계청, 2008~2022,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이승윤과 백승호(2021)는 불안정성을 고용과 소득, 사회적 보호의 세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4개(매우 불안정, 불안정, 다소 불안정, 안정)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매우 불안정’한 집단의 분포를 [그림 4-11]을

통해 파악해 본다. 19-29세는 ‘매우 불안정’한 집단의 비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30대의 경우에도 2002년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불안정성이 낮은 연령대에서 더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1] 연령별 ‘매우 불안정’한 집단의 변화 경향

(단위: %)



주: 이승윤과 백승호(2021, p.578)는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세 항목 모두 불안정한 경우 “매우 불안정”, 셋 중 두 가지 항목이 불안정한 경우는 “불안정”, 한 가지만 불안정한 경우 “다소 불안정”, 세 항목에서 모두 안정한 경우는 “안정”한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출처: “청년세대 내 불안정성은 계층화되는가?: 청년 불안정노동의 유형과 세대 내 격차 결정요인”, 이승윤과 백승호, 2021, 한국노동연구원, p.582.

## 나. 자산과 주거

정부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청년층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청년부

채 증가 및 청년 세대 내 소득·자산 격차 심화(관계부처 합동, 2022, p.8) 되고 청년(20-30대)의 하위 20% 대비 상위 20% 자산 비율은 2017년 31.75배에서 2020년 35.2배로 확대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2, p.8) 고 말하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지점임을 확인하였다.

이주미와 김태완(2022)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득 격차에 비해 자산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자산 1분위와 자산 5분위의 총자산 금액이 2012년 11억 3669만 원, 2020년 14억 3865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는데, 차액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4-5〉 청년층(만 19-34세) 자산 수준(소득 1분위 대 소득 5분위)

(단위: 만 원)

연도	자산 1분위					자산 5분위				
	금융 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총자산	부채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총자산	부채
2012	2,324.9	224.4	384.7	2,934.0	884.9	23,321.0	86,176.3	7,105.7	116,603.0	21,645.6
2013	2,477.6	305.7	431.0	3,214.2	971.4	24,632.6	81,534.0	7,738.8	113,905.5	22,097.2
2014	2,760.2	311.9	469.3	3,541.3	1,007.3	24,532.8	81,045.9	8,145.3	111,724.0	21,990.1
2015	2,835.6	343.0	439.8	3,621.3	1,054.5	25,385.9	82,422.9	7,461.0	115,269.8	21,725.0
2016	2,891.6	366.3	497.6	3,755.5	1,080.6	26,317.3	87,514.3	6,723.8	120,555.4	22,907.8
2017	3,070.6	431.2	505.2	4,007.0	1,354.4	28,006.9	87,790.9	6,373.0	122,170.8	23,818.1
2018	3,261.6	533.6	540.7	4,335.8	1,398.0	31,211.9	98,965.6	6,235.1	136,412.6	25,758.2
2019	3,277.2	570.7	517.4	4,365.2	1,610.3	30,122.2	107,692.6	5,725.8	143,540.6	27,218.1
2020	3,415.6	510.6	526.2	4,452.4	1,664.3	29,648.1	113,406.2	5,262.6	148,316.9	28,182.7

주: 균등화하지 않은 총자산<sup>1)</sup> 기준 자산 분위, 개인 가중치 적용.

출처: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이주미와 김태완,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 저작권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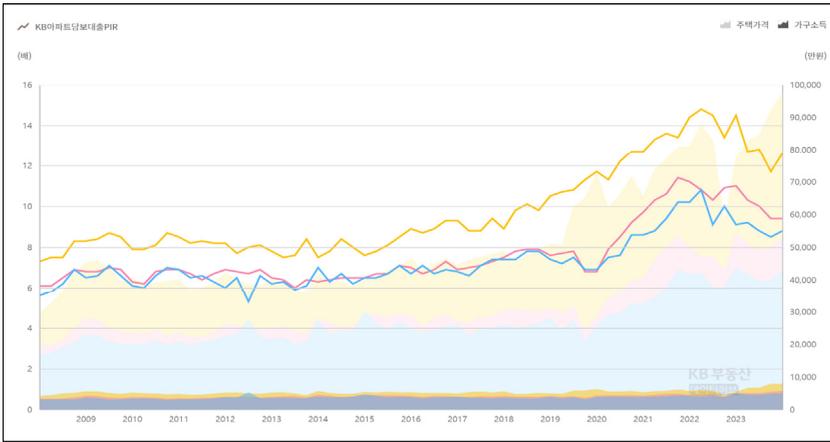
1) 일반 가계 자산 관련 연구에서 자산은 가구 내 공공재와 같은 개념으로, 한 가구원이 사용하는 자산이 다른 가구원의 자산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정을 하고 있어(권일, 김미애, 2021, p. 6), 이주미와 김태완(2022, p.14)의 연구에서도 자산은 균등화하지 않고 분석하였음.

이주미와 김태완(2022, p.14)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의 불평등이 청년의 자산 불평등으로 고스란히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주거의 측면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불안의 지점을 더 파악해 볼 수 있다.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소폭 증감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2] 참조).

[그림 4-12]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단위: 배, 만 원)



주: 1) 노란색은 서울, 붉은색은 경기도, 파란색은 인천을 나타냄.  
 2) 가구소득은 분기단위 해당 지역 내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이며 주택가격은 분기단위 해당 지역 내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실행 시 조사된 담보평가 가격의 중위값임.  
 출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KB부동산 데이터허브, 2024, <https://data.kblan.d.kr/kbstats/pir>. Copyright © Kookmin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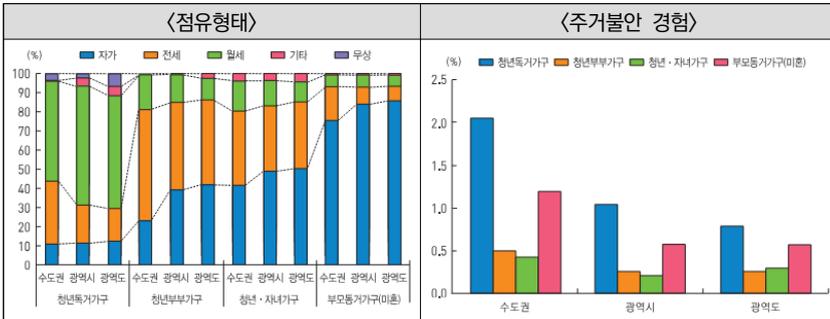
특히 서울(노란색 그래프)을 보면 2022년에 15배 가까이 치솟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구소득을 모두 저축하더라도 15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후에는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주거의 차원에서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의 주거는 가구 구성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있다. 청년 독거가구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가장 낮고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에는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 4-13] 좌측 참조). 주거불안 역시 청년 독거가구에서 가장 높았는데, 주거비용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특히 높게 나타났다([그림 4-13] 우측 참조).

[그림 4-13] 청년(만 40세 미만)의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와 주거불안 경험(2022)

(단위: %)



출처: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 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고진수, 2023, 한국 사회동향 2023 통계개발원, p.271 [그림 VIII-19](좌측), p.274 [그림 VIII-28](우측).

## 2. 사회 지표로 보는 세대 내 격차와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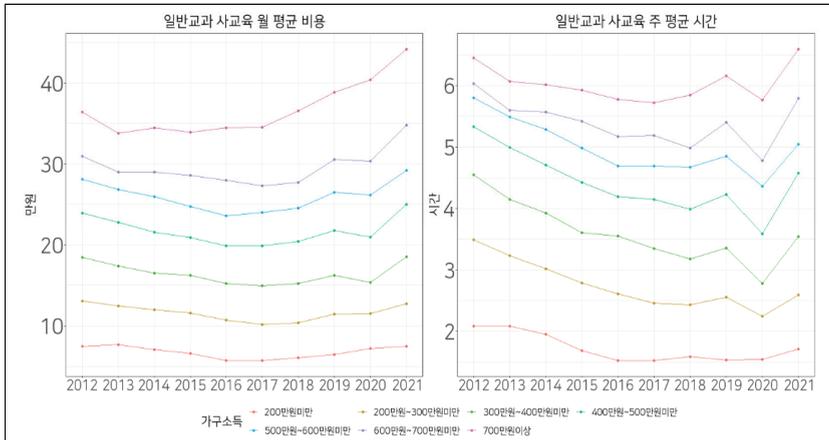
### 가. 교육

교육은 기회와 과정, 성과에 있어 불평등과 격차가 많이 연구된 분야이다. 교육의 차원에서는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격차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에 따라 사교육 비용과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였다.

김지원 외(2023)는 가구소득에 따라 일반교과 사교육 월 평균 비용과 주 평균 시간을 분석하였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월 평균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주 평균 시간도 순차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14] 가구소득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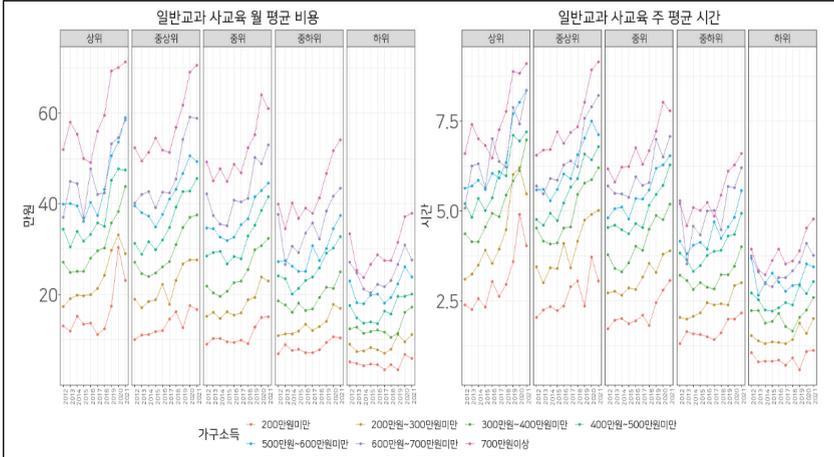
(단위: 만 원, 시간)



출처: “불평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불평등 추이와 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지원 외, 2023, 정부학연구29(3), p.189.

[그림 4-15] 가구소득과 성적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단위: 만 원, 시간)



출처: “불평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불평등 추이와 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지원 외, 2023, 정부학연구29(3), p.190.

2020년에는 사교육 주 평균 시간이 고소득 집단에서 감소폭이 증가하였는데 COVID-19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2021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의 사교육 투자의 격차는 성적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4-15] 참조). 김지원 외 (2023, p.190)는 이 두 그림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사교육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음을 유추하였다.

### 나.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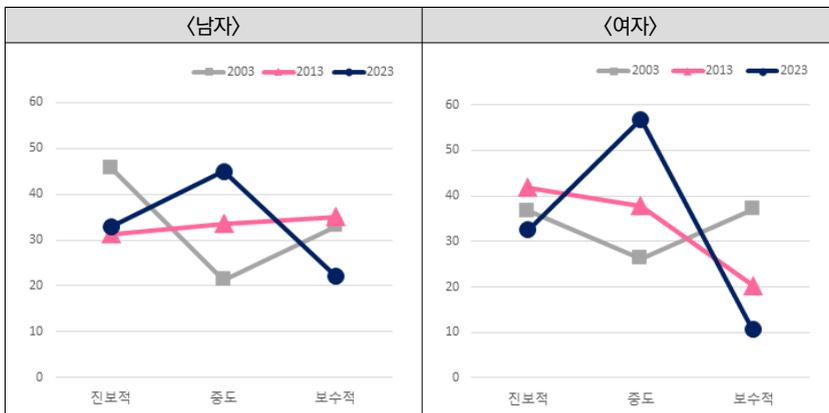
극화는 집단 간 거리가 멀어지고, 동시에 각 집단 내 동일성이 커지는 현상을 지칭한다(Esteban & Ray, 1994; Duclos, Esteban & Ray,

2004; 신광영, 2022, p.31에서 재인용). 이것은 소득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이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신광영, 2022, p.31). 가치관의 차원에서 청년층의 분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와 젠더의 측면에서 특히 청년층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생각되고 있으나 [그림 4-16]과 [그림 4-17]을 보면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림 4-16]은 정치성향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인데, 양극화가 심해지면 양단의 축을 기점으로 V자 형태의 분포가 나타나야 하지만 시간에 흐름에 따라 남자와 여자 모두 중도가 많아지고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진 청년층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2003년의 분포가 V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그래프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20대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4-16] 청년층(만 19-39세)의 정치성향 변화(2003, 2013, 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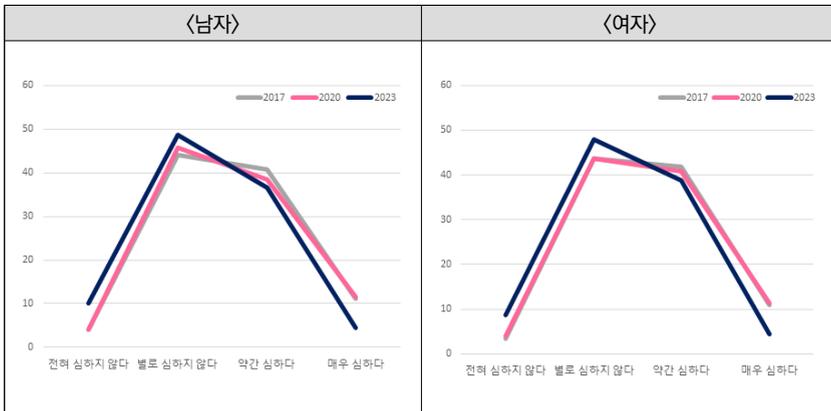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파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2003, 2013, 2023. 원자료 분석.

젠더 갈등은 특히 2010년대 후반에 크게 이슈가 되어 지금까지 지속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녀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층 중 남자의 경우 2017년 51.8%, 2020년 50.0%, 2023년 41.2%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에도 2017년 52.8%, 2020년 52.2%, 2023년 43.2%로 나타나 남자에 비해 약간 높았다(그림4-17) 참조).

반면,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대선 직후 공동으로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786명)의 66.6%가 ‘한국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0대가 79.8%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도 여성이 82.5%로 가장 크게 동의했다(김윤덕, 2022). 젠더 갈등에 대한 차이는 갈등이 거세진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추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림 4-17] 청년층(만 19-39세)의 남녀 갈등에 대한 인식(2017, 2020, 2023)

(단위: %)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 파일], 한국행정연구원, 2017, 2020, 2023, 원자료 분석.

### 제3절 세대 내 불평등과 미혼자의 결혼·출산 관련 특성 분석

#### 1. 분석 자료와 분석 대상자의 일반 특성

이 절에서는 세대 내 불평등과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이용하는 두 자료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2015년,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이다. 이 중 '가족과 출산 조사'의 개편 전 명칭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전복지 실태조사'로 기혼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조사해 왔다. 미혼자 조사는 1991년, 2009년, 2015년, 2018년, 2021년 실시되었다. 이 중 2015년과 2021년 자료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 파악한다. 1991년과 2009년의 경우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이 적어 제외한다. 시계열 비교를 위해 추가로 선택한 자료는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이다. 이 조사 역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고 가족과 출산 조사와 유사 문항이 존재하여 미혼자의 특성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2005년과 2009년 실시되었는데 2005년은 가구 데이터의 연계가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두 데이터의 3개 연도를 이용한다.

조사 대상의 연령은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만 20-44세, 2015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만 20-44세,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만 19-49세이다. 이 중 청년 세대에 주목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연령을 20-39세로 제한한다.

다음 <표 4-6>은 미혼자의 일반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2009년은 남자 51.7%, 여자 48.3%, 2015년에는 남자 45.1%, 여자 54.9%, 2021년에는 남자 59.2%, 여자 40.8%가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연령 분포는

3개 연도 모두 낮은 연령에 더 많이 분포해 있다. 교육수준은 2009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54.7%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이 43.3%로 그 뒤를 따랐다. 2015년에는 대학 졸업이 55.5%, 2021년에는 78.0%가 대학 졸업이어서 점차 고학력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개 연도 모두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지역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는 시도를 제공하고 2015년과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대도시/중소도시/소도시로 구분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2009년의 지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2015년에 비해 2021년에 소도시에 거주하는 20-30대 미혼자의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 점유 형태 역시 월세(사글세 포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94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표 4-6〉 미혼자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2009	2015	2021
성			
남자	51.7	45.1	59.2
여자	48.3	54.9	40.8
소계	3,207 (100.0)	2,235 (100.0)	5,104 (100.0)
연령			
20-24세	45.2	39.4	39.0
25-29세	33.9	29.7	35.5
30-34세	14.0	20.1	17.0
35-39세	6.9	10.9	8.4
소계	3,207 (100.0)	2,235 (100.0)	5,104 (10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0.5	0.4
고등학교	54.7	41.9	18.3
2-3년제 대학	16.7	20.6	21.8
4년제 대학	26.6	34.9	56.2
대학원(석사) 이상	1.0	2.1	3.3
소계	3,207 (100.0)	2,235 (100.0)	5,104 (100.0)
취업여부			
취업	51.9	60.2	62.4
비취업	48.1	39.8	37.6
소계	3,193 (100.0)	2,235 (100.0)	5,104 (100.0)
지역			
대도시	-	51.1	46.1
중소도시	-	36.5	49.0
소도시	-	12.4	4.9
소계	-	2,235 (100.0)	5,104 (100.0)
부모와의 동거			
동거	81.3	82.7	63.2
비동거	18.8	17.4	36.8
소계	3,207 (100.0)	2,210 (100.0)	5,104 (100.0)
주택점유형태			
자가	65.9	65.4	50.4
전세	22.1	14.6	17.3
월세(사글세 포함)	11.4	16.5	27.8
기타	0.6	3.6	4.5
소계	3,207 (100.0)	2,235 (100.0)	5,104 (100.0)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3개 연도 모두 미혼자의 과반수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7〉 참조). 대부분이 상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져 2009년 72%에서 2021년 60.6%였다. 대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2009년 20.8%, 2015년 26.9%, 2021년 28.7%로 상승하였다.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상용직에 포함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용안정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큰 차이는 없으나 2015년에 비해 2021년에 정규직의 비율이 약간 낮아져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직종은 2009년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에 대부분 분포해 있었다면(91.8%) 2015년에는 이 비율이 81.5%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78.0%로 확인되었다. 대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직장 유형도 2009년에는 약 50%가 민간 소기업(5-49인)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2015년과 2021년에는 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1시간(2009)에서 43.6시간(2015)으로, 2021년에는 40.8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2009년 203.9만 원에서 2021년 236.5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표 4-7〉 미혼자의 경제활동 특성

(단위: %, 명, 만 원)

구분	2009	2015	2021
종사상 지위			
고용주	1.3	1.8	1.8
자영업자	5.1	6.1	4.7
무급가족종사자	1.0	0.3	0.6
상용직(정규직)	72.0	65.0	60.6
임시직	17.5	22.9	19.9
일용직	3.3	4.0	8.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3.6
소계(%)	1,631 (100.0)	1,346 (100.0)	3,184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	66.5	65.3
비정규직	-	33.5	34.7
소계(%)	-	1,236 (100.0)	2,845 (100.0)
직종			
관리자	0.6	1.0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8	28.6	23.6
사무종사자	43.6	30.0	26.9
서비스종사자	18.7	14.9	18.8
판매종사자	11.7	8.0	8.7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0.2	0.2	0.8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9	6.8	8.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	5.2	5.3
단순노무종사자	2.9	4.9	6.5
군인	0.2	0.5	0.7
소계(%)	1,601 (100.0)	1,346 (100.0)	3,184 (100.0)
직장유형			
정부기관	5.1	8.4	7.0
정부 외 공공기관	3.3	3.1	5.7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5.2	12.9	15.1
민간 중기업(50-299인)	15.4	18.7	19.2
민간 소기업(5-49인)	49.0	23.6	28.9
개인사업체(5인 미만)	16.6	33.1	24.0
기타	5.5	0.1	0.2
소계(%)	1,607 (100.0)	1,346 (100.0)	3,184 (100.0)
주당 근로 시간			
평균(N)	45.1 (1,596)	43.6 (1,365)	40.8 (2,524)
실질임금			
월평균(N)	203.9 (1,514)	221.9 (1,364)	236.5 (2,524)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20-30대 미혼자의 연령별 결혼과 출산 의향은 <표 4-8>과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별 구분 없이 대체로 연령이 증가하면 결혼 의향이 낮아진다.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결혼 의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모두 ‘없다’의 비중이 높아졌다. 미혼남성은 2009년에 6.4%에서 2021년에는 14.1%로 상승하였고 미혼여성은 2009년 9.4%에서 2021년 19.4%로 10%p 증가하였다. ‘모르겠다’도 증가하였는데, 결혼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선택을 하게 될 때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희망 결혼 연령은 미혼남성의 경우 2009년 31.4세에서 2021년에는 33.0세로, 미혼여성은 2009년 30.0세에서 2021년 31.6세로 증가하였다.

<표 4-8> 연령별 미혼자의 결혼 의향과 평균 희망 결혼 연령

(단위: %, 세)

구분	2009				2015				2021			
	있다	없다	모르겠다	희망연령	있다	없다	모르겠다	희망연령	있다	없다	모르겠다	희망연령
남자												
20-24세	77.1	4.7	18.1	30.0	79.4	4.8	15.8	30.2	59.4	12.5	28.2	31.1
25-29세	80.8	5.3	13.9	30.9	79.2	6.5	14.3	31.6	64.9	12.3	22.7	32.5
30-34세	80.6	6.9	12.6	34.0	73.9	13.1	13.0	34.6	57.5	16.6	26.0	35.0
35-39세	58.6	17.5	23.9	38.6	66.3	18.8	14.9	39.1	53.1	21.4	25.5	39.1
전체	77.4	6.4	16.2	31.4	76.4	9.0	14.7	32.6	60.3	14.1	25.6	33.0
여자												
20-24세	77.1	5.1	17.8	28.9	71.6	6.5	21.8	28.9	47.4	17.0	35.6	30.1
25-29세	77.2	7.5	15.3	30.3	74.5	12.9	12.7	30.2	53.6	20.0	26.4	31.5
30-34세	65.2	22.2	12.6	33.7	54.6	17.4	28.0	34.3	56.9	17.3	25.9	34.5
35-39세	42.8	35.6	21.6	38.6	39.6	27.9	32.6	38.4	37.6	39.9	22.5	39.4
전체	74.0	9.4	16.6	30.0	66.6	12.4	21.1	30.7	50.3	19.4	30.2	31.6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출산 의향도 결혼 의향과 비슷하게 감소하였다. 2009년과 2015년에는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모두 90% 이상이 출산 의향이 있었으나 2021년

에 남자는 70.5%로, 미혼여성은 54.9%로 하락하였다. 2009년, 2015년 조사 문항과 2021년 조사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분포가 달라졌을 수 있으나 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출산 의향이 많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희망 자녀 수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2021년에는 미혼남성 1.7명, 미혼여성 1.6명으로 비슷하였다.

〈표 4-9〉 연령별 미혼자의 출산 의향과 희망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2009				2015				2021		
	있다	없다	모르겠다	희망 자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희망 자녀수	있다	없다	희망 자녀수
남자											
20-24세	93.1	1.0	6.0	1.9	92.5	0.5	6.9	2.2	70.4	29.6	1.8
25-29세	96.2	0.3	3.5	1.9	96.4	0.7	3.0	2.1	73.1	26.9	1.7
30-34세	94.4	0.8	4.8	2.0	98.4	0.0	1.6	2.0	69.0	31.1	1.7
35-39세	90.5	2.6	6.9	1.8	91.1	0.0	8.9	1.9	64.2	35.8	1.6
전체	94.2	0.9	5.0	1.9	94.7	0.4	4.9	2.1	70.5	29.6	1.7
여자											
20-24세	94.0	1.6	4.5	1.9	89.5	1.0	9.5	2.1	53.5	46.5	1.7
25-29세	94.9	0.7	4.5	1.8	90.8	0.7	8.5	1.9	58.2	41.8	1.6
30-34세	94.2	0.8	5.0	1.7	93.1	1.5	5.4	2.0	56.9	43.2	1.5
35-39세	82.9	5.7	11.4	1.5	83.0	2.9	14.1	1.8	41.9	58.2	1.4
전체	93.7	1.4	4.9	1.8	90.0	1.2	8.8	2.0	54.9	45.1	1.6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2. 세대 내의 경제적 격차와 결혼·출산 의향

세대 내의 경제적 격차와 이에 따른 결혼과 출산 의향의 차이는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의 측면과 취업자 내부의 일자리 특성을 통해 파악하였다. 가구 총소득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였고, 가구원 수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균등화하였다. 근로(사업)소득은 본인의 현재 일자리에서 버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구 총

소득의 경우 2015년 자료의 값이 일관성이 없어 제시하지 않았다.<sup>2)</sup>

〈표 4-10〉 연도별 미혼자의 소득수준

(단위: 만 원/월)

구분	2009	2015	2021
균등화 실질 총소득 <sup>1)</sup>			
평균	214.4	-	312.5
1분위	87.6	-	128.1
2분위	159.4	-	224.8
3분위	218.9	-	290.0
4분위	273.7	-	366.4
5분위	405.2	-	555.5
5분위배율	4.6	-	4.3
실질 근로(사업)소득			
평균	203.9	221.9	236.5
1분위	116.0	129.0	75.9 <sup>2)</sup>
2분위	172.3	181.8	186.0
3분위	205.6	209.1	230.6
4분위	238.5	249.9	280.5
5분위	324.4	366.9	421.7
5분위배율	2.8	2.8	5.6

주: 1) 균등화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나누었고,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2) 2021년도 자료의 1분위 실질 근로(사업)소득의 평균값이 2009년과 2015년에 비해 낮아 이들의 근로조건을 확인해 본 결과, 근로 시간 평균은 30.1시간이었으며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71.7%로 높았음. 개인사업체나 민간 소기업에 종사하는 미혼자가 69.7%였고 종사상 지위는 70%가 임시·일용근로자였으며 2.8%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나타남.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되어 1분위의 실질 근로(사업)소득이 다른 연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2) 소득 평균 101.5만 원, 5분위배율 19.4로 도출

총소득의 평균은 2009년 214.4만 원에서 2021년 312.5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사업)소득도 2009년 203.9만 원에서 2021년 236.5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는 총소득의 경우 2009년 317.6만 원, 2021년 427.4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2009년 208.4만 원에서 2015년 237.9만 원, 2021년에는 345.7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2021년에는 1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이 75만 9천 원으로 3개 연도 중 가장 낮았고 이에 따라 5분위배율도 5.6으로 높아져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은 대체로 높다. 다만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과 결혼 의향의 관계가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고 5분위보다 3분위나 4분위에 속하는 경우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 4-11〉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소득수준별 결혼 의향

(단위: %)

구분	2009			2015			2021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남자									
균등화 실질 총소득									
1분위	75.6	7.1	17.3	74.1	8.4	17.4	55.8	18.3	26.0
2분위	72.8	9.8	17.4	77.8	6.7	15.4	57.3	11.4	31.3
3분위	79.7	5.1	15.1	75.3	8.9	15.9	59.3	12.9	27.7
4분위	78.7	1.2	20.1	73.2	10.9	15.9	64.7	12.5	22.8
5분위	80.7	5.8	13.5	80.9	10.0	9.0	64.4	15.2	20.4
전체	77.3	6.4	16.4	76.4	9.0	14.7	60.3	14.1	25.6
실질 근로(사업)소득									
1분위	78.9	4.1	17.0	66.6	10.3	23.1	56.0	16.8	27.2
2분위	85.4	6.5	8.1	78.8	10.3	10.9	65.3	12.7	22.0
3분위	85.1	6.2	8.7	78.5	7.7	13.8	63.8	12.5	23.8
4분위	76.9	9.3	13.8	77.0	12.0	11.0	64.4	12.3	23.3
5분위	76.1	9.3	14.5	81.0	9.4	9.6	67.5	15.4	17.1
전체	80.5	7.2	12.3	76.2	10.0	13.8	63.7	14.0	22.2
여자									
균등화 실질 총소득									
1분위	71.0	12.3	16.7	66.1	7.9	26.1	45.0	21.6	33.4
2분위	76.1	7.5	16.5	67.1	11.6	21.3	41.2	22.8	36.0
3분위	68.7	11.0	20.3	66.3	12.0	21.7	53.5	18.1	28.4
4분위	82.8	5.4	11.8	70.0	13.0	17.0	53.4	18.0	28.7
5분위	75.6	10.0	14.4	62.7	19.0	18.3	57.4	17.2	25.5
전체	74.4	9.4	16.2	66.6	12.4	21.1	50.3	19.4	30.2
실질 근로(사업)소득									
1분위	76.9	7.8	15.3	65.0	12.2	22.7	40.8	21.9	37.3
2분위	74.7	13.0	12.4	69.8	19.0	11.2	51.1	18.8	30.1
3분위	74.3	10.5	15.3	63.5	18.0	18.5	66.0	14.4	19.6
4분위	73.1	11.8	15.2	69.0	9.7	21.3	51.7	22.4	26.0
5분위	66.8	17.6	15.5	72.1	10.1	17.8	61.7	17.2	21.2
전체	73.5	12.1	14.4	67.3	13.9	18.9	53.3	18.9	27.8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출산 의향 역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출산 의향이 높은 경향성이 있었으나 2021년의 미혼 여성은 3분위가 가장 높고 1분위와 5분위가 낮은 역U자형 모형을 보였다.

〈표 4-12〉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소득수준별 출산 의향

(단위: %)

구분	2009			2015			2021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b>남자</b>								
균등화 실질 총소득								
1분위	95.1	0.2	4.8	93.3	0.6	6.1	68.0	32.0
2분위	93.6	1.6	4.8	95.5	0.5	4.0	67.0	33.0
3분위	95.2	0.9	3.9	92.0	0.9	7.2	71.0	29.0
4분위	96.5	0.7	2.8	95.1	-	4.9	73.4	26.6
5분위	91.8	1.1	7.1	97.4	-	2.7	72.9	27.1
전체	94.3	0.9	4.9	94.7	0.4	4.9	70.5	29.6
실질 근로(사업)소득								
1분위	97.2	0.0	2.8	89.8	0.5	9.7	72.8	27.2
2분위	94.1	0.6	5.4	94.8	-	5.2	73.1	26.9
3분위	93.7	2.1	4.2	97.3	0.9	1.8	71.7	28.3
4분위	95.2	0.9	4.0	94.0	-	6.0	72.3	27.7
5분위	97.4	1.0	1.6	98.8	-	1.2	74.3	25.7
전체	95.6	0.9	3.6	95.0	0.3	4.7	72.9	27.1
<b>여자</b>								
균등화 실질 총소득								
1분위	90.1	2.5	7.4	87.4	1.5	11.1	48.6	51.4
2분위	95.1	0.3	4.7	85.5	2.0	12.4	49.1	50.9
3분위	94.7	1.7	3.7	90.2	0.8	9.0	60.4	39.7
4분위	95.8	2.0	2.2	94.0	1.1	4.9	56.8	43.2
5분위	96.5	1.4	2.2	92.8	0.5	6.7	58.7	41.3
전체	94.4	1.5	4.1	90.0	1.2	8.8	54.9	45.1
실질 근로(사업)소득								
1분위	93.2	2.3	4.5	89.3	1.9	8.9	47.2	52.8
2분위	93.2	0.6	6.2	92.9	0.7	6.4	56.8	43.2
3분위	95.6	1.2	3.3	91.6	0.6	7.8	66.5	33.5
4분위	95.8	0.5	3.7	95.6	-	4.4	58.6	41.4
5분위	93.2	3.5	3.4	96.8	0.9	2.3	54.5	45.5
전체	94.0	1.5	4.5	92.5	1.0	6.5	56.6	43.4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표 4-13〉와 〈표 4-14〉는 일자리 특성에 따른 미혼자의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을 나타낸 표이다. 우선 결혼 의향에 대해 파악해 본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결혼 의향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2015년에는 미혼

남성의 격차가 더 컸고 2021년에는 미혼여성의 격차가 더 컸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격차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안정성이 낮을수록 결혼 의향이 있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임금 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결혼 의향이 대체로 낮고, 임금 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에서도 일용직의 결혼 의향이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 이 경향은 직종과 직장유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미혼남성은 단순노무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결혼 의향이 제일 낮았고, 군인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혼여성은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판매종사자 순으로 낮았다. 결혼 의향이 높은 직종은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이었다.<sup>3)</sup> 직장유형도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에 비해 개인사업체나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결혼 의향이 낮았다. 출산 의향도 이와 유사하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낮았고 종사상 지위, 직종, 직장유형 모두 안정성이 높은 경우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을 포함한 일자리의 조건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남녀 모두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1위로 결혼자금 부족을, 4위로 고용 상태 불안정을 꼽고 있다(통계청, 2023, p.1). 이 어려움을 딛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도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 격차는 각자 속한 집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증첩될 것으로 생각된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3) 군인은 사례수가 한 건이므로 제외하고 서술함.

〈표 4-13〉 경제적 특성에 따른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결혼 의향(있음)

(단위: %)

구분	2009		2015		2021	
	남	여	남	여	남	여
정규직 여부						
정규직	-	-	81.3	69.6	66.4	57.7
비정규직	-	-	68.8	64.3	57.8	44.4
소계(%)	-	-	77.0	67.9	63.4	53.1
종사상 지위						
고용주	82.3	91.3	72.2	96.0	64.2	55.0
자영업자	78.5	64.4	68.0	54.9	68.3	53.3
무급가족종사자	82.8	79.6	10.3	40.1	60.4	49.1
상용직(정규직)	80.8	73.3	79.2	70.0	66.7	57.3
임시직	83.4	72.9	70.8	64.8	56.8	44.7
일용직	66.1	84.0	76.4	42.8	55.6	4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	-	65.5	57.8
소계(%)	80.5	73.4	76.2	67.2	63.7	53.3
직종						
관리자	100.0	58.3	100.0	66.7	69.2	7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8.5	69.9	83.6	67.8	71.5	56.4
사무종사자	84.5	77.1	79.9	71.6	64.1	56.7
서비스종사자	81.4	70.5	80.1	64.6	59.2	47.8
판매종사자	77.8	68.0	64.2	52.4	67.5	42.2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00.0	-	79.4	100.0	58.6	25.8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2.4	54.6	76.4	57.2	67.1	61.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7.0	78.4	65.0	84.7	62.1	29.4
단순노무종사자	70.1	77.3	69.5	38.6	48.3	45.7
군인	100.0	-	98.3	-	88.1	100.0
소계(%)	80.6	73.4	76.2	67.2	63.7	53.3
직장유형						
정부기관	80.2	56.5	83.3	62.1	78.2	58.9
정부 외 공공기관	73.5	74.1	56.7	82.2	68.3	68.0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80.1	74.9	88.6	78.2	66.1	56.0
민간 중기업(50-299인)	81.7	80.9	73.0	69.8	65.1	53.0
민간 소기업(5-49인)	82.4	74.4	73.5	69.4	58.9	50.3
개인사업체(5인 미만)	75.5	74.4	75.0	60.7	61.8	49.8
기타	83.7	63.7	-	0.0	100.0	0.0
소계(%)	80.6	73.6	76.2	67.2	63.7	53.3
주당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	90.2	68.7	100.0	85.7	61.9	55.5
15-39시간	80.0	73.9	62.8	48.5	55.5	38.0
40시간	73.7	70.0	75.9	68.3	67.1	58.0
41-52시간	82.5	75.4	79.9	74.3	61.6	53.2
52시간 초과	81.5	74.7	75.5	64.2	64.3	43.1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표 4-14) 경제적 특성에 따른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출산 의향(있음)

(단위: %)

구분	2009		2015		2021	
	남	여	남	여	남	여
정규직 여부						
정규직	-	-	95.5	94.2	73.8	60.8
비정규직	-	-	93.5	89.5	71.4	49.4
소계(%)	-	-	94.8	92.7	73.0	56.9
종사상 지위						
고용주	100.0	91.3	94.9	96.0	74.0	61.8
자영업자	95.7	100.0	98.3	89.7	73.2	51.0
무급가족종사자	100.0	100.0	100.0	100.0	64.0	0.0
상용직(정규직)	94.7	94.0	94.8	94.3	74.2	60.5
임시직	98.0	93.2	94.2	89.0	69.0	50.0
일용직	90.0	100.0	98.1	83.5	73.3	47.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	-	73.3	57.6
소계(%)	95.3	94.3	95.0	92.5	72.9	56.6
직종						
관리자	100.0	100.0	100.0	100.0	80.5	7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4.0	92.4	96.9	94.9	73.6	60.9
사무종사자	96.4	94.1	93.5	91.2	72.9	57.2
서비스종사자	97.0	95.1	98.0	92.7	71.7	52.8
판매종사자	94.1	94.2	92.0	82.3	80.2	52.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00.0	-	92.4	100.0	76.2	72.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95.0	90.5	96.4	99.1	75.1	57.2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5.8	100.0	91.5	100.0	71.3	39.9
단순노무종사자	94.0	100.0	95.3	85.7	64.1	40.1
군인	100.0	-	100.0	-	86.3	44.7
소계(%)	95.3	94.1	95.0	92.5	72.9	56.6
직장유형						
정부기관	95.8	92.7	91.9	95.6	77.2	67.7
정부 외 공공기관	95.7	89.2	85.3	93.1	77.0	67.2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100.0	94.1	95.1	90.0	78.1	55.9
민간 중기업(50-299인)	95.5	94.7	94.2	95.6	71.1	56.9
민간 소기업(5-49인)	95.7	93.9	93.8	94.1	70.1	55.2
개인사업체(5인 미만)	94.1	96.7	98.0	90.5	72.1	52.1
기타	89.9	90.3	-	13.0	100.0	100.0
소계(%)	95.4	94.0	95.0	92.5	72.9	56.6
주당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	100.0	92.2	100.0	100.0	75.0	48.3
15-39시간	90.5	82.8	97.2	93.5	72.7	46.6
40시간	95.7	95.5	92.1	91.5	77.4	60.7
41-52시간	95.9	94.0	97.6	93.3	65.9	55.1
52시간 초과	93.6	97.1	96.0	93.4	72.3	52.9
소계(%)	95.4	94.1	95.0	92.5	72.9	56.6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3. 세대 내의 사회적 격차와 결혼·출산 의향

사회적 격차와 결혼 및 출산 의향과의 관계는 거주지역, 교육수준과 가치관을 통해 파악해 본다. 거주지의 경우 소도시에 거주하는 미혼자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낮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례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비율로 보이는 차이보다 양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5〉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거주지역별 결혼 및 출산 의향

(단위: %)

구분	2015			2021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결혼 의향						
남자						
대도시	73.7	10.2	16.1	59.6	14.0	26.5
중소도시	77.1	8.1	14.7	60.2	15.1	24.7
소도시	83.7	6.9	9.4	68.1	6.0	25.9
전체	76.4	9.0	14.7	60.3	14.1	25.6
여자						
대도시	67.0	13.6	19.5	49.1	20.1	30.9
중소도시	67.0	10.8	22.2	51.2	19.4	29.4
소도시	63.1	11.6	25.3	55.6	12.8	31.6
전체	66.6	12.4	21.1	50.3	19.4	30.2
출산 의향						
남자						
대도시	92.8	0.7	6.6	71.5	28.5	-
중소도시	96.8	-	3.3	68.4	31.6	-
소도시	96.2	0.3	3.5	81.8	18.2	-
전체	94.7	0.4	4.9	70.5	29.6	-
여자						
대도시	91.3	1.4	7.3	52.0	48.0	-
중소도시	88.4	1.3	10.3	56.7	43.3	-
소도시	88.8	-	11.2	69.0	31.1	-
전체	90.0	1.2	8.8	54.9	45.1	-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표 4-16〉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 및 출산 의향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미혼남성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미혼여성은 교육수준과 결혼과 출산 의향에 일정한 패턴이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2021년에는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집단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의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4-16〉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교육수준별 결혼 및 출산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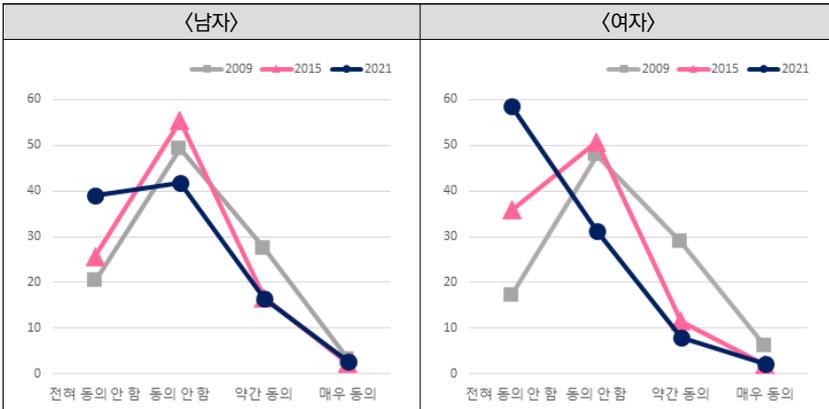
구분	2009			2015			2021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결혼 의향									
남자									
중학교 졸업 이하	63.7	10.0	26.3	66.7	14.4	19.0	42.4	36.4	21.2
고등학교 졸업	76.4	6.7	17.0	76.7	8.6	14.7	54.6	19.7	25.7
대학교 졸업	79.3	5.9	14.8	76.5	9.5	14.0	61.4	12.7	25.9
대학원 이상	87.2	-	12.8	65.9	-	34.2	74.2	7.1	18.7
전체	77.4	6.4	16.2	76.4	9.0	14.7	60.3	14.1	25.6
여자									
중학교 졸업 이하	64.2	20.8	15.0	68.7	31.3	-	52.2	20.4	27.3
고등학교 졸업	74.0	7.5	18.6	61.7	16.5	21.8	42.7	19.9	37.4
대학교 졸업	74.5	11.3	14.1	68.3	10.5	21.2	51.4	19.2	29.4
대학원 이상	62.3	-	37.7	86.7	1.4	11.9	55.8	22.6	21.6
전체	74.0	9.4	16.6	66.6	12.4	21.1	50.3	19.4	30.2
출산 의향									
남자									
중학교 졸업 이하	79.7	-	20.3	100.0	-	0.0	74.5	25.5	21.2
고등학교 졸업	93.6	1.0	5.4	94.0	0.6	5.5	66.2	33.8	25.7
대학교 졸업	95.6	0.7	3.8	95.5	0.2	4.3	71.1	29.0	25.9
대학원 이상	94.6	-	5.5	90.7	0.0	9.3	82.9	17.1	18.7
전체	94.2	0.9	5.0	94.7	0.4	4.9	70.5	29.6	25.6
여자									
중학교 졸업 이하	92.7	-	7.3	67.7	-	32.3	79.6	20.4	27.3
고등학교 졸업	93.5	1.5	5.0	86.2	2.1	11.8	50.6	49.4	37.4
대학교 졸업	94.2	1.4	4.4	91.8	0.8	7.4	55.1	44.9	29.4
대학원 이상	80.4	-	19.6	96.8	0.0	3.2	67.9	32.1	21.6
전체	93.7	1.4	4.9	90.0	1.2	8.8	54.9	45.1	30.2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 의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해 본다. 가치관은 3개 연도의 조사자료에서 동일한 문항이 한 개 존재하여 해당 문항(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sup>4)</sup>)에 동의하는 여부로 파악하였다. 문항에 동의할 경우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변화를 파악해 보면 2009년에 비해 2015년이, 그리고 2021년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최근에 이르러 더 큰 변화를 보인다.

[그림 4-18]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가치관 분포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단위: %)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표 4-17〉과 〈표 4-18〉을 보면, 미혼여성은 문항에 동의하는 경우 대체로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다. 미혼남성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4) 2009년의 문항은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로 표기되어 있다.

데,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결혼 의향이 높았고 출산 의향은 반대로 문항에 동의하는 경우 대체로 더 높았다. 미혼여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결혼과 출산에 더 긍정적이거나, 미혼남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 의향은 약간 더 부정적이지만 출산 의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4-17〉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가치관별 결혼 의향

(단위: %)

구분	2009			2015			2021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남자									
20-24세									
동의 안 함	80.6	4.0	15.4	76.7	5.3	18.0	56.9	14.0	29.1
동의함	69.6	6.3	24.2	94.2	1.8	4.1	69.9	5.9	24.2
25-29세									
동의 안 함	81.7	6.4	11.9	80.1	6.6	13.2	65.3	12.2	22.5
동의함	78.6	2.7	18.7	75.2	5.8	19.0	63.1	12.8	24.1
30-34세									
동의 안 함	80.0	7.6	12.3	69.8	14.2	16.1	58.0	15.7	26.3
동의함	81.7	5.2	13.1	88.4	9.2	2.4	55.2	20.1	24.8
35-39세									
동의 안 함	60.1	15.6	24.3	66.5	20.6	12.9	53.3	22.1	24.6
동의함	54.7	22.4	22.9	65.7	12.4	21.9	52.5	19.3	28.2
여자									
20-24세									
동의 안 함	79.8	4.4	15.7	69.9	6.6	23.6	47.4	17.4	35.3
동의함	71.9	6.4	21.7	84.2	6.5	9.3	48.1	12.5	39.4
25-29세									
동의 안 함	82.0	6.2	11.8	71.9	14.8	13.3	52.6	21.5	25.9
동의함	69.0	9.7	21.3	89.5	1.4	9.1	61.6	7.7	30.7
30-34세									
동의 안 함	67.2	21.2	11.6	55.3	18.4	26.2	56.8	18.9	24.3
동의함	60.8	24.5	14.7	50.5	11.9	37.6	57.7	7.4	34.8
35-39세									
동의 안 함	42.8	38.5	18.7	40.5	27.6	31.9	35.7	42.4	21.9
동의함	42.7	30.2	27.1	31.8	29.8	38.5	51.0	22.3	26.7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110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표 4-18〉 연도별 성별 미혼자의 가치관별 출산 의향

(단위: %)

구분	2009			2015			2021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없다
남자								
20-24세								
동의 안 함	95.3	0.5	4.2	91.2	0.6	8.2	69.1	30.9
동의함	88.1	2.0	9.9	100.0	-	-	76.1	23.9
25-29세								
동의 안 함	97.0	0.5	2.6	96.7	0.8	2.4	72.6	27.4
동의함	94.4	-	5.6	94.7	-	5.3	75.6	24.4
30-34세								
동의 안 함	93.8	1.1	5.0	97.9	-	2.1	69.5	30.5
동의함	95.6	-	4.4	100.0	-	-	66.8	33.2
35-39세								
동의 안 함	93.2	1.2	5.7	88.5	-	11.5	63.0	37.0
동의함	83.8	6.1	10.1	100.0	-	-	67.7	32.3
여자								
20-24세								
동의 안 함	96.1	1.2	2.6	88.9	0.9	10.2	53.4	46.6
동의함	89.8	2.3	7.9	93.7	1.8	4.5	54.7	45.3
25-29세								
동의 안 함	96.6	0.8	2.6	90.9	0.9	8.3	56.4	43.6
동의함	91.9	0.4	7.7	90.4	-	9.6	72.9	27.2
30-34세								
동의 안 함	96.0	-	4.0	91.9	1.8	6.4	55.6	44.4
동의함	90.3	2.5	7.2	99.5	-	0.5	63.9	36.1
35-39세								
동의 안 함	91.3	1.5	7.2	83.1	3.2	13.7	40.7	59.3
동의함	67.2	13.6	19.2	82.6	-	17.4	50.0	50.0

출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제4절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출산 등에 대한 가치관 차이 특성<sup>5)</sup>

다음으로 우리는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가치관 차이에 대하여 관측하고 이러한 의미에 대하여 해석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논의가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불안정성의 기제로서 최근 세대 간,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적 양상으로서의 저출산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즉, 불안정성의 기제에 따른 결과적 특성으로서의 출산 행동의 변화와 맞물린 가치관 차이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두 요인 간 명확한 가교 요인을 구축하고자 한다.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수집, 구축하고 있는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다. 해당 자료는 기본적으로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혼/미혼자, 여성 및 남성을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하고 있는 동시에, 결혼, 출산에 대한 여러 가치관 특성에 대한 설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 특성을 살펴보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는 분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대 간, 세대 내 평균적인 가치관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대 구분의 경우 1981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1981년생 제외 1981년 이전 출생자-1981년생 포함 1981년 이후 출생자)로 구분하고, 세대 내 구분은 1981년생 포함 1981년 이후 출생자를 1980년대생과 1991년 이후 출생자로 구분하였다.

5) 해당 논의는 장인수. (2023. 5.25).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MZ세대 관점으로 본 진단과 해법,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의 내용을 일부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 1. 세대 간 가치관 차이 주요 특성

### 가. 결혼,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먼저, 결혼 및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관련하여 세대 간 가치관 차이에 대한 주요 관측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81년 이후 출생 집단은 이전 출생 집단에 비하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고, 동거 및 미혼 여성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족보다는 자기 자신을 우선 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4-19〉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차이: 세대 간

항목	1981년 이후 출생	1981년 이전 출생	T-stat	P-val
결혼 당위성	2.54	2.44	-7.72	0.0000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2.38	2.53	10.99	0.0000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	2.13	2.10	-2.19	0.0282
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만 하는 것도 괜찮다	2.50	2.27	-15.78	0.0000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르는 것도 괜찮다	2.36	2.16	-13.47	0.0000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2.57	2.73	12.22	0.0000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2.37	2.68	22.50	0.0000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3.28	3.39	9.03	0.0000

주: “결혼 당위성”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나. 결혼 결정 시 일반적인 중요 요인 차이

다음으로, 결혼 결정 시 일반적인 중요 요인 차이와 관련하여 1981년 이후 출생 집단은 이전 출생 집단에 비하여 결혼 결정 시 일반적으로 본인의 경제적 여건 및 일과 직장, 그리고 공평한 가사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부 간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4-20) 결혼 결정 시 중요 요인 차이: 세대 간

항목	1981년 이후 출생	1981년 이전 출생	T-stat	P-val
본인의 경제적 여건	4.17	4.05	-9.31	0.0000
본인의 일과 직장	4.14	4.10	-3.59	0.0003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3.96	3.91	-3.50	0.0005
배우자의 일과 직장	3.96	3.95	-0.86	0.3845
공평한 가사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	4.02	3.86	-10.72	0.0000
각자의 집안과의 원만한 관계	4.19	4.17	-1.12	0.2609
안정된 주거 마련	4.24	4.22	-0.91	0.3612
자녀계획 일치 여부	3.97	3.93	-3.01	0.0026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	4.64	4.65	0.21	0.8265

주: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다. 자녀 출산 결정 시 일반적인 중요 요인 차이

자녀 출산 결정 시 일반적인 중요 요인 차이와 관련하여 1981년 이후 출생 집단은 이전 출생 집단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 가정의 경제적 여건, 육아분담, 육아 휴직 등 제도 이용 가능성을 상

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본인, 배우자의 건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자녀 출산 결정 시 중요 요인 차이: 세대 간

항목	1981년 이후 출생	1981년 이전 출생	T-stat	P-val
출산 당위성	2.02	1.74	-21.17	0.0000
가정의 경제적 여건	4.35	4.20	-12.29	0.0000
본인의 안정된 직업	4.24	4.12	-9.17	0.0000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4.13	4.02	-7.84	0.0000
주거 여건	4.30	4.19	-9.07	0.0000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4.57	4.58	0.18	0.8562
배우자의 육아분담	4.07	3.94	-9.60	0.0000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4.04	4.02	-2.08	0.0372
본인의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이용 가능성	4.08	3.95	-9.05	0.0000

주: “출산 당위성”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라.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은 1981년 이후 출생 집단은 이전 출생 집단에 비하여 일반적,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자녀의 순기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자녀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4-22〉 자녀에 대한 시각 차이: 세대 간

항목	1981년 이후 출생	1981년 이전 출생	T-stat	P-val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3.22	3.35	12.00	0.0000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3.34	3.42	8.28	0.0000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3.13	3.21	6.18	0.0000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2.84	2.75	-6.42	0.0000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2.33	2.43	7.04	0.0000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2.14	2.10	-2.69	0.0070

주: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2. 세대 내 가치관 차이 주요 특성

다음으로, 상기 세대 간 가치관 차이의 주요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 세대(1981년 이후 출생자) 내에서 집단을 두 개로 구분(1980년대생, 1990년대 이후 출생)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결혼,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먼저, 결혼,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관련하여 동일세대 내에서도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1년 이

후 출생자 중 1990년 이후 출생 집단은 1980년대생에 비하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고, 가족보다는 자기 자신을 우선 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가부장적 특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4-23〉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차이: 세대 내

항목	1990년 이후	1980년대생	T-stat	P-val
결혼 당위성	2.58	2.47	-6.95	0.0000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2.30	2.47	9.18	0.0000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	2.11	2.15	1.89	0.0575
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만 하는 것도 괜찮다	2.56	2.43	-6.79	0.0000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	2.43	2.28	-7.74	0.0000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2.50	2.64	8.03	0.0000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2.24	2.49	13.88	0.0000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3.20	3.36	9.87	0.0000

주: “결혼 당위성”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나. 결혼 결정 시 일반적인 중요 요인 차이

결혼 결정 시 일반적인 중요 요인 차이와 관련해서는, 1981년 이후 출생자 중 1990년 이후 출생 집단은 1980년대생에 비하여 결혼 결정 시 일반적으로 본인의 경제적 여건 및 일과 직장, 그리고 공평한 가사분담 등 평등한 관계, 안정된 주거 마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4〉 결혼 결정 시 중요 요인 차이: 세대 내

항목	1990년 이후	1980년대생	T-stat	P-val
본인의 경제적 여건	4.29	4.07	-12.67	0.0000
본인의 일과 직장	4.24	4.06	-10.42	0.0003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4.01	3.92	-4.86	0.0005
배우자의 일과 직장	3.99	3.93	-3.02	0.0025
공평한 가사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	4.12	3.91	-11.53	0.0000
각자의 집안과의 원만한 관계	4.21	4.17	-2.31	0.0204
안정된 주거 마련	4.29	4.19	-6.22	0.0000
자녀계획 일치 여부	4.00	3.95	-2.59	0.0095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	4.64	4.67	1.75	0.0790

주: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다. 자녀 출산 결정 시 일반적인 중요 요인 차이

다음으로 자녀 출산 결정 시 일반적인 중요 요인 차이와 관련하여, 1981년 이후 출생자 중 1990년 이후 출생 집단은 1980년대생에 비하여 출산 결정 시 일반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 가정의 경제적 여건, 육

아분담, 육아 휴직 등 제도 이용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4-25〉 자녀 출산 결정 시 중요 요인 차이: 세대 내

항목	1990년 이후	1980년대생	T-stat	P-val
출산 당위성	2.19	1.85	-19.95	0.0000
가정의 경제적 여건	4.41	4.29	-7.90	0.0000
본인의 안정된 직업	4.34	4.14	-12.25	0.0000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4.20	4.07	-7.09	0.0000
주거 여건	4.35	4.26	-6.15	0.0000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4.57	4.58	0.68	0.4903
배우자의 육아분담	4.13	4.01	-6.93	0.0000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4.02	4.07	2.26	0.0233
본인의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이용 가능성	4.13	4.03	-5.27	0.0000

주: “출산 당위성”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라.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1981년 이후 출생자 중 1990년 이후 출생 집단은 1980년대생에 비하여 일반적,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자녀의 순기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다만, 노후 경제적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 자녀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4-26〉 자녀에 대한 시각 차이: 세대 내

항목	1990년 이후	1980년대생	T-stat	P-val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3.07	3.36	20.81	0.0000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3.23	3.44	15.79	0.0000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3.06	3.21	9.96	0.0000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2.93	2.74	-11.54	0.0000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2.33	2.33	0.32	0.7452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2.24	2.03	-12.55	0.0070

주: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3. 사회의 안전과 신뢰

추가로 세대 간, 세대 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사회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 간 차이와 관련하여, 1981년 이후 출생 집단은 이전 출생 집단에 비하여 이웃,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대 내 차이와 관련하여, 1981년 이후 출생자 중 1990년 이후 출생 집단은 1980년대생에 비하여 가족, 이웃, 직장동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4-27〉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 차이: 세대 간

항목	1981년 이후 출생	1981년 이전 출생	T-stat	P-val
우리 사회 안전 정도	2.65	2.64	-0.61	0.5364
가족에 대한 신뢰도	3.60	3.58	-2.27	0.0226
이웃에 대한 신뢰도	2.38	2.63	22.22	0.0000
직장동료(비취업자는 가상의 직장동료)에 대한 신뢰도	2.60	2.73	12.18	0.0000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1.44	1.57	12.44	0.0000
정부(중앙,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2.37	2.42	4.33	0.0000
국회(입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2.06	2.02	-3.03	0.0024
법원, 검찰(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2.19	2.11	-6.23	0.0000
언론(TV방송사, 신문사)에 대한 신뢰도	1.94	1.96	1.52	0.1261

주: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표 4-28〉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 차이: 세대 내

항목	1990년 이후	1980년대생	T-stat	P-val
우리 사회 안전 정도	2.65	2.65	-0.18	0.8498
가족에 대한 신뢰도	3.58	3.62	3.76	0.0002
이웃에 대한 신뢰도	2.28	2.48	13.80	0.0000
직장동료(비취업자는 가상의 직장동료)에 대한 신뢰도	2.55	2.65	7.41	0.0000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1.43	1.45	1.23	0.2156
정부(중앙,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2.34	2.39	3.00	0.0027
국회(입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2.10	2.02	-4.81	0.0000
법원, 검찰(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2.22	2.16	-3.74	0.0000
언론(TV방송사, 신문사)에 대한 신뢰도	1.95	1.93	-1.08	0.2798

주: 평균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최근 세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특성에 대한 단면적 상황을 살펴보고, 청년층 내부에서의 불평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 격차에 따라 결혼 의향 및 출산 의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 특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불안정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근 젊은 층의 특성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치관 형성의 결과적 특성의 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최근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인 세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었지만, 세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특성은 청년층의 상대적, 절대적 취약성과 맞물려 그 의미가 배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렇게 배가된 특성이 이들의 결혼 및 출산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일련의 연쇄적 과정의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층의 상대적 취약성은 통시적 관점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 청년층과 다른 취약한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구조적 양극화의 심화에 의한 결과적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절대적 취약성은 이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연령층과 두드러지게 다른 특성에 따라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의 주거 유형은 상대적으로 전월세 비율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대적 취약성은 그 자체로도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이에 더하여 이로 인한 경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생애주기 사건 이행, 가령 결혼, 출산 등의 사건 이행과 부적(-)

연관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황 및 세대 내 불평등과 미혼자의 결혼·출산 특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 내부에서 소득, 근로조건, 자산과 주거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과 교육 등 사회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간극이 클 것이라 예상한 정치성향과 젠더갈등의 경우에는 그 인식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일부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크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데이터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5분위배율이 2.8배(2009년)에서 5.6배(2021년)로 상승하여 내부적인 차이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균등화 실질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5분위 배율은 2009년 4.6에서 2021년 4.3으로 불평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는 근로(사업)소득과 총소득 모두 2021년에 더 커져 내부의 차이가 커진 것을 시사한다. 총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 특성 역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도 결혼과 출산 의향이 차이를 보였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과 출산 의향이 제일 높았고 반대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은 미혼남성의 경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높았지만 미혼여성은 일정한 패턴이 파악되지 않고 최근에는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집단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치관의 경우 미혼여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혼과 출산 의향이 더 높았으나 미혼남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

을 경우 결혼 의향은 더 낮고 출산 의향은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미혼자의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개인이 가진 자원과 개인이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결정된다.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의향이 하락하는 추세에 더불어 미혼자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이 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 의향은 더 차이를 보이게 된다.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서 나타나는 격차가 증첩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해서 증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선권, 2019, p.13) 정책적으로 대응하여 격차를 줄여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과 관련된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일자리와 소득에 모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성과의 측면에서까지 확장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임금격차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불안정성이 높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경우 결혼과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임금이 낮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격차를 해소하여 청년 내부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이들의 원하는 결혼과 출산 이행을 도울 필요가 다분하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 분석 결과 드러나는 최근 젊은 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한 높지 않은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불안정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린 내, 외적 취약성의 결과적 양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결혼과 출산 결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 마련 필요에 대

한 강한 인식, 부모/이웃 등 주변인에 대한 비의존적 성향은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여건 마련이 준비되기 전까지 결혼, 출산을 미루려는 경향과도 맞물려 있다(최선영 외, 2022). 또한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중앙정부, 지자체)에 대한 높지 않은 신뢰도는 결혼, 출산 친화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저하, 정책과 기대 여건 간 괴리 심화에 따른 결혼 및 출산 연기 내지는 포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장인수, 2023.5.25., p 22).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세대 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은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1) 결혼에 대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 결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 2) 출산에 대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 및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 3) 전통적인 자녀의 순기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자녀를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최근 세대는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하여 결혼, 출산,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낮으며, 1981년 이후 출생 집단 내에서도 최근 코호트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 간 결혼, 출산 자녀 인식의 차이는 현재의 초저출산 양상 및 이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최근 세대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저출산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정책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젊은세대의 정책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응 정책의 “선택과 집중” 이 급선무라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정책 수요(요구) 중심의(demand-oriented) 집중을 통한 정책 추진을 통한 정책 추진 체계의 전반적 신뢰도 향상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다분하다.



## 제5장

### 노동시장 지위 이동으로 본 세대 간 불평등 특성과 함의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자료와 분석방법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 제 5 장

# 노동시장 지위 이동으로 본 세대 간 불평등 특성과 함의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장은 노동시장 지위의 세대 내 이동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세대 간 불평등은 가장 논쟁적인 정치적·사회적 의제 중 하나이다. 우선,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를 칭하는 '86' 세대의 정치 권력과 경제적 자원을 독점으로 인해 청년 세대가 정치권력과 경제적 기회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곤 한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한 세대 회계 (generational account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흔히 특정 세대(주로 기성세대)가 다른 세대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채고 있다는 비난으로 연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간 갈등에 대한 강조가 더 중요한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신진욱, 2022).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담론적 논의는 풍부하지만 이에 비해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경험적 연구들도 대부분 소득과 노동시장 지위의 연령 집단 간 차이의 시계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창환, 김태호, 2020; 이철승, 2019b). 연령 집단 차이의 시계열적 변화는 세대 간 불평등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는 오랜 기간 수집된 패널자료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세대 간 불평등이

존재하면 출생 코호트들의 생애과정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연령 집단 간 차이의 시계열적 변화로 연결되므로 연령 집단 간 차이의 시계열적 변화는 세대 간 불평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러나, 세대 간 불평등은 각 세대의 생애과정을 차이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Ryder, 1965; Glenn, 2005).

이 연구는 지난 25년(1998-2022년) 동안 축적되어 온 한국노동패널(이하 노동패널 1-25차) 자료를 활용해서 결합노동시장 지위(이철승, 2019a)의 세대 내 변화를 출생 코호트별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대 내 노동시장 지위 변화의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며, 관련된 사회학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철승, 2019a; 전상진, 2018). 경제적 지위, 정치 권력 등 자원 배분의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김창환·김태호, 2020; 신광영, 2009; 이철승, 2019b), ‘네트워크 위계’를 비롯한 세대 간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개념적 도구도 제시되었다(이철승, 2019a). 따라서,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 연구의 빈곤’(전상진, 2004)이라는 한계는 극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자원 배분과 세대 간 갈등에 주목한다. 전상진(2018)은 <세대 게임>에서 세대 간 갈등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세대 전쟁이고 다

른 하나는 세대 투쟁이다. 세대 전쟁은 경제적 자원 배분과 관련되고 세대 투쟁은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지칭한다. 서구사회의 세대 전쟁론은 주로 풍족한 연금을 받는 '탐욕스러운'(greedy) 노인세대에 대한 비난이 내러티브의 핵심을 이루는데(Thomson 1989), 한국에서는 '기성세대'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는 한국사회의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으므로 이들의 탐욕성을 비난하는 담론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세대 전쟁론은 일자리에 주목한다.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는 '기성세대'의 탐욕의 결과로 묘사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기성세대'의 고용기회의 독점이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철승(2019a)은 '결합노동시장 지위'<sup>6)</sup> 개념을 제시하고, 다른 출생 코호트보다 1960년대 출생코호트가 상층 노동시장 지위를 더 많이, 더 오래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동산 가격 폭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대 전쟁과 연결된다. 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기성세대'의 자산 독점이 강화되고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전상진(2018)은 세대 전쟁 담론이 계급 갈등의 문제를 세대 갈등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일자리,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의 주된 축은 세대가 아니라 계급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져오는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부동산 가격 폭등은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줄이므로 이미 형성된 자산 가치 상승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장년층/노년층과 청년층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편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모들의 자산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층의 생애 기회 차이 또한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듯 자산 불평등의 심

6) '결합노동시장 지위'에 대해서는 측정치를 설명하면서 상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화는 세대 간 및 세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는 엄밀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세대 내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등보다 중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쉽게 표현하면 나와 내 동년배 재벌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나와 내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 전쟁론은 세대 간 차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대 전쟁론은 특정 세대가 더 많은 사회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제도를 조작한다는 ‘음모론적’ 사고를 전제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특정 세대 혹은 출생 코호트만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세대 간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일부 존재하지만(이철승, 2019a), 경험적 연구들은 대부분 세대 내 불평등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데에 세대 간 불평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창환·김태호, 2020; 신광영, 2009). 또한, 자산 불평등은 세대 간 증여와 상속이 자산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세대 내 차이가 세대 간 차이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둘째, 세대 간 불평등 연구는 대체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인의 생애과정은 성별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세대 간 차이 또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은 여전히 M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은기수, 2018),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패턴은 출생 코호트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세대 내 계급 이동 패턴은 매우 다른데, 이는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Kye et al., 2022).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세대 간 불평등을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많은 세대 간 불평등 연구는 반복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 분석을 활용해 왔는데, 이러한 분석은 세대 간 불평등을 연령 패턴의 시계열적 변화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20대와 50대의 경제적 격차가 특정 기간에 증가하면 이를 세대 간 불평등이 증가한 증거로 해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세대 간 불평등을 보여주는 위해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세대 간 불평등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발견되는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아니라 각 세대의 생애과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세대를 출생 코호트로 측정하고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 차이를 세대 간 불평등으로 해석하고자 하는데,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 비교 역시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의 차이에는 출생 코호트 간 차이에 시기의 차이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흔히 연령-기간-코호트(Age-Period-Cohort, APC) 식별 문제(identification problem)라 불리는 이 문제는 연령, 기간, 코호트 중 둘을 알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각각의 효과를 따로 추정할 수 없는 문제를 지칭한다. 초기에는 선형 의존성(linear dependence)을 완화하기 위한 제한(constraints)을 부과하는 방식(Mason & Fienberg, 1985)이 활용되었고, 2000년대에는 제한 부여 방식의 자의성을 줄이는 방식들이 제안되었다(Yang & Land, 2008; Yang et al., 2008). 이러한 모형들은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Kye, 2012), 맞벌이 부부 비중 변화(김수정, 2015), 계층귀속감과 계층 상향이동 의식 변화(이왕원 외, 2016)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연구들에 따르면(Luo, 2013; Luo & Hodges, 2020), 1980년대에 제시된 제한 모형은 모형 적합을 위해 자의적인 제한(arbitrary constraints)를 부과한다는 약점이 있는데 2000년대에 제시된 정교화 모형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에는 연령-기간-코호트 경계 분석(APC bounding analysis) (Gowen et al. 2023; Lee, 2024)이 제시되었다.

이 모형은 분석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선형 의존성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출생 코호트 비교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보여준다.

## 제3절 자료와 분석방법

###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25차 자료(1998 - 2022)를 활용한다. 노동패널은 1998년에 조사가 시작된 패널조사 자료로 노동시장 경험의 생애과정을 통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이 연구는 각 조사연도의 일자리 정보를 이용해서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측정하고, 결합노동 시장지위의 세대 내 이동 패턴의 출생 코호트 간 차이를 비교한다. 이 연구는 1940-1999년 출생 코호트를 분석하며, 10년 단위 출생 코호트(1940-49, 1950-59, 1960-69, 1970-79, 1980-89, 1990-99)를 비교한다.

### 2. 방법

#### 가. 결합노동시장 지위 측정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이동을 분석하여 생애과정의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철승(2019b)은 결합노동시장 지위 개념을 제안했는데, 결합노동 지위는 1) 대기업 여부(기업 규모), 2) 정규직

여부(고용형태), 3)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세 가지 조건의 조합이 노동시장 지위를 결정한다고 가정하는데, 총 8가지의 조합이 가능한데, 이철승(2019b)은 이를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했다(〈표 5-1〉 참고). 물론 이 구분이 노동시장 지위를 적절하게 측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개념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보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직의 특성인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등을 고려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합노동시장 지위 개념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변화를 생애과정 속에서 파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1〉 결합노동시장 지위 구분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 존재	결합노동시장 지위
대기업	정규직	노조 있음	상
대기업	정규직	노조 없음	상
대기업	비정규직	노조 있음	중
대기업	비정규직	노조 없음	중
대기업 아님	정규직	노조 있음	상
대기업 아님	정규직	노조 없음	중
대기업 아님	비정규직	노조 있음	하
대기업 아님	비정규직	노조 없음	하

출처: “불평등의 세대,” 이철승, 2019a, 문화과지성사, p.98의 그림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1〉에 결합노동시장 지위 구분은 노동시장 지위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틀이지만, 이 개념은 비임금 근로자와 비고용 상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개인의 생애과정은 임금근로자 이외의 다양한 상태를 포함한다.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비고용 등 다양한 상태가 생애과정에는 존재하는데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 또한, 성별로 비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 따르면(Kye et al., 2022), 한

국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의 차이이며 계속 고용되고 있는 남녀의 세대 내 계급이동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분석대상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합노동시장 지위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철승(2019b)에서 제시한 결합노동시장 지위(상, 중, 하)에 무직과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를 별도의 범주로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노동시장 지위의 세대 내 이동에 대한 포괄적 기술(description)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임금근로자 상층, 중층, 하층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무직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나. 출생 코호트와 성별 비교

이 연구는 노동패널 1-25차 자료(1998-2022년)를 활용하여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생애과정을 통한 변화를 분석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특정 시점의 연령 집단 간의 노동시장 지위의 차이는 세대 간 차이와 불평등과 함께 연령 효과를 반영한다. 연령 집단 간 차이의 시계열적 변화는 세대 간 불평등을 보여주는 도구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출생 코호트별로 비교함으로써 노동시장 지위 변동의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40-99년 출생자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노동패널(1998-2022년)에서 각 출생 코호트는 관찰된 연령대가 다르다. 예를 들어, 1940년생은 58-82세에 관찰되었고, 1990년생은 18-32세에 관찰되었다. 두 출생 코호트는 같은 연령대에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다. 노동패

널이 25년 동안 수집되었지만, 출생 코호트들의 생애과정을 포괄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비슷한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은 비교적 장기간 비교할 수 있다.

〈표 5-2〉는 출생 코호트별로 노동패널 1-25차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연령대를 대략 보여준다. 물론, 이는 느슨한 구분이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은 노동패널 1차조사 당시(1998년)에 38세였으므로 30대의 생애과정은 대부분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1969년생의 50대 생애과정의 상당 부분이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표 2〉에 제시된 구분은 출생 코호트 비교를 위한 편리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표 5-2〉 출생 코호트별 20세 이후 관측 연령대(노동패널 1-25차 기준)

출생 코호트	20세 이후 관측 연령대
1940-49년생	50-69세
1950-59년생	40-69세
1960-69년생	30-59세
1970-79년생	20-49세
1980-89년생	20-39세
1990-99년생	20-29세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표 5-2〉를 통해서 코호트 비교가 가능한 연령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출생 코호트와 1960년대 출생 코호트의 40대와 50대의 생애과정은 노동패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 물론, 195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의 40대 초반의 생애과정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196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의 50대 후반의 생애과정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표 5-2〉에 제시된 인접한 두 출생 코호트

의 생애과정은 20년에 걸쳐서 비교할 수 있다. 인접한 세 개 코호트의 생애과정은 10년에 걸쳐서는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대의 생애과정은 1940-49년생, 1950-59년생, 1960-69년생을 비교할 수 있고, 20대의 생애과정은 1970-79년생, 1980-89년생, 1990-99년생을 비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각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 비교를 활용해서 세대 간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두 출생 코호트에 주목한다. 첫째, 1960년대 출생 코호트이다. 많은 연구가 '86' 세대가 상층 지위를 독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1960년대생들은 1950년대생이나 1970년대생들보다 상층 지위를 차지하는 빈도가 높고 기간이 길 것이다. 이러한 세 코호트 비교가 가능한 연령대는 40대이고, 30대는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비교가 가능하며, 50대는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의 비교가 가능하다.

둘째, 이 연구는 1990년대 출생 코호트에 주목한다. 세대 간 불평등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주목하는 세대는 1990년대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경력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이전 세대보다 크다는 게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와 연결해서 보면 이러한 논의는 1990년대생의 세대 내 노동시장 지위이동이 다른 세대보다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은 20대 중 후반 이후에 시작된다. 따라서, 세대 내 노동시장 지위이동의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30대 이상을 포함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대 출생 코호트의 30대 노동시장 경험은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는 1990년대 초반생들의 30대 초반의 경험만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출생 코호트의 20대 경험은 노동패널에서 어느 정

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0년대 출생 코호트의 20대 노동시장 지위이동 패턴을 1970-1980년대 출생 코호트와 비교한다. 이 비교는 물론 제한적이지만 1990년대생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다. 분석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험적 분석을 활용한다. 첫째, 성별 및 출생 코호트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 분포를 비교한다. 이 때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이철승(2019b)이 제시한 상/중/하 범주와 자영업 및 가족종사, 비고용 범주를 포함한다. 이 때 1960년대 출생 코호트와 1990년대 출생 코호트를 이들과 인접한 출생 코호트와 비교한다.

둘째, 성별 및 출생 코호트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이행률(transition rate)을 분석한다. 출생 코호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연령 분포 비교를 통해서 각 노동시장 지위의 빈도(prevalence)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 분석은 종단자료의 특성을 완전히 활용한 분석은 아니다. 이행률 분석은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상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세대 내 노동시장 지위이동의 패턴을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5개(상층 임금근로자, 중층 임금근로자, 하층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족종사자, 무직)로 구분하는데, 이 범주들 간에 가능한 이행은 총 20가지이다. 다만, 사례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20개 이행률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추정치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임금근로자를 하나로 묶어서 전체 분석대상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 무직이라는 세 범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연간 이행률(annual transition rate = # of events/person-years lived)을 분석한다.

셋째, 이 연구는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회귀모형(Random-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한다. 회귀식은 다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식 5-1)

$$\ln\left(\frac{\Pr(y=j)}{\Pr(y=ref)}\right) = \alpha + b_a age + b_{age^2} age^2 + \sum b_k x_{ka} + u_{ji} \quad (1)$$

$$u_{ji} \sim N(0, var_u) \quad (2)$$

(y: 결합노동시장 지위, ref: 비고용, x: 독립변수, t: 연령)

이 연구는 수식에 제시한 것처럼 비고용을 기준범주로 활용한다. 즉, 한 개인이 특정 시점에 비고용이 아닌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가진 로짓(로그 오즈)을 연령, 연령 제곱과 다른 변수의 선형 함수로 모형화한다.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므로 상수항은 개인 및 결합노동시장 지위마다 다른데( $\alpha + u_{ji}$ ), 개인들의 상수항은 평균이 0이고  $var_u$ 이 분산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분산은 결합노동시장 지위마다 다를 수 있는데( $var_{u_{ji}}$ ), 이 연구에서는 모든 결합노동시장의 분산이 동질적이라 가정한다.<sup>7)</sup>

회귀분석 모형의 분석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 첫째, 출생 코호트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분포 비교는 코호트의 변화를 기술

7) 분산이 종속변수의 범주마다 다르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범주가 많아서(5개), 모형을 추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자는 STATA 17.0을 활용해서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과 연령의 제곱항만을 포함한 모형을 추정하려 했는데, 4시간이 지나도 모형이 수렴하지 않았다. 한편, 모든 범주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은 비교적 빨리 모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분산에 대한 가정은 모형 추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분석결과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해서 이 연구는 종속변수 범주에 따른 분산의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모형의 결과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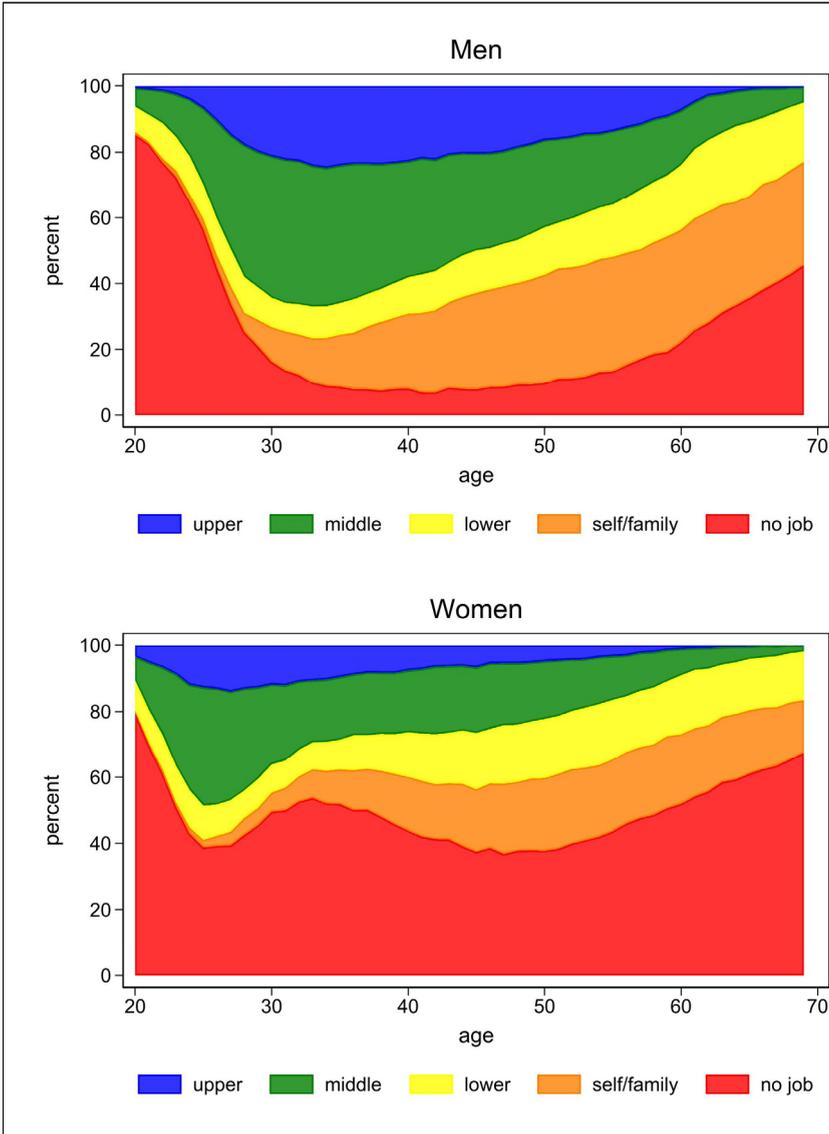
적으로(descriptively) 보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요약해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코호트 간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회귀모형의 활용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준다. 둘째, 성 및 출생 코호트에 따른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분포의 차이는 각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 중의 하나는 교육수준이다. 회귀모형을 활용하면 출생 코호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차이가 교육수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제4절 분석결과

### 1.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 분포

우선, 분석대상 전체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분포를 살펴본다. [그림 5-1]은 1940-99년에 태어난 남녀가 1998-2022년에 경험한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40세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1998-2022년에 40세인 경험이 있는 1958-82년 출생 코호트의 40세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평균을 제시한다. 이처럼,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분포의 추정에 포함되는 출생 코호트는 연령대마다 다르다. 아래에 제시하는 [그림 5-2]-[그림 5-6]의 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것이다.

[그림 5-1] 결합노동시장 지위 연령분포(1998 - 2022)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연령에 따라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남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층의 비율은 30대와 40대에는 증가한 후 이후 감소한다. 중층의 비율은 이보다 빠른 20-30대에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다. 반면, 하층의 비중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30대 후반 이후 증가한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20대에는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이지만 30대 후반부터 증가해서 50대 이후에는 50대에는 가장 큰 범주이다. 무직자의 비중은 40대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에 증가하는데, 50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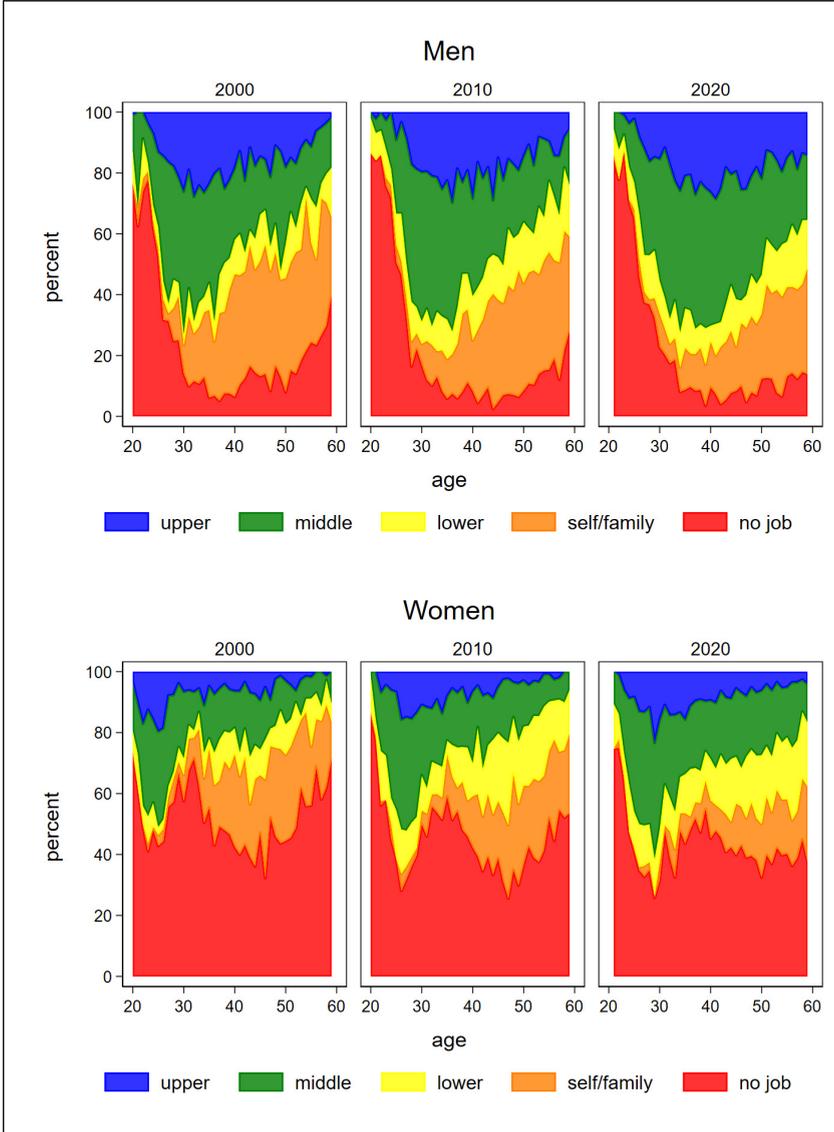
여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분포는 남성과 뚜렷이 구분된다. 우선, 비고용의 비중이 20대를 제외하면 남성보다 매우 많다. 여성 비고용의 연령 패턴은 결혼과 출산을 전후로 한 노동시장 이탈(30대 초중반)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 패턴을 보면 상층과 중층은 20대 후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하고 있으며, 하층의 비중은 30대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남성보다 적지만 30대 후반 이후 2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분석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이동 패턴이 매우 다름을 보여주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Kye et al., 2022).

## 2. 시기별 비교: 2000, 2010, 2020

[그림 5-2]는 세 시점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는 해당 시점의 단면을 보여준다. 인구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간 기대수명(period life expectancy)나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와 같이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러 출생 코호트의 경험을 합성해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생애과정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는 없다. 우선 남성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2010년대를 지나면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층과 중층의 비율은 다소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50대의 상층 및 중층의 비율이 증가했다. 50대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고용의 비중도 2020년에 감소한 반면, 하층의 비중은 2000년보다 2010년과 2020년에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분포 변화는 남성과 비슷해서 상층과 중층의 증가,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감소, 비고용의 감소 등이 관찰된다. 단 남성과 여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각 시점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의 변화는 출생 코호트들의 생애과정이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출생 코호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분포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결합노동시장 지위 연령분포의 변화(2000, 2010,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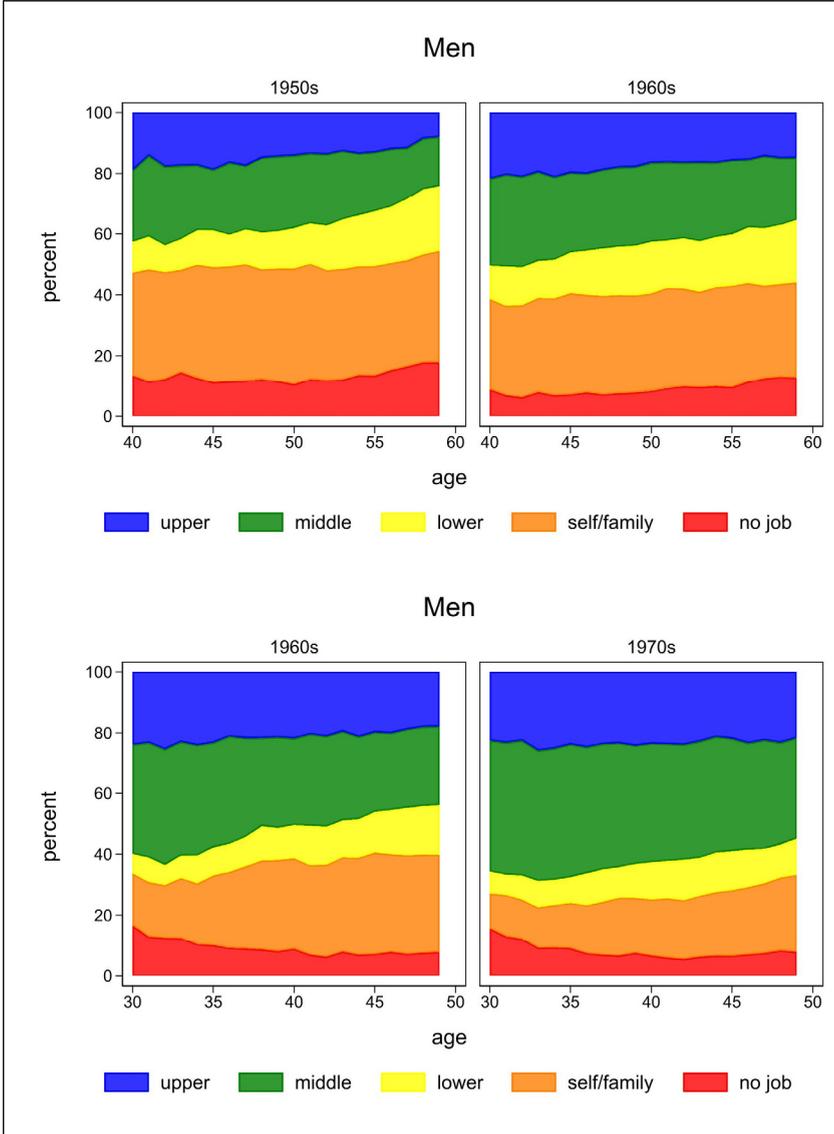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 3. 출생 코호트 비교: 1960년대생

먼저 1960년대 출생 코호트를 인접한 출생 코호트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5-3] 상단의 그래프는 1960년대생과 1950년대생 남성의 40-50대 생애과정을 비교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1960년대에 태어난 남성들이 그들의 10년 전배 세대보다 40-50대에 상층과 지위를 차지하는 빈도가 높고 하층 지위를 덜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나 비고용의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5-3]의 하단은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30-40대의 생애과정을 비교하고 있다.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1970년대생 남성들이 1960년대생들보다 30-40대에 더 유리한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70년대생들이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1960년대생들보다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960년대생들의 좋은 일자리 독과점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3] 결합노동시장 지위 연령분포, 1960년대생과 인접 출생 코호트 비교(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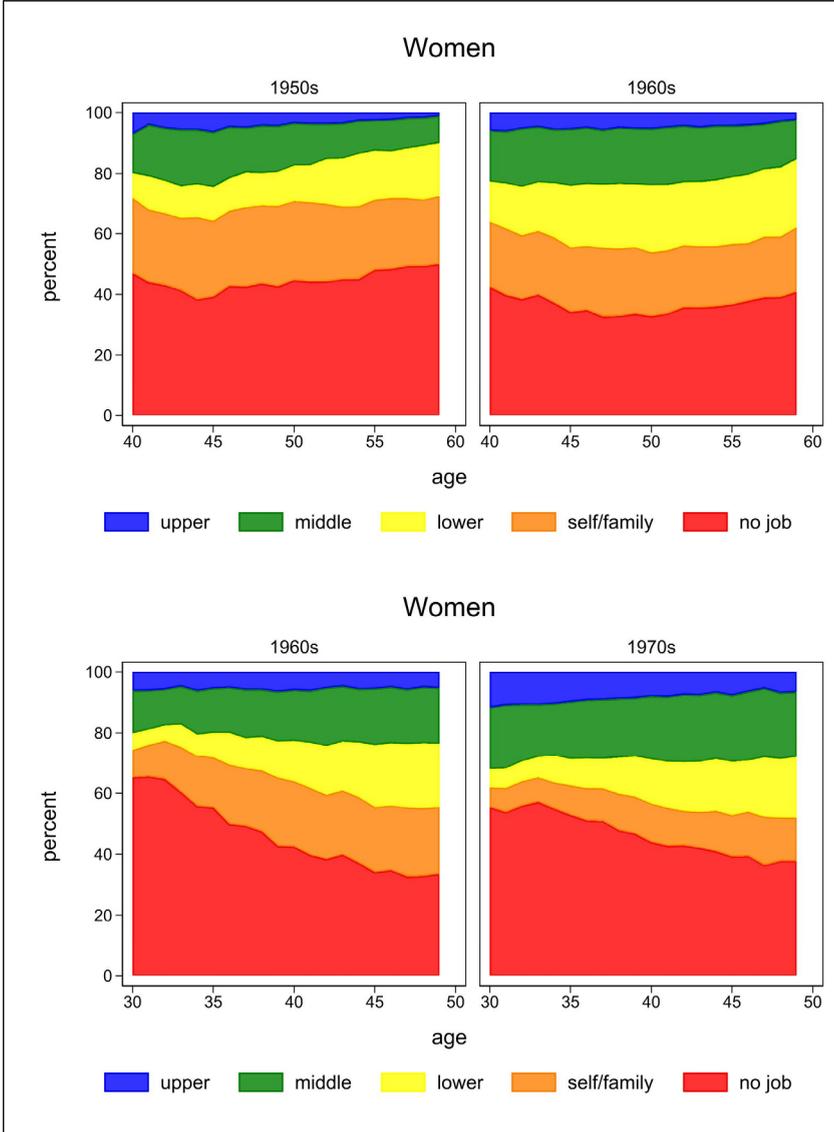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그림 5-4]의 1960년대생 여성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별 분포는 인접 출생 코호트와 비교하고 있다. 1960년대생 여성들은 1950년대생들보다 40-50대에 상층, 중층, 하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더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와 비고용의 비중은 낮았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1960년생과 1970년대생들의 30-4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의 차이보다 작다. 즉, 1970년대생들은 1960년대생들보다 상층과 중층 지위를 차지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으며, 1970년대생들의 하층,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960년대생들보다 감소했다. 흥미롭게도 1970년대생들의 30-40대 비고용 비율은 이전 출생 코호트보다 현저히 높다. 이전 코호트는 출산 시기가 일렀기 때문에 30-40대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1970년대생 여성은 30-40대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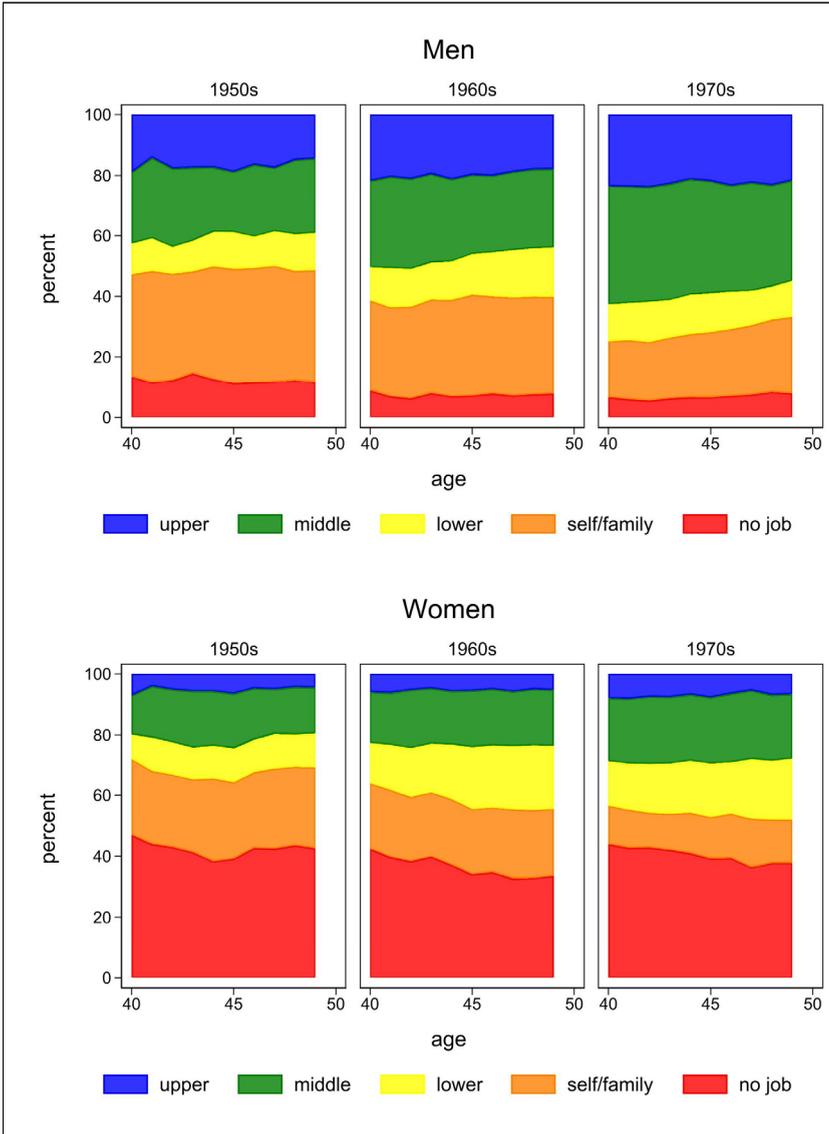
[그림 5-5]는 세 출생 코호트(1950년대생,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의 40대의 경험을 비교해서 제시한다. 이 정보는 [그림 5-3]과 [그림 5-4]에 제시한 결과와 같은 정보이지만 세 코호트의 경험을 한 눈에 보여 준다. 남성과 여성모두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상층과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층 지위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출생 코호트 차이가 여성보다 뚜렷하다.

[그림 5-4]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1960년대생과 인접 출생 코호트 비교(여성)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그림 5-5] 출생 코호트별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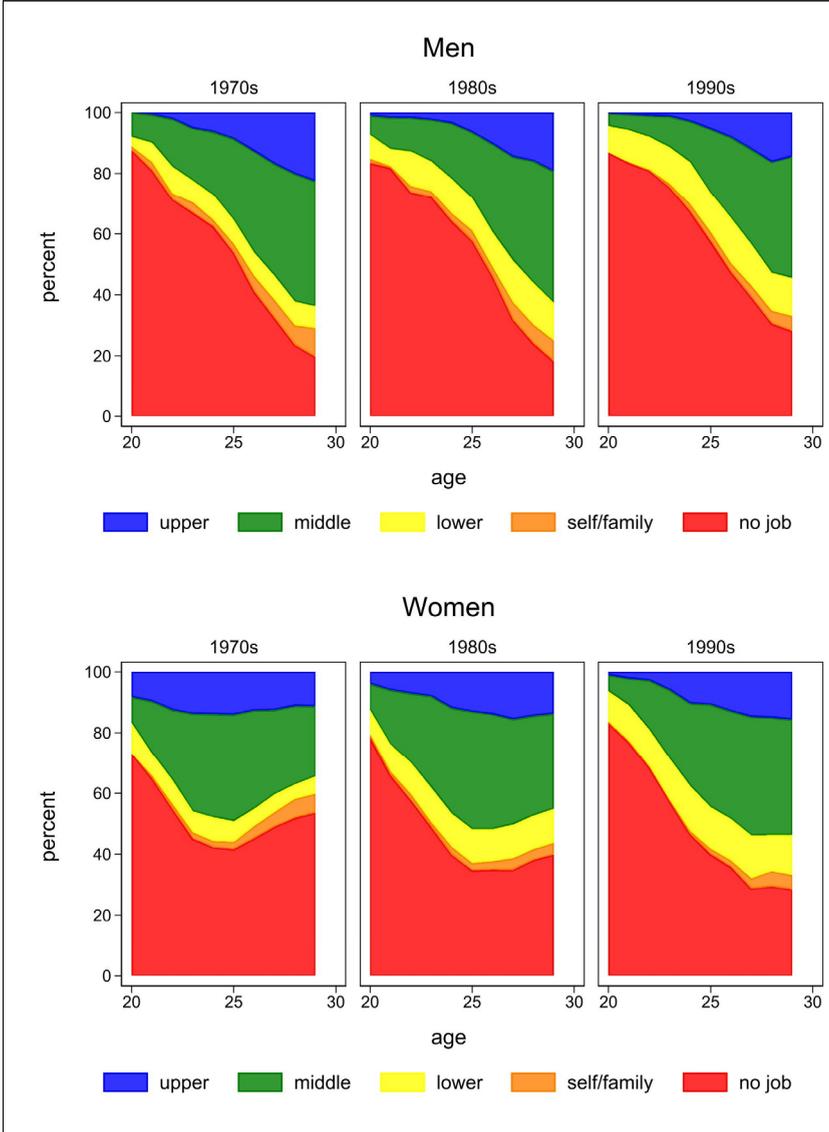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그림 5-3]-[그림 5-5]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1960년대생들인 1950년대생들보다 상위의 노동시장 지위를 점유했으며 1970년대생들은 1960년대생들보다 높은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차이는 1960년대생과 1950년대생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60년대생들이 다른 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자원을 많이 점유했다는 주장이 적어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측면에서는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상층 및 중층 지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경제성장 혹은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960년대 출생 코호트가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 4. 출생 코호트 비교: 1990년대생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는 1990년대생들의 생애기회의 악화이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생들의 생애기회는 이전 세대보다 악화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의 원인으로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형성 기회의 축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생애기회의 악화는 1990년대생들의 가족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그림 5-6]은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우선, 남성의 2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를 보면, 최근 출생 코호트 올수록 상층, 중층,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했고, 중층과 비고용의 비중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생 남성의 2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이전 세대보다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5-6] 출생 코호트별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20대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여성의 2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의 출생 코호트에 따른 변화는 남성과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1990년대생 여성의 상층의 비중은 20대 초반에는 이전 출생 코호트보다 줄었지만 20대 후반에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층의 비율은 20대 후반에는 이전 세대보다 많았으며, 하층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0대 여성의 자영업/무급가족종사 비율은 모든 코호트에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1990년대생의 비고용 비율은 20대 초반에는 높았지만 20대 후반에는 이전 세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1970년대생 여성의 비고용 비율은 20대 중반 이후 증가했고, 1980년대생은 유지된 반면 1990년대생의 비고용 비중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했다. 이러한 출생 코호트 간의 차이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지연되면서 1990년대생 여성들이 20대 후반까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생들의 낮은 상층 비율과 높은 비고용 비율은 대학진학률 상승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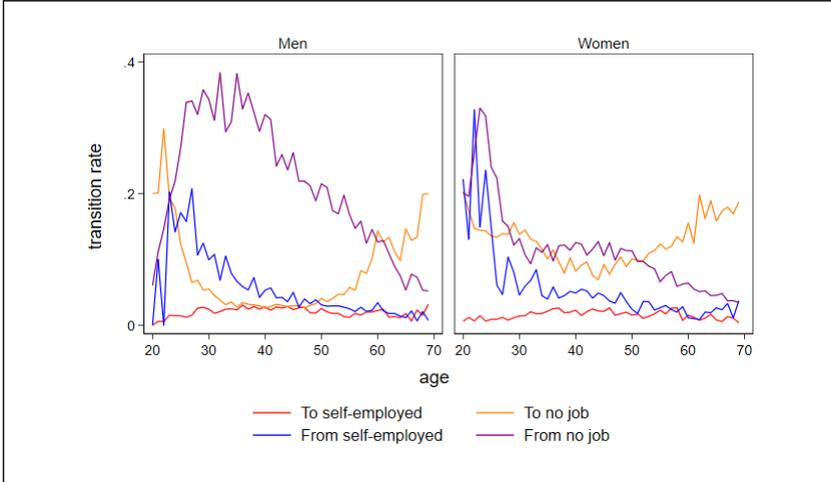
[그림 5-6]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1990년대생들이 20대에 1970년대생이나 1980년대생들보다 상층과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덜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세대의 생애기회 악화라는 논의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당 부분 대학 진학률 상승에 의해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출생 코호트는 이전 세대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다. 따라서, 이들의 2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나 지위를 나타내는 불완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20대 후반에 상층과 중층 지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서 이전 세대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후 생애과정에서 이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이전 세대보다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 5. 연령별 이행률 분석

지금까지 코호트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분석은 출생 코호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생애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세대별 생애기회의 차이를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개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동적인 변화를 그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노동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해서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을 동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이행률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5-7]은 전체 자료를 활용해서 추정한 연령별 상태 이동률을 제시한다. 방법론 섹션에서 논의했듯이 5개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간의 이행률을 모두 추정하면 추정치의 신뢰성 확보의 결과 해석이 어려우므로 상층, 중층, 하층 임금근로자를 한 범주로 묶어서 이행률을 분석했다. 따라서, 임금근로, 자영업/무급가족종사, 비고용이라는 세 개의 범주 간의 이동이 가능하며 가능한 이동률은 여섯 가지가 있지만, 결과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임금근로 이외의 상태로의 전입과 임금근로 이외의 상태에서부터의 전출을 보여주는데,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범주와 연결된 전입과 전출의 상대적 빈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1) 임금근로와 비고용→자영업/무급가족종사 (To self-employed)
- 2) 임금근로와 자영업/무급가족종사 → 비고용 (To no job)
- 3)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임금근로와 비고용 (From self-employed)
- 4) 비고용 → 임금근로와 자영업/무급가족종사 (From no job)

[그림 5-7] 연령별 이행률, 전체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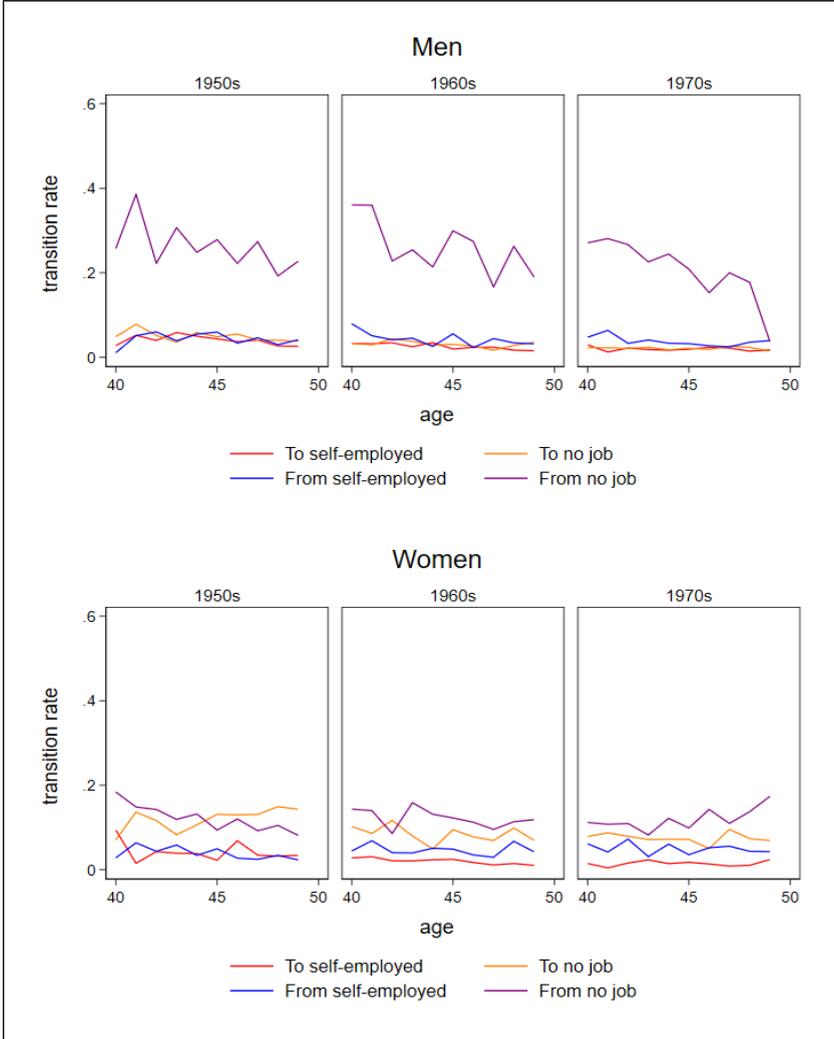
먼저, 자영업/무급종사로의 이행은 남녀 모두 20-60대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이행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 자영업/무급종사로부터의 이행은 20대에 증가했다가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인데, 20대 초반을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는 크지 않다. 셋째, 비고용으로의 이행은 남녀 모두 20대 초반에 높다가 이후에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이후에 증가한다. 비고용으로의 이행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낮는데 60대 이후에는 성별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비고용으로부터의 이행률은 30대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다.

[그림 5-7]에 제시된 결과는 1940-99년생의 경험을 합쳐서 제시한 것인데, 노동시장 지위의 이행률 패턴은 출생 코호트마다 다를 수 있다. 1960년 출생 코호트와 1990년 출생 코호트의 경험을 인접 출생 코호트와 비교하기 위해서 40대의 이행률과 20대의 이행률을 제시한다. [그림

5-8]은 40대의 세 개 코호트의 40대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이행률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고용 상태로부터의 이행을 제외하면 다른 범주는 전반적으로 모두 높지 않은 수준이며, 이들 범주의 출생 코호트 간의 차이 역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비고용 상태로부터의 이행률은 다른 이행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행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특히 1970년생들의 이행률은 49세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출생 코호트의 49세 이행률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 출생 코호트의 일부만 이 연령대에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적은 표본 수로 인해 추정치의 신뢰성이 낮아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고 실제 1970년대생이 49세에 비고용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40대 남성의 이행률 패턴은 출생 코호트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8] 하단에 제시된 결과는 40대 여성의 이행률을 보여주는데, 그 패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 가지 이행률 모두 출생 코호트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둘째, 여성의 비고용으로부터의 이행률은 남성보다 낮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비고용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비고용상태로의 이행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비고용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고용 상태로 이행한 여성은 남성보다 비고용 상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자영업/무급가족종사로의 이행은 모두 남녀 간에 별 차이가 없다. [그림 5-8]에 제시된 결과는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남녀 모두 40대 이행률은 출생 코호트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1960년대생들이 인접 출생 코호트보다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림 5-8] 연령별 이행을 출생 코호트 비교,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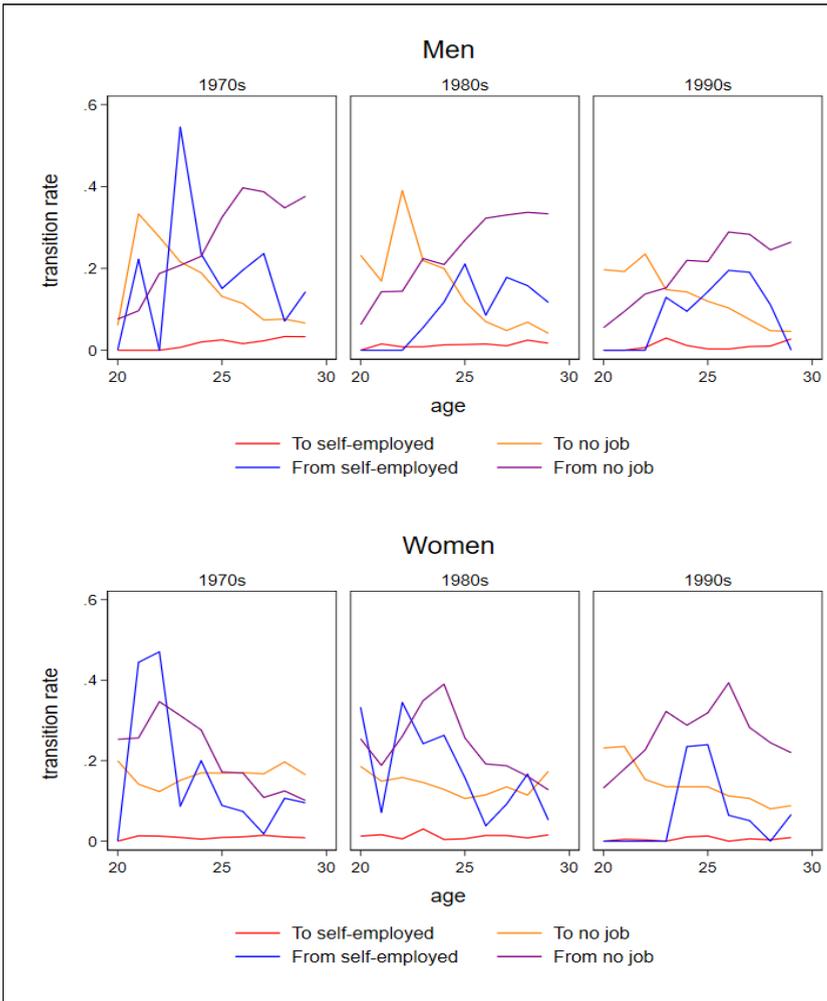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다음으로 [그림 5-9]는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의 20대 이행을 비교한다. 자영업으로의 이행률은 모든 코호트에서 낮고 안

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다른 이행률들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9] 연령별 이행률 출생 코호트 비교, 20대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추정치의 이러한 불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남성의 비고용으로부터의 이행률(from no job)과 비고용으로의 이행률(to no job)은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오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20대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이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동시에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진입의 감소는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노동시장 이탈 감소는 해석이 다소 어렵다. 추정치의 불안정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경험을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 20대 여성의 이행률에서는 이러한 출생 코호트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 6. 확률효과 다항로짓(Random-effect multi-nomial logit) 분석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들은 출생 코호트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별 분포 및 이행률을 기술적으로(descriptively) 제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서 관찰된 패턴을 보여주는데 출생 코호트들 간의 차이를 간명하게(parsimoniously) 제시하지 못한다. 회귀모형의 계수들은 출생 코호트 간 차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이 연구는 패널 자료의 특성과 여러 범주를 포함하는 종속변수의 특성을 반영해서 확률효과 다항로짓 모형을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기본모형(모형 1)은 연령, 연령 제곱, 출생 코호트(1940년대생 기준)을 포함하는데, 이 모형은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 발견할 수 있는 각 출생 코호트 간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차이를 보여준다. 모형 2는 교육수준(고졸 미만 기준)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데, 모형 1과 모형 2의 코호트 회귀계수의 비교는 각 출생 코호트 간의 차이가 교육수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 보여

준다. <표 5-3>은 남성 전체, <표 5-4>은 여성 전체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5-3>과 <표 5-4>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모든 출생 코호트의 결합노동 시장 지위의 차이를 보여준다. 계수 해석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이는 비교가 불가능한 코호트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40년대생과 1990년대생은 노동패널에서 같은 연령대에 관찰된 적이 없으므로 이들의 생애과정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표 5-3>과 <표 5-4>에 제시된 결과는 이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 분석은 모든 출생 코호트의 연령 패턴은 동일하고 코호트들의 상수항만 다르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 5-3>과 <표 5-4>의 결과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코호트들의 차이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엄밀한 해석은 같은 연령대의 자료가 존재하는 코호트들의 비교를 제시하는 <표 5-5>~<표 5-8>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 가. 전체 출생 코호트 비교

<표 5-3>은 전체 남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각 출생 코호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용에 비해서 상층이나 중층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197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단,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의 차이는 크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각 출생 코호트 회귀계수는 상층과 중층이 비슷한데, 이는 중층에 비해 상층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출생 코호트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비교용에 비해서 하층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1980년대생까지 상승하다가 1990년대생에서는 감소했는데,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의 차이는 크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층 지위의 회귀계수는 대

체로 상층과 중층 지위의 회귀계수보다 다소 작는데, 이는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하층 지위보다는 중층이나 상층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다소 높았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비고용에 비해서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될 가능성은 1960년대생이 가장 높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1960년대생과 1970년생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3〉의 모형 2는 교육수준을 포함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출생 코호트 회귀계수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출생 코호트 간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한데, 이는 다항로지트 모형과 같은 비선형 모형의 종속변수의 스케일이 모형이 포함한 변수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교는 교육수준의 변화로 인한 출생 코호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수준 회귀계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집단(4년제 미만)을 제외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고용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높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모형 1과 모형 2의 출생 코호트 회귀계수의 차이를 비교하면 최근 출생 코호트 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변화에 교육수준이 중요한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상층과 중층 지위의 회귀계수는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 작아진 반면 하층의 회귀계수는 커졌다. 이는 모형 1에서 관찰한 최근 출생 코호트들이 상층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가 교육수준의 향상 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 거꾸로 말하면 교육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비교하면 최근 출생 코호트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우위는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3〉 확률효과 다항로지 모형, 전체 남성

모형 1								
변수	상층 vs.비고용		중층 vs.비고용		하층 vs.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0.978	0.010	0.822	0.009	0.665	0.009	0.860	0.009
연령 제곱	-0.011	0.000	-0.009	0.000	-0.007	0.000	-0.009	0.000
출생 코호트								
1950년대생	0.642	0.108	0.465	0.101	0.815	0.100	0.374	0.098
1960년대생	1.563	0.112	1.300	0.106	1.523	0.106	0.943	0.104
1970년대생	1.979	0.118	1.891	0.112	1.750	0.113	0.910	0.110
1980년대생	1.862	0.125	1.833	0.119	1.807	0.122	0.478	0.119
1990년대생	0.728	0.141	0.803	0.130	1.356	0.135	-0.786	0.144
상수항	-20.998	0.237	-17.145	0.211	-15.644	0.230	-18.558	0.231
var(u)	5.953(0.151)							

모형 2								
변수	상층 vs.비고용		중층 vs.비고용		하층 vs.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0.881	0.010	0.743	0.009	0.613	0.009	0.794	0.009
연령 제곱	-0.010	0.000	-0.008	0.000	-0.006	0.000	-0.008	0.000
출생 코호트								
1950년대생	0.510	0.111	0.401	0.104	0.917	0.104	0.379	0.102
1960년대생	1.128	0.119	1.088	0.112	1.773	0.113	0.924	0.110
1970년대생	1.290	0.127	1.529	0.121	2.112	0.123	0.843	0.119
1980년대생	1.120	0.137	1.485	0.131	2.383	0.134	0.502	0.131
1990년대생	-0.037	0.153	0.431	0.142	1.913	0.147	-0.783	0.155
교육수준								
고졸	0.964	0.084	0.617	0.080	-0.082	0.079	0.335	0.078
4년제 미만	0.233	0.093	-0.367	0.088	-1.653	0.089	-0.923	0.088
4년제 졸 이상	2.393	0.091	1.356	0.087	-0.548	0.089	0.588	0.086
상수항	-19.383	0.249	-15.508	0.221	-14.195	0.240	-16.986	0.240
var(u)	6.524(0.169)							

주: N = 139,665 (14,176)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표 5-4〉는 전체 여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각 출생 코호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 남성의 패턴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성의 출생 코호트 회귀계수는 1970년대생 혹은 1980년대생까지 증가한 후 감소한 반면 여성의 출생 코호트 회귀계수는 상층, 중층, 하층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비고용에 비해서 여성이 임금근로자에 될 가능성이 결합노동시장 지위와 상관없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성은 상층과 중층의 회귀계수가 하층보다 큰데, 여성은 하층의 회귀계수가 가장 크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비고용에 비해서 자영업/무급가족종사에 포함될 가능성은 1960년대생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표 5-4〉의 모형 2는 교육수준을 포함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회귀계수를 보면 4년제 졸업 이상이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졸 여성은 상층과 중층을 차지할 가능성은 높지만 하층을 차지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모형 1과 모형 2의 출생 코호트 회귀계수의 차이 비교는 교육수준의 향상이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세대보다 비고용에 비해서 상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인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준다. 비고용보다 중층을 차지할 가능성은 교육수준 변화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고용에 비해 하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 더 커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같다면 예전 출생 코호트보다 최근 출생 코호트가 비고용보다 하층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5-3〉과 〈표 5-4〉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인 패턴 변화를 보여주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비교할 자료가 없는 코호트들의 생애과정을 모든 코호트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 패턴이 같다는 가정 하에 비교했다는 약점을 지닌다. 아래에 제시하

는 분석결과는 동일한 연령대에 관찰된 자료가 있는 코HORT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

<표 5-4>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전체 여성

모형 1								
변수	상층 vs. 비고용		중층 vs. 비고용		하층 vs. 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 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0.378	0.009	0.304	0.007	0.300	0.007	0.424	0.008
연령 제곱	-0.005	0.000	-0.003	0.000	-0.003	0.000	-0.004	0.000
출생 코HORT								
1950년대생	0.986	0.143	1.079	0.109	1.223	0.105	0.536	0.103
1960년대생	1.565	0.145	1.719	0.111	2.022	0.107	0.821	0.105
1970년대생	1.998	0.148	1.984	0.113	2.074	0.110	0.466	0.107
1980년대생	2.303	0.154	2.287	0.120	2.459	0.118	0.377	0.117
1990년대생	2.535	0.168	2.729	0.134	3.246	0.135	0.194	0.153
상수항	-11.038	0.219	-9.082	0.168	-10.642	0.186	-11.615	0.204
var(u)	8.382(0.191)							

모형 2								
변수	상층 vs. 비고용		중층 vs. 비고용		하층 vs. 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 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0.295	0.010	0.258	0.007	0.263	0.007	0.385	0.008
연령 제곱	-0.004	0.000	-0.003	0.000	-0.002	0.000	-0.004	0.000
출생 코HORT								
1950년대생	0.922	0.147	1.149	0.112	1.378	0.107	0.674	0.105
1960년대생	1.288	0.156	1.857	0.121	2.450	0.117	1.175	0.115
1970년대생	1.408	0.164	2.101	0.130	2.732	0.127	0.934	0.125
1980년대생	1.548	0.172	2.348	0.138	3.163	0.137	0.824	0.136
1990년대생	1.758	0.186	2.824	0.153	4.039	0.154	0.711	0.169
교육수준								
고졸	0.409	0.091	-0.160	0.077	-0.567	0.076	-0.511	0.075
4년제 미만	0.012	0.102	-0.850	0.088	-1.720	0.089	-1.490	0.089
4년제 졸업 이상	2.115	0.102	0.590	0.089	-0.419	0.089	0.106	0.089
상수항	-9.600	0.227	-8.038	0.173	-9.618	0.190	-10.591	0.207
var(u)	8.809(0.203)							

주: N = 145,974 (14,300)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 나. 출생 코호트 비교: 1960년대생과 인접 코호트

〈표 5-5〉는 1950년대생, 1960년대생, 1970년대생 남성의 40대 결합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분석은 〈표 5-3〉과 〈표 5-4〉에 제시된 결과가 안고 있는 약점을 갖고 있지 않다. 우선, 모형 1의 결과를 보면 뚜렷한 출생 코호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 남성이 비고용에 비해 상층, 중층, 하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1950년대생<1960년대생<1970년대생 순으로 나타났다. 상층, 중층, 하층 지위의 1960년대생 회귀계수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이는 40대에 1960년대생들은 세 가지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비슷하게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1970년대생의 회귀계수는 하층<상층<중층 지위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1960년대생보다 1970년대생들이 40대에 비고용이 아니라 임금근로자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에서 중층과 상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비고용에 비해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될 가능성은 1960년대생이 가장 높지만 1970년대생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

〈표 5-5〉의 모형 2는 교육수준을 포함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과 비교할 때 출생 코호트의 회귀계수가 상층과 중층 지위의 경우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하층은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시장 지위에 있어 1970년대생이 1960년대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 대한 주된 영향 요인으로 교육수준의 향상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상층 지위에 대한 1970년대생의 회귀계수는 1960년대생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1970년대생들이 1960년대생보다 비고용에 비해 상층 지위를 차지한 중요한 이유가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중층 지위에 대한 회귀계수는 두 출생 코호트가 여전히 다르지만 그 차이는 교육수준을

통제하기 이전보다 감소했다. 비고용에 비해 자영업/무급가족종사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의 출생 코호트 간 차이 또한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 줄어들었다.

〈표 5-5〉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남성 40대

모형 1								
변수	상층 vs. 비고용		중층 vs. 비고용		하층 vs. 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 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0.269	0.387	0.091	0.378	0.149	0.404	0.350	0.378
연령 제곱	-0.003	0.004	-0.001	0.004	-0.001	0.005	-0.004	0.004
출생 코호트								
1960년대생	1.151	0.150	1.126	0.149	1.196	0.152	0.846	0.148
1970년대생	1.644	0.148	1.781	0.147	1.466	0.150	0.818	0.146
상수항	-3.002	8.606	1.345	8.390	-1.463	8.984	-4.719	8.410
var(u)	16.277(1.169)							

모형 2								
변수	상층 vs. 비고용		중층 vs. 비고용		하층 vs. 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 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0.200	0.390	0.052	0.378	0.191	0.404	0.332	0.378
연령 제곱	-0.002	0.004	-0.001	0.004	-0.002	0.005	-0.003	0.004
출생 코호트								
1960년대생	0.577	0.154	0.725	0.153	1.185	0.156	0.541	0.152
1970년대생	0.696	0.160	1.117	0.159	1.561	0.163	0.341	0.158
교육수준								
고졸	1.771	0.170	1.278	0.164	0.503	0.164	1.173	0.162
4년제 미만	2.431	0.213	1.685	0.208	-0.021	0.212	1.295	0.207
4년제 졸업 이상	3.246	0.193	2.151	0.188	-0.213	0.193	1.574	0.188
상수항	-3.244	8.654	1.067	8.394	-2.702	8.987	-5.240	8.400
var(u)	15.007(1.094)							

주: N = 33,999 (5,662)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표 5-6〉은 1950년대생, 1960년대생, 1970년대생 여성의 40대 결합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40대 여성이 비고용에 비해 상층, 중층, 하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1950년대생<1970년대

생<1960년대생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패턴과 다르다. 1970년 대생 여성이 1960년대 여성보다 모든 지위의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출생 코호트 간 생애과정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6>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여성 40대

모형 1								
변수	상층 vs.비고용		중층 vs.비고용		하층 vs.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0.867	0.355	1.287	0.273	1.297	0.282	0.912	0.273
연령 제곱	-0.009	0.004	-0.013	0.003	-0.013	0.003	-0.009	0.003
출생 코호트								
1960년대생	1.007	0.159	1.065	0.149	1.511	0.151	0.815	0.148
1970년대생	0.851	0.147	0.838	0.138	1.021	0.140	-0.098	0.138
상수항	-22.325	7.872	-31.093	6.051	-32.550	6.252	-22.559	6.060
var(u)	23.204(1.424)							

모형 2								
변수	상층 vs.비고용		중층 vs.비고용		하층 vs.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0.805	0.360	1.284	0.273	1.316	0.282	0.912	0.273
연령 제곱	-0.008	0.004	-0.013	0.003	-0.013	0.003	-0.009	0.003
출생 코호트								
1960년대생	0.911	0.170	1.323	0.159	2.028	0.161	1.156	0.158
1970년대생	0.500	0.176	1.196	0.165	1.942	0.168	0.419	0.165
교육수준								
고졸	-0.406	0.176	-0.896	0.158	-1.346	0.158	-1.062	0.157
4년제 미만	0.149	0.218	-0.745	0.200	-1.853	0.202	-1.188	0.201
4년제 졸 이상	1.191	0.202	-0.556	0.188	-1.686	0.190	-0.744	0.187
상수항	-21.161	7.976	-30.678	6.054	-32.299	6.269	-22.091	6.062
var(u)	23.060(1.409)							

주: N = 33,583 (5,539)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즉,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지연되면서 여성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연령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는 더욱 두드러진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이 1970년생 여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1960년대 여성보다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40대 노동시장 이탈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상층, 중층, 하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5〉와 〈표 5-6〉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0대 남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오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교육수준의 향상이 이러한 상승의 원인이다. 40대 여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1970년대생이 1960년대생보다 낮았는데 이는 결혼, 출산, 노동시장 이탈 시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960년대생 남성이 인접한 다른 출생 코호트보다 유리한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점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는 흔히 논의되는 '86' 세대의 우월한 지위 독점이라는 논의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반면, 1960년대생 여성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인접 출생 코호트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생애과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출생 코호트 비교: 1990년대생과 인접 코호트**

〈표 5-7〉은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 남성의 2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대 남성이 비고용에 비해 상층과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오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고용에 비해 하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1980년대생>1990년대생>1970년대생으로 나타

났다.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된다. 즉, 1990년대생 남성이 이전 출생 코호트와 같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다면 비고용에 비해 상층이나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생 남성들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이전 세대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7〉 확률효과 다항로지 모형, 남성 20대

모형 1								
변수	상층 vs.비고용		중층 vs.비고용		하층 vs.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1.207	0.325	0.140	0.189	-0.394	0.203	-0.348	0.354
연령 제곱	-0.008	0.006	0.010	0.004	0.017	0.004	0.020	0.007
출생 코호트								
1980년대생	-0.410	0.104	-0.258	0.096	0.261	0.106	-0.343	0.120
1990년대생	-0.902	0.110	-0.688	0.098	0.122	0.106	-0.960	0.132
상수항	-26.845	4.193	-10.217	2.370	-2.436	2.509	-6.237	4.499
var(u)	4.402(0.202)							

모형 2								
변수	상층 vs.비고용		중층 vs.비고용		하층 vs.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1.354	0.318	0.582	0.192	0.058	0.207	0.148	0.357
연령 제곱	-0.014	0.006	0.000	0.004	0.007	0.004	0.009	0.007
출생 코호트								
1980년대생	-0.240	0.107	0.042	0.099	0.588	0.109	0.039	0.124
1990년대생	-0.816	0.113	-0.437	0.101	0.425	0.110	-0.611	0.136
교육수준								
고졸	1.706	0.328	0.575	0.233	0.155	0.241	0.660	0.282
4년제 미만	0.138	0.323	-1.306	0.227	-1.621	0.235	-1.444	0.278
4년제 졸업 이상	1.832	0.326	-0.137	0.233	-0.979	0.245	-0.694	0.289
상수항	-28.109	4.112	-14.513	2.399	-6.814	2.559	-11.486	4.534
var(u)	4.467(0.210)							

주: N = 22,048 (4,954)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s>

〈표 5-8〉은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 여성의 20대 결합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5-7〉에 제시한 20대 남성의 분석 결과와는 다른 패턴이 관찰된다. 20대 여성이 비고용에 비해 상층과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1970년대생<1990년대생<1980년대생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층의 경우 1990년대생과 1970년생의 차이는 매우 작다.

〈표 5-8〉 확률효과 다항로지트 모형, 여성 20대

모형 1								
변수	상층 vs.비고용		중층 vs.비고용		하층 vs.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3.797	0.194	4.224	0.148	2.517	0.178	2.932	0.349
연령 제곱	-0.070	0.004	-0.080	0.003	-0.047	0.004	-0.051	0.007
출생 코호트								
1980년대생	0.392	0.094	0.557	0.087	0.903	0.099	0.142	0.121
1990년대생	0.042	0.099	0.303	0.090	1.004	0.100	-0.267	0.136
상수항	-52.169	2.405	-56.283	1.828	-35.441	2.178	-44.143	4.396
var(u)	3.971(0.175)							

모형 2								
변수	상층 vs.비고용		중층 vs.비고용		하층 vs.비고용		자영업/가족종사 vs.비고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3.029	0.196	3.705	0.151	1.999	0.181	2.362	0.349
연령 제곱	-0.057	0.004	-0.070	0.003	-0.038	0.004	-0.041	0.007
출생 코호트								
1980년대생	0.340	0.101	0.527	0.095	0.838	0.106	0.133	0.127
1990년대생	-0.104	0.107	0.211	0.099	0.877	0.108	-0.312	0.143
교육수준								
고졸	2.054	0.366	1.686	0.281	0.638	0.292	0.605	0.342
4년제 미만	1.297	0.362	1.006	0.277	0.193	0.287	-0.316	0.339
4년제 졸업 이상	3.348	0.365	2.573	0.281	1.792	0.292	1.422	0.342
상수항	-43.580	2.471	-50.608	1.896	-28.856	2.237	-36.630	4.415
var(u)	4.737(0.210)							

주: N = 24,415 (4,973)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노동연구원, 1-25차, 2024. 7. 25. 다운로드  
드. <https://www.kli.re.kr/klips>

반면, 비고용에 비해 하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1970년대생<1980년대생<1990년대생으로 나타났는데,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는 1980년대생 여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70년대생과 1990년대생보다 높았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이러한 출생 코호트 간 차이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비고용에 비해서 20대 여성이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가 될 가능성은 1990년대생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7〉과 〈표 5-8〉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대 남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오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제하면 1990년대 남성이 20대에 하층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 20대 여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1980년대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을 통제해도 출생 코호트 간 차이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990년대생이 이전 세대보다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남성의 패턴은 1990년대생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70년대생이나 1980년대생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중히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최근 출생 코호트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이전 세대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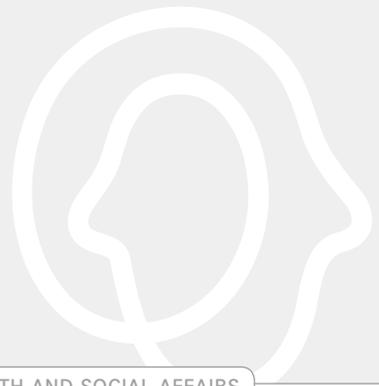
## 제5절 소결

이 연구는 세대 간 불평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사회의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를 출생 코호트의 세대 내 결합노동시장 지위 변화

를 비교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되는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노동시장 경험을 인접 출생 코호트와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남성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1950년대생보다는 1970년대생보다 낮은데,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대생들의 30-40대 비고용 비중이 다른 코호트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생애과정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90년대생 남성의 2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이전 세대보다 낮아진 반면 1990년대생 여성은 이전 출생 코호트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단,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출생 코호트의 교육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향상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확률효과 다항로짓 분석은 대체로 기술통계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즉, 1960년대생이 다른 출생 코호트보다 높은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경험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1990년대생들의 경험은 이전 세대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형성 주기 변화가 노동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출생 코호트 간 변화에는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960년대 출생 코호트의 자원 독과점은 적어도 노동시장 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1990년대생들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은 이전 세대보다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제6장

### 출생코호트별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 연관성

제1절 분석의 배경

제2절 분석자료와 방법

제3절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출생  
코호트 간 차이 탐색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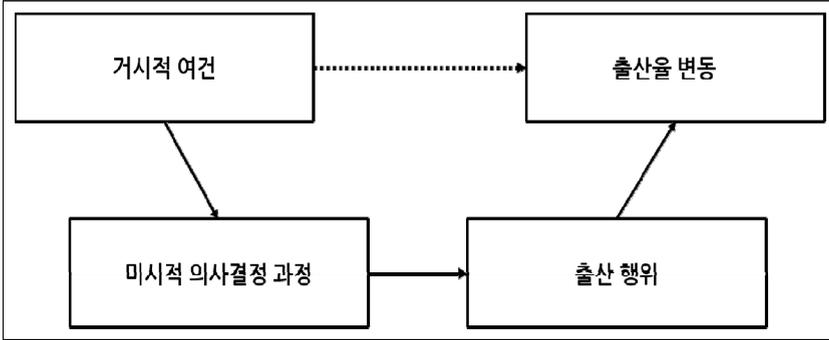
## 제 6 장

# 출생코호트별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 연관성

### 제1절 분석의 배경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최근 출산율의 감소가 개인적 수준의 출산 미 이행 및 지연 등 출산 확률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인과적 연관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을 개연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출생코호트별 출산 확률의 차이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증분석의 기본적 방향은 연령효과를 고려한 동일한 젊은 층 세대라고 하더라도 출생코호트별 출산 확률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특성에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기본적 토대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부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출산 행동이 결과적으로 거시적 수준의 출산율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미시적 수준의 출산 행동은 정책 개입 등의 거시적 여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Liefbroer et al., 2015).

[그림 6-1] 출산에 대한 미시, 거시적 인과 체계



출처: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A conceptual framework,” Liefbroer et al., 2015, in Philipov, D., Liefbroer, A. C., Klobas, J. E. (Ed).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Springer Dordrecht, Copyright 2015 by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Dordrecht, p. 1-15에서 번역하여 제시함.

이러한 일련의 인과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결혼, 출산, 자녀 긍정적 인식 정도는 미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출산 행위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초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보다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요인이 현재의 초저출산 양상에 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는 논의(장인수, 2023.5.25., p.20). 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양상과 관련하여 사회구조적, 거시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동시에, 저출산 대응 정책이 정책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심도 있게 관측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장에서는 출생코호트의 차이, 즉 코호트효과에 의한 출산 이행 확률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이러한 차

이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은 소득이나 자산, 그리고 직업 특성의 차이가 동일 세대 내 및 세대 간에 나타나고 있는 속성을 모두 포함한다. 즉, 동일 세대 내에서 관측되는 차이로 인한 불평등 특성에 더하여, 동일 세대가 아닌 세대 간, 즉 해당 시점에서의 기성세대와의 여러 속성의 차이가 출산 확률에 미치는 영향(기여도)를 함께 고려한다. 특히, 출생코호트 간 차이는 횡단적(cross-sectional) 측면에서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두 개의 집단 간 차이의 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종단적(longitudinal) 측면에서 시점 간 변화(종단적 변화) 차이를 동시에 고려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성별 임금 차이(gender wage gap, gender wage difference)를 탐색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활용된 차이 모형을 횡단적 측면과 종단적 측면에서 적용한 두 개의 모형을 적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해당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제2절 분석자료와 방법

### 1. 분석자료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증분석 방법과 분석자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는 분석자료로 다음의 두 가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데, 구체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 1998년도부터 매년 수집, 구축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자료 원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1964년 ‘전국 가족계획실태 조사’로 시작하여 197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실시된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가공하여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정보를 두루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조사대상자의 출산 여부, 자녀 출생아 수 등 출산 관련 정보를 비롯한 여러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분석방법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종단적 측면의 분석은 패널 형식으로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하는 형식이 아니라, 통시적 관점에서 시점 간 차이에 주목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출산조사와 같이 패널 형식을 띠고 있지 않은 원시자료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상기 원시자료에서의 변인 구성과 설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인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와 관련하여 각각의 차수별 원시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생년, 만나이, 교육수준, 거주지역, 취업 여부,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액수, 비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사회경제적지위 향상 가능 생각, 사회경제적 지위, 신규 출산 경험 유무, 자녀수(아들), 자녀수(딸)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이들 각 차수별 상이한 변인을 동일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상기 구축한 변인 중 회귀분석에서의 다중공선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최종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교육수준, 수도권 거주 더미, 정규직 더미, 직업안정성 더미, 상대소득, 사회적지위 향상 가능 주관적 생각에 대한 4단계 리커트형 척도(범주형),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주관적 생각에 대한 6단계 리커트형 척도(범주형) 변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석대상은 모든 시기에서의 19-49세 연령이며, 해당 시기별 취업 상태인 이들에 국한된다. 아울러, 해당 최종 변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고려한 모든 변인의 경우 8차년도 원시자료부터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 구축 기간은 8차년도 원시자료-25차년도 원시자료인 2005-2022년의 기간이다.

〈표 6-1〉 모형에 투입한 최종변인에 대한 설명: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 가공

범주	최종변인명	설명
종속변인	출생아 수	분석대상 표본의 출생아 수(0 포함)
	출산 여부	분석대상 표본의 출산 여부 더미(출산=1, 미출산=0)
독립변인	교육수준	3범주의 리커트형(고등학교 졸업 미만=1, 고등학교 및 2년제 졸업=2,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3)
	수도권 거주 더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거주=1, 비수도권 거주=0
	정규직 더미	정규직=1, 비정규직=0
	직업안정성 더미	고용안정성이 있음=1, 고용안정성이 없음=0
	상대소득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월평균임금과 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출생코호트별 전체 평균임금(소득) 대비 자신의 임금소득 비율
	사회적지위 향상 가능 주관적 생각	응답자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한 생각(4단계 리커트형 척도변인,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주관적 생각	응답자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생각(6단계 리커트형 척도변인, 하하=1, 하상=2, 중하=3, 중상=4, 상하=5, 상상=6)
분석대상 구분 변인	출생코호트	1960-70년대 출생=1, 1980-90년대 출생=2
시기 구분 변인	시기	2005-2014년=1, 2015-2022년

주: 시기 구분 변인은 두 집단 간 종단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변인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분석결과 부분에서 다루기로 함.

출처: “한국노동패널” 8-25차 원시자료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설문지],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집단 간 출생아 수 평균의 횡단적, 종단적 차이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의 집단은 실제 출산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작은 집단(집단 1), 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같거나 큰 집단(집단 2)로 구분된다. 이러한 집단의 이러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초저출산이 특정 집단의 출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성에 주목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이러한 특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화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과 가치관 요인의 영향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집단은 상기 논의한 두 집단으로 구분되지만, 횡단적 측면 이외에 통시적 변화(종단적 측면)를 추가로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과 2021년의 두 개 시점의 원시자료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기본적으로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두 원시자료에서 포함하고 있는 변인을 공통적으로 추출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연령, 교육수준(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전문대학, 대학이상), 출생아 수, 가구총소득, 가구총자산(동산, 부동산), 부인 현 취업 여부, 종사상지위, 월평균근로소득, 남편 현 취업 여부, 남편 종사상지위, 남편 월평균근로소득, 자녀의 필요성, 이상 자녀 수 변인을 추출하고 가공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동일 연령대의 가구총소득과 가구자산 대비 본인의 가구총소득과 가구자산인 상대총소득, 상대가구자산을 별도로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은 연령 25-49세 기혼 여성이며, 두 시점에서의 원시자료 가공에 따른 변인 구축은 다음과 같다.

〈표 6-2〉 모형에 투입한 최종변인에 대한 설명: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 가공

범주	최종변인명	설명
종속변인	출생아 수	분석대상 표본의 출생아 수(0 포함)
	연령	25-49세 연속변인
독립변인	교육수준	3범주의 리커트형(고등학교 졸업 미만=1, 고등학교 및 2년제 졸업=2,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3)
	자산	가구총자산(동산, 부동산의 합계)
	상대자산	해당 연령대 가구총자산 대비 본인의 가구총자산의 비율
	가구소득	가구총소득
	상대소득	해당 연령대 가구총소득 대비 본인의 가구총소득의 비율
	본인 취업 여부	그렇다=1, 아니다=0
	배우자 취업 여부	그렇다=1, 아니다=0
	자녀 필요성	없어도 무관하다=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2, 꼭 있어야 한다=3
분석대상 구분 변인	그룹	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작은 집단=1, 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같거나 큰 집단=2
시기 구분 변인	시기	2000년=1, 2021년=2

주: 시기 구분 변인은 두 집단 간 종단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변인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분석결과 부분에서 다루기로 함.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분석방법

### 가.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 활용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기본적 열개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의 실증분석은 출생코호트의 출산 확률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의 영향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방향은 소위 코호트효과의 발생 원인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이는 동일한 젊은 층 세대라고 하더라도, 상이한 사회경제 및 거시구조적 환경 특성에 따라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결과적으로 코호트 간 다른 특성을 띠 개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층 세대를 1) 현재의 젊은 층과 2) 과거의 젊은 층이라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집단이 띠는 차이는 출생코호트라는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코호트효과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자료에서의 정보 구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생코호트를 1960-70년대생(출생연도 1960년-1979년), 1980-90년대생(출생연도 1980년-1999년)의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들 집단은 최소 1년, 최대 29년의 출생연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출생코호트의 차이는 세대까지의 구분은 아니지만, 출생 연도 차이에 따른 출생코호트의 차이를 관측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6-3〉 각 출생코호트 구분 및 각 범주별 표본 수: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 가공

(단위: 명)

출생코호트 범주 구분	출생코호트	표본 수
1	1960년대생	170
	1970년대생	635
2	1980년대생	622
	1990년대생	248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8-25차 원시자료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설문지],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이들 각각의 출생연도에 따른 차이 범주에 대하여 횡단적 측면과 종단적 측면을 두루 고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횡단적 측면은 각각의 범주에 속해있는 출생코호트를 개별 집단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풀링(pooling)한 이후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준에 따른 범주 구분, 가령 성,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거주지역 등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인과 같은 구분에 의한 범주 설정을 의미하며, 우리의 실증분석의 범주 구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1960-70년대생과 1980-90년대생 등 출생연도에 따른 두 개의 출생코호트 범주 간의 출산 확률(출산 이행 확률) 및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횡단 측면의 집단 간 출산 확률과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를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해(decomposition)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이를 관측하고자 하는 두 개의 집단을 pooling한 자료를 분석자료로 한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각각의 독립변인별 추정계수를 도출하

고, 이후 차이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정계수와 평균값을 활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출산 확률은 출산 이행 여부라는 이항 변인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중회귀모형이 아닌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추정계수를 도출하였다. 페어리(Fairlie, 1999; 2005)가 제시한 확장형 해체기법(extended decomposition method)은 다음과 같은 식 6-1-2로 요약 정리되는데, 출산 이행 여부에 따른 출산 확률이 각각 모형 내에서 통제된 특성효과(characteristic effect)와 기타 효과인 잔차효과(residual effect)로 구분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bar{Y}$ 는 각 출산 계획 여부 범주별 이항 종속변수(출산 여부)의 평균, F는 이항종속변수를 선형 확률로 처리하는 연계함수인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를 각각 뜻한다. 활용한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횡단면 측면의 분해모형은 Blinder(1973), Oaxaca(1973), Oaxaca & Ransom(1994), Jann(2008), Fairlie(2005)과 같은 연구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하기 두 개의 식 중 첫 번째 식은 각 출생코호트(1960년대생,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 중 두 범주(A, B)의 출생코호트 간의 출생아 수 및 출산 확률이 설명되는 부분(explained)인 첫 번째 항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unexplained)인 두 번째, 세 번째 항으로 각각 구분됨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로 이때,  $\beta^*$ 는 각각의 집단 간 독립변인의 차이의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차이 특성을 반영하는 파라미터 벡터를 뜻하며, 본 연구는 Oaxaca & Ransom(1994)에서 제시된, 두 집단의 합동(pooled) 모형을 적용하여 도출된 수치를 활용하였다.

수식 6-1-1)

$$\bar{Y}^A - \bar{Y}^B = E(X_A) - E(X_B)' \beta^* + E(X_A)' (\beta_A - \beta^*) + E(X_B)' (\beta^* - \beta_B)$$

또한 두 번째 수식은 출산 여부는 이행 종속변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선형 종속변수에 적용되는 블라인더, 와하카, 와하카와 랜섬(Blinder, 1973; Oaxaca, 1973; Oaxaca & Ransom, 1994)의 분해 기법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연계함수를 추가로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하기 식으로 요약 정리되는데, 출산 계획 여부에 따른 출산 확률이 모형 내에서 통제된 특성효과(characteristic effect)와 기타 효과인 잔차효과(residual effect)로 구분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bar{Y}$ 는 각 출산 계획 여부 범주별 이행 종속변수(출산 여부)의 평균,  $F$ 는 이행종속변수를 선형 확률로 처리하는 연계함수인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를 각각 뜻한다.

수식 6-1-2)

$$\begin{aligned} \bar{Y}^A - \bar{Y}^B = & \left[ \sum_{i=1}^{N^A} \frac{F(X_i^A \hat{\beta}^A)}{N^A} - \sum_{i=1}^{N^B} \frac{F(X_i^B \hat{\beta}^A)}{N^B} \right] \\ & + \left[ \sum_{i=1}^{N^B} \frac{F(X_i^B \hat{\beta}^A)}{N^A} - \sum_{i=1}^{N^B} \frac{F(X_i^B \hat{\beta}^B)}{N^B} \right] \end{aligned}$$

다만, 상기 분석방법은 두 집단 간 종속변인(관측변인)의 차이를 설명되는 요인(explained parts)과 설명되지 않은 요인(unexplained parts)로 구분하여 모형에서 고려한 여러 독립변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요인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간명성이 존재하지만, 1960년대생, 1990년대생이 경험하는 해당 시점의 시기적 특성과 연관된 종단적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측면에서의 두 집단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모형을 함께 고려한다. 이는 성별 임금 차이와 관련하여 통시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실증하기 위하

여 고안된 Juhn et al.(1993)의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이라는 동일 젊은 층의 시점 간 다른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두 집단을 pooling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시점 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시점 변인을 추가적으로 모형에서 고려하고 있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Juhn et al.(1993)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두 개의 시점 및 집단 간 종속변인(관측변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항으로 분해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식 6-2)

$$Y_{it} = (X_{it} - X_{it-1})\bar{\beta} + X_{it}(\beta_t - \bar{\beta}_{t-1}) + \bar{F}^{-1}(\theta_{it}|X_{it}) + [F_t^{-1}(\theta_{it}|X) - \bar{F}^{-1}(\theta_{it}|X_{it})]$$

$F_t^{-1}(\cdot | X_{it})$ 는  $t$ 년도 설명변수  $X_{it}$ 의 지역의 누적잔차분포의 역함수를 의미

구체적으로 상기 수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의 두 개의 항은 (모형 내에서 고려한 독립변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explained parts)에 대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으며, 뒤의 두 개 항은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unexplained parts)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설명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첫 번째 항은 종단적 측면에서의 두 개 범주의 시점의 집단 간 독립변인의 차이에 따른(기인하는) 시점 및 집단 간 종속변인의 차이를, 두 번째 항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연관성과 무관하게 독립변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특성의 시점 간 변화에 기인하는 시점 및 집단 간 차이를 각각 뜻한다.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항은 공통적으로 모형에 투입한 독립변인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시점 간 집단 간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설명되지 않은 측면에서의 사항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연관성과 무관하게 설명되지

않은 측면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서 고려한 독립변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모형의 독립변인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관련된 시점과 집단 간 차이에 보다 주목할 것이다. 즉, 상기 수식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관련된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출생아 수의 차이는 1960년생이 젊은 층 시기인 1980-1990년대의 시기와 1990년대생이 젊은 층 시기인 2010-2020년대의 시기 및 두 집단 간 관련 독립변인에 의한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시점 및 집단 간 독립변인의 차이에 의한 부분은 모형에서 고려하는 구체적인 독립변인의 차이에 따른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독립변인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특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평균적인 출산 확률 및 출생아 수의 차이(상기 수식의 첫 번째 항과 관련)”,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구조적 등 다양한 특성 변화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관측된 두 집단 간 평균적인 출산 확률 및 출생아 수의 차이(상기 수식의 두 번째 항과 관련)”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횡단적, 종단적 측면에서의 모형의 열개는 기본적으로 본 연구가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 특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맞물려 있다. 즉, 본 모형에 투입하는 주된 독립변인인 분석대상의 소득, 자산, 그리고 동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석대상 젊은 층 평균 대비 자신의 상대소득 수준이 출산 이행과 출생아 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이 출생코호트별로 상이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 자료 활용

본 원시자료 활용 역시 분석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분석방법과 동일하다. 즉, 횡단 측면의 실증분석은 Oaxaca, Ransom(1994)에서 제시된, 두 집단의 합동(pooled) 모형을 적용하여 도출된 수치를 활용한 차이 모형을, 종단 측면의 분석은 Juhn et al.(1993)의 열개를 따른다. 기본적으로 2000년과 2021년 원시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생코호트가 자연스럽게 구분되며, 앞서 언급한 분석대상 구분 기준에 따른 각각의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6-4〉 각 출생코호트 구분 및 각 범주별 표본 수: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 가공

(단위: 명)

범주 구분	분석대상	표본 수
1(2000년도 원시자료)	집단 1	2,228
	집단 2	3,264
2(2021년도 원시자료)	집단 1	3,409
	집단 2	4,660

주: 여기에서의 집단 1, 2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각 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작은 집단(집단 1), 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같거나 큰 집단(집단 2)을 의미함.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 제3절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출생코호트 간 차이 탐색

#### 1.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 활용 분석

##### 가. 분석대상의 집단별 변인의 기초 특성

먼저, 두 개의 집단(이하 집단 1: 1960-70년대생, 집단 2: 1980-90년대생)별 변인의 주요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최종변인별 각 집단별 평균과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먼저 두 개의 종속변인인 평균 출생아 수와 출산 이행 확률은 집단 1이 집단 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출생아 수는 약 3배, 출산 확률의 경우에도 약 2.5배의 차이가 도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모형에 투입한 최종변인의 평균에 대한 집단별 차이

범주	최종변인명	집단 1	집단 2	차이	t-stat.	p-val.
종속변인	출생아 수	1.178	.381	.757	18.401	0.0000
	출산 여부(확률)	.635	.252	.382	16.885	0.0000
독립변인	교육수준	2.344	2.515	-.171	-6.948	0.0000
	수도권 거주 더미	.543	.511	.032	1.307	0.0956
	정규직 더미	.670	.745	-.074	-3.344	0.0004
	직업안정성 더미	.881	.853	.027	1.604	0.0545
	상대소득	.962	1.000	-.037	-1.625	0.0521
	사회적지위 향상 가능 주관적 생각	2.529	2.529	-.0004	-0.014	0.494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주관적 생각	2.989	3.027	-.0381	-0.9974	0.159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8-25차 원시자료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설문지],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독립변인과 관련하여, 교육수준과 정규직 비율, 상대소득 수준은 집단 1에 비하여 집단 2가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위 향상 가능,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대한 주관적 생각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나. 횡단적 측면의 차이 특성

### 1) 출생아 수 평균

먼저, 두 집단 간 평균 출생아 수에 대한 횡단적 측면의 차이는 앞서 살펴본 기초 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는 약 0.79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모형에서 고려한 변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은 0.057명이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0.7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각 변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약 68.13%, 정규직 여부가 약 33.8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변인의 횡단적 측면에서 설명되는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되는 부분에서의 변인별 기여도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의 기여도는 교육수준과 평균 출생아 수의 추정계수( $\beta$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적 연관성과 앞서 살펴본 <표 6-5>에서의 두 집단의 평균 교육수준의 차이(-0.171)의 결합 기여도로서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 1에 비하여 집단 2의 평균 교육수준이 보다 높다는 점과 교육수준과 평균 출생아 수의 부적(-) 연관성이 두 집단 간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6〉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변인	분해 추정계수( $\beta$ )	기여도(%)
교육수준	0.039	68.126
수도권 거주 더미	-0.001	-0.997
정규직 더미	0.019	33.879
직업안정성 더미	0.001	1.332
상대소득	-0.002	-3.398
사회적지위 향상 가능 주관적 생각	0.000	0.005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주관적 생각	0.001	1.053
소계	0.057	100.000
범주 구분	평균 출생아 수	
설명되는 부분	.0570	
설명되지 않는 부분	.740231	
집단 구분	평균 출생아 수	
집단 1	1.1785	
집단 2	.3812	
차이	.79729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8-25차 원시자료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설문지],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 2) 출산 확률 평균

두 집단 간 평균 출산 확률에 대한 횡단적 측면의 차이 역시 앞서 살펴본 평균 출생아 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 결과와 유사하게 다른 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수준과 정규직 더미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출산 확률은 약 38.25%포인트(집단 1: 63.51%, 집단 2: 25.26%)이며, 이 중 설명되는 부분에 의한 차이는 약 0.04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명되는 부분 중 모형 내 투

입한 변인 중 교육수준이 0.030(기여도 약 68.67%), 정규직 여부가 0.013(기여도 약 29.52%)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표 6-7〉 출산 확률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변인	분해 추정계수( $\beta$ )	기여도(%)
교육수준	0.030	68.672
수도권 거주 더미	0.001	2.607
정규직 더미	0.013	29.516
직업안정성 더미	0.002	3.726
상대소득	-0.002	-3.900
사회적지위 향상 가능 주관적 생각	0.000	0.008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주관적 생각	0.000	-0.629
소계	0.044	100.000

범주 구분	출산 확률 평균
설명되는 부분	0.0442
설명되지 않는 부분	0.3383

집단 구분	출산 확률 평균
집단 1	0.6351
집단 2	0.2526
차이	0.3825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8-25차 원시자료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설문지],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 다. 종단적 측면의 차이 특성: 출생아 수 평균

여기에서의 종단적 특성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집단 간 차이에 대하여 해당 시점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점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집단 간 차이”라는 기본적 프레임에 “시점 간 차이”라는 차원을 추가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점 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 관련 집계지표가 급격하게 감소하

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5년 이전(시기 1)과 이후(시기 2)로 기간을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때 출생코호트의 평균 연령은 시기 1이 평균 32.23세, 시기 2의 경우 평균 35.51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종단적 측면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앞서 살펴본 횡단적 측면의 집단 간 차이의 특성과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출생코호트별로 구분한 집단 1, 2에 더하여 기간을 두 개 범주(201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두 집단의 시점별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는 2015년 이전 약 0.722명에서 2015년 이후 1.069명으로 약 .34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모형에 투입한(모형에서 고려한) 독립변인에 의한 차이는 약 0.0088명이고, 관측되지 않은 소위 잔차의 차이에 의한 차이는 약 0.33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독립변인에 의한 차이는 약 0.0088명을 각 독립변인별로 구분하여 설명되는 부분을 분해한 결과, 수도권 더미와 상대소득 수준의 기여도가 다른 변인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집단의 차이라도 이를 시점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상대소득의 변화에 따른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평균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상대소득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불평등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의미가 있으며, 종단적 분석결과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평균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8〉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기간(시점) 및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변인	분해 추정계수( $\beta$ )	기여도(%)
교육수준	-0.009	-104.863
수도권 거주 더미	0.021	239.225
정규직 더미	-0.023	-258.002
직업안정성 더미	0.000	-3.112
상대소득	0.021	241.718
사회적지위 향상 가능 주관적 생각	-0.005	-55.965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주관적 생각	0.004	41.000
소계	0.009	100.000

범주 구분	출생아 수 평균
설명되는 부분	0.0088
설명되지 않는 부분	0.3380

시기 구분	출생아 수 평균의 집단(집단 1, 2) 간 차이
시기 1(2005-2014년, 평균 연령 32.22세)	0.7225
시기 2(2015-2022년, 평균 연령 35.51세)	1.0694
차이	0.3469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8-25차 원시자료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설문지],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 2.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 활용 분석

### 가. 분석대상의 집단별 변인의 기초 특성

먼저, 분석대상의 집단별 변인의 기초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집단 2는 출생아 수 평균, 연령 평균, 자산, 상대소득이 집단 1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관 측면에서의 자녀 필요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반면, 집단 1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많은 경향이 나타났고, 본인의 취업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모형에 투입한 최종변인의 평균에 대한 집단별 차이

범주	최종변인명	집단 1	집단 2	차이	t-stat.	p-val.
종속변인	출생아 수	.784	2.212	1.487	108.9442	0.0000
	연령	33.50	39.75	6.245	51.1497	0.0000
독립변인	교육수준	2.489	2.241	-.247	-20.311	0.0000
	자산	406.76	433.35	26.59	2.985	0.0000
	상대자산	1.000	.999	-.0016	-0.080	0.468
	가구소득	43.36	40.70	-2.667	-4.894	0.0000
	상대소득	.983	1.017	.034	3.377	0.0004
	본인 취업 여부	.714	.661	-.052	-5.842	0.0000
	배우자 취업 여부	.953	.954	.001	0.298	0.383
	자녀 필요성	2.069	2.372	.303	23.262	0.0000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 나. 횡단적 측면의 차이 특성

횡단 측면의 차이 특성과 관련하여, 2000년 원시자료(이하 시기 1)의 집단 간 출생아 수의 평균은 약 0.9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형 1(가구총소득, 가구총자산 투입) 내에서 설명되는 부분의 경우 약 0.173명으로 18.12%가 모형에 투입한 변인에 의하여 차이가 설명되는 부분으로 도출되었다. 두 집단의 출생아 수 평균의 약 81.88%는 모형 내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변인 및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인 속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가구총소득, 상대가구총자산을 투입한 모형 2의 경우에도 설명되는 부분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2021년의 경우에도 2000년도 원시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0〉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2000년

변인	모형 1		모형 2	
	분해 추정계수( $\beta$ )	기여도(%)	분해 추정계수( $\beta$ )	기여도(%)
연령	0.154	89.475	0.154	89.380
교육수준	0.020	11.623	0.020	11.348
자산	0.000	-0.067	-	-
상대자산	-	-	0.000	0.000
가구소득	0.000	-0.094	-	-
상대소득	-	-	0.001	0.000
본인 취업 여부	0.001	0.407	0.001	0.467
배우자 취업 여부	0.000	-0.029	0.000	-0.032
자녀 필요성	-0.002	-1.316	-0.002	-1.316
소계	0.173	100.00	0.173	100.000
<b>범주 구분</b>	<b>평균 출생아 수</b>			
설명되는 부분	.1726		.1727	
설명되지 않는 부분	.7802		.7800	
<b>집단 구분</b>	<b>평균 출생아 수</b>			
집단 1	1.3456			
집단 2	2.2984			
차이	.9528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표 6-11〉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2021년

변인	모형 1		모형 2	
	분해 추정계수( $\beta$ )	기여도(%)	분해 추정계수( $\beta$ )	기여도(%)
연령	0.069	73.144	0.070	74.199
교육수준	0.003	3.588	0.003	3.606
자산	0.000	0.258	-	-
상대자산	-	-	0.000	0.239
가구소득	0.003	3.221	-	-
상대소득	-	-	0.002	2.185
본인 취업 여부	0.001	1.057	0.001	1.059
배우자 취업 여부	0.000	-0.524	0.000	-0.529
자녀 필요성	0.018	19.256	0.018	19.240
소계	0.094	100.000	0.094	100.000

범주 구분	평균 출생아 수	
설명되는 부분	.0939	.0940
설명되지 않는 부분	1.019	1.019

집단 구분	평균 출생아 수
집단 1	1.0247
집단 2	2.1385
차이	1.1137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이러한 차이는 2000, 2021년도 공통적으로 연령의 효과가 가장 큰 것에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기본적으로 두 집단의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가 연령효과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 2의 경우 집단 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출산 완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두 집단 간 출생아 수 평균의 차이를 크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연령효과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각각의 연도별 집단 간 출생아 수 평균의 차이를 20대, 30대, 40대의 세 범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연령 범주별 구분 분석에서는 소득과 자산 변인의 경우 절대, 상대의 개념 간 구분에 따른 효과와 특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소득 및 상대자산 변인만을 모형에 고려하였다.

〈표 6-12〉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2000년

변인	모형 1 (20대)		모형 2 (30대)		모형 3 (40대)	
	분해 추정계수 ( $\beta$ )	기여도 (%)	분해 추정계수 ( $\beta$ )	기여도 (%)	분해 추정계수 ( $\beta$ )	기여도 (%)
연령	0.037	47.627	0.024	98.310	0.032	64.876
교육수준	0.032	41.442	0.005	20.935	0.013	26.902
상대자산	0.001	1.396	-0.001	-2.390	-0.001	-1.330
상대소득	0.002	2.038	0.000	1.008	0.000	0.258
본인 취업 여부	0.016	20.492	0.001	2.810	0.004	7.759
배우자 취업 여부	-0.001	-1.074	0.000	0.226	0.000	0.840
자녀 필요성	-0.009	-11.921	-0.005	-20.899	0.000	0.696
소계	0.078	100.00	0.024	100.00	0.050	100.00
범주 구분	평균 출생아 수					
설명되는 부분	.0783		.0242		.0500	
설명되지 않는 부분	1.0565		.6567		.7273	
집단 구분	평균 출생아 수					
집단 1	.7654		1.4884		1.7291	
집단 2	1.9003		2.1694		2.5065	
차이	1.1349		.6809		.7773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표 6-13〉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2021년

변인	모형 1 (20대)		모형 2 (30대)		모형 3 (40대)	
	분해 추정계수 ( $\beta$ )	기여도 (%)	분해 추정계수 ( $\beta$ )	기여도 (%)	분해 추정계수 ( $\beta$ )	기여도 (%)
연령	0.012	10.842	0.067	61.718	0.001	8.729
교육수준	0.041	38.205	0.005	4.746	0.000	2.711
상대자산	0.003	2.918	0.000	-0.426	0.000	-0.575
상대소득	0.001	1.197	0.000	-0.284	0.003	20.997
본인 취업 여부	0.017	15.997	0.002	2.192	0.001	7.526
배우자 취업 여부	-0.001	-1.181	0.004	3.967	0.001	8.698
자녀 필요성	0.034	32.022	0.030	28.086	0.007	51.914
소계	0.108	100.00	0.108	100.00	0.014	100.00
<b>범주 구분</b>	<b>평균 출생아 수</b>					
설명되는 부분	.1076		.1081		.0140	
설명되지 않는 부분	1.1899		1.0819		.9265	
<b>집단 구분</b>	<b>평균 출생아 수</b>					
집단 1	.5205		.8941		1.2320	
집단 2	1.8181		2.0843		2.1726	
차이	1.2976		1.1901		.9406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분석대상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횡단적 측면의 분석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2000년의 경우 두 집단 간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소득, 자산, 가치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보다는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보다 기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2021년도의 경우에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취업 여부, 상대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차이 설명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두 연도 모두 집단 간 출생아 수 평균은 집단 2(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같거나 큰 집단)에 비하여 집단 1의 감소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1의 감소에 의한 기여는 2000년도보다는 2021년에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종단적 측면의 차이 특성

종단적 측면의 차이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간명하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집단 간 출생아 수의 평균의 차이는 2000년 0.953명에 비하여 2021년도에서는 1.114명으로 약 0.16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형 내에서 투입한 변인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요인이 두 시점 간 출생아 수 평균의 차이인 0.161명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자산과 상대소득, 자녀 필요성 변인은 반대로 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시점인 2021년도의 상대자산과 상대소득, 자녀 필요성 변인이 모두 출생아 수와 정적(+)인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인의 영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과 저출산 간 특성을 설명하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14〉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기간(시점) 및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변인	분해 추정계수( $\beta$ )	기여도(%)
연령	-0.088	85.489
교육수준	-0.023	22.167
상대자산	0.000	-0.433
상대소득	0.001	-1.084
본인 취업 여부	-0.003	2.447
배우자 취업 여부	-0.002	2.097
자녀 필요성	0.011	-10.682
소계	-0.103	100.000

범주 구분	출생아 수 평균
설명되는 부분	-.1030
설명되지 않는 부분	.2640

시기 구분	출생아 수 평균의 집단(집단 1, 2) 간 차이
시기 1(2000년)	.9528
시기 2(2021년)	1.1137
차이	.1609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202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표 6-15〉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기간(시점) 및 집단 간 차이 분해(decomposition)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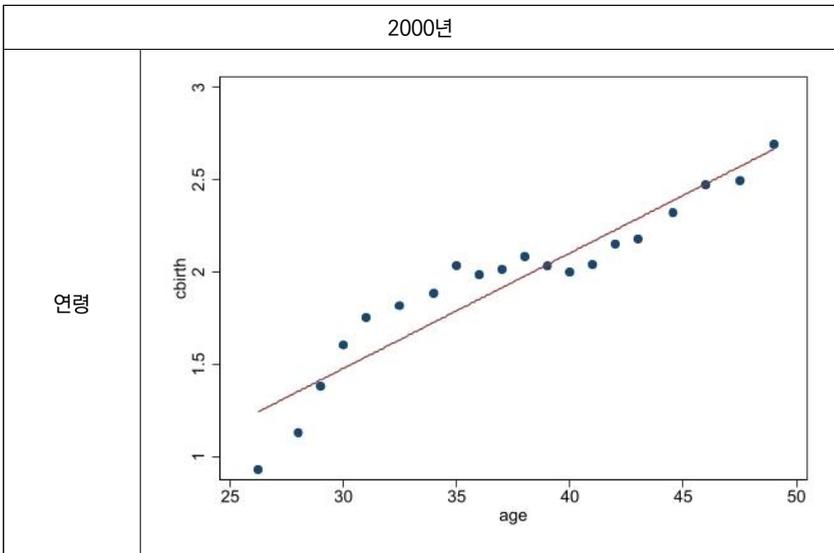
변인	모형 1 (20대)		모형 2 (30대)		모형 3 (40대)	
	분해 추정계수 ( $\beta$ )	기여도 (%)	분해 추정계수 ( $\beta$ )	기여도 (%)	분해 추정계수 ( $\beta$ )	기여도 (%)
연령	0.054	39.269	0.030	46.875	-0.041	74.545
교육수준	0.049	35.549	-0.005	-7.813	-0.017	30.909
상대자산	-0.002	-1.275	0.001	1.563	-0.001	1.818
상대소득	-0.042	-30.304	0.000	0.000	0.004	-7.273
본인 취업 여부	-0.013	-9.678	0.001	1.563	-0.003	5.455
배우자 취업 여부	0.002	1.494	0.005	7.813	0.002	-3.636
자녀 필요성	0.089	64.945	0.031	48.438	0.001	-1.818
소계	0.137	100.00	0.064	100.00	-0.055	100.00
<b>범주 구분</b>	<b>출생아 수 평균</b>					
설명되는 부분	.1374		.0636		-.0553	
설명되지 않는 부분	.0251		.4454		.2185	
<b>시기 구분</b>	<b>출생아 수 평균의 집단(집단 1, 2) 간 차이</b>					
시기 1(2000년)	1.1349		.6809		.7773	
시기 2(2021년)	1.2976		1.1901		.9405	
차이	.1626		.5091		.1632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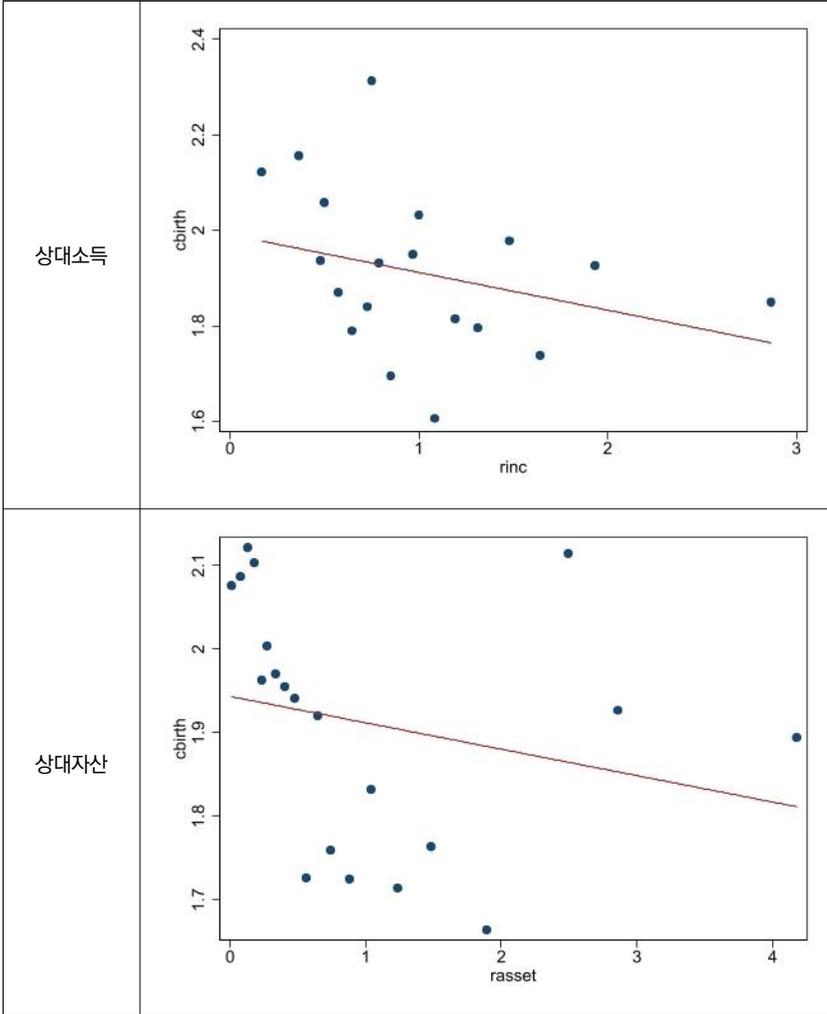
연령을 구분한 집단 및 기간(시점) 간 분해 결과는 연령 변수의 기여도가 다른 변수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의 경우 자녀 필요성 가치관, 배우자 취업 여부 변수가, 40대의 경우 상대소득 변수가 각각의 집단 차이에 대한 시점 차이를 보다 크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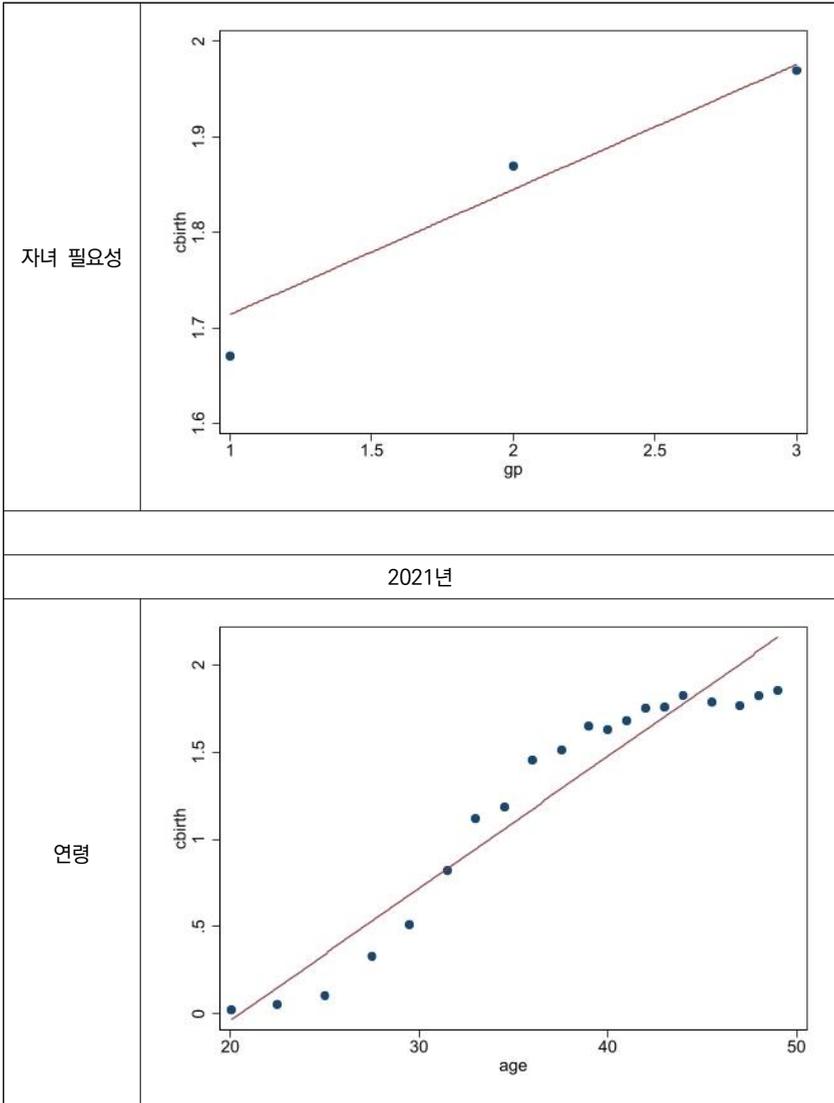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본 분석결과는 시점 간 집단의 출생아 수 평균 차이가 여전히 모형 내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 및 관측되지 못한 변수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자리잡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가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0년과 2021년은 공통적으로 연령과 출생아 수 간 정적(+) 연관성이 뚜렷하게 관측되는 데 반해, 상대소득/상대자산 간 연관성은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 연도별 출생아 수와 주요 변수 간 연관성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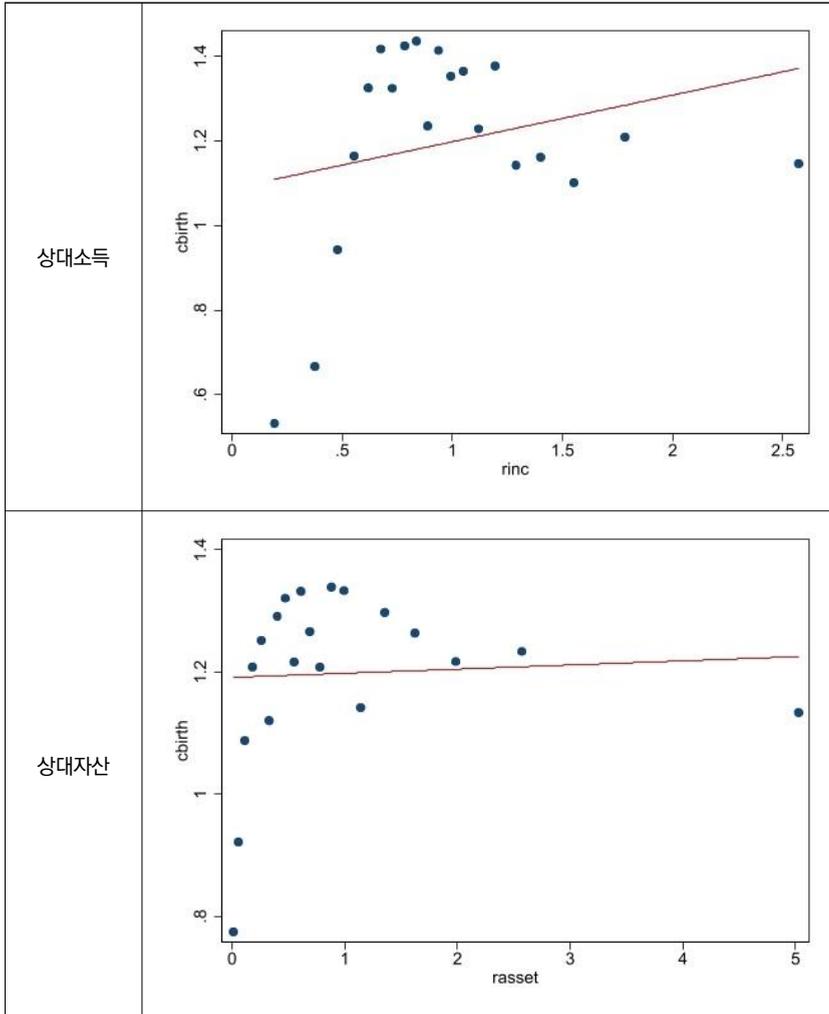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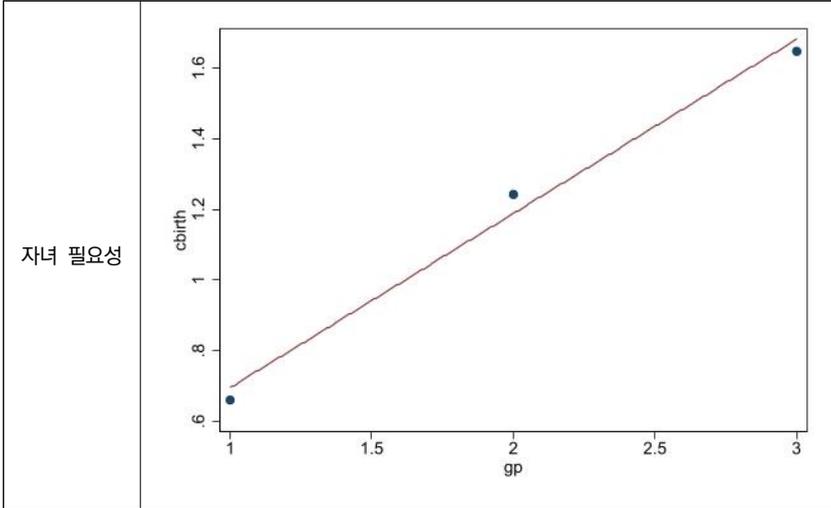
204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206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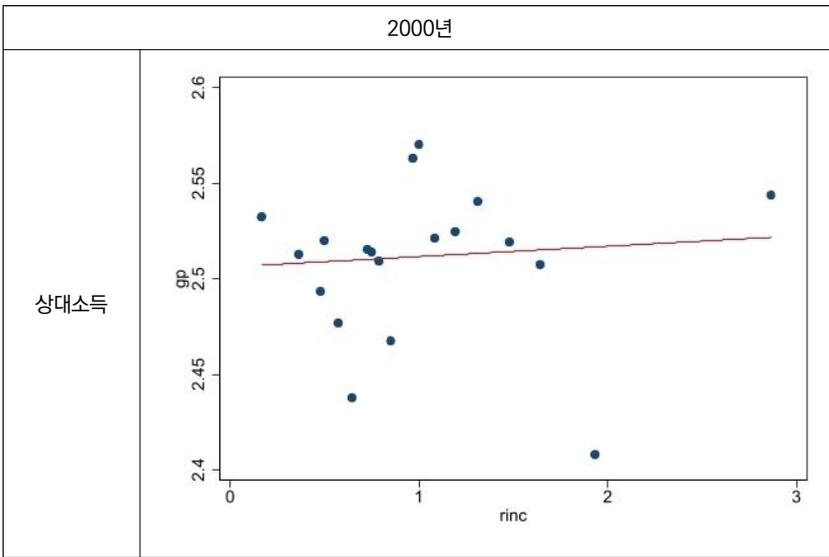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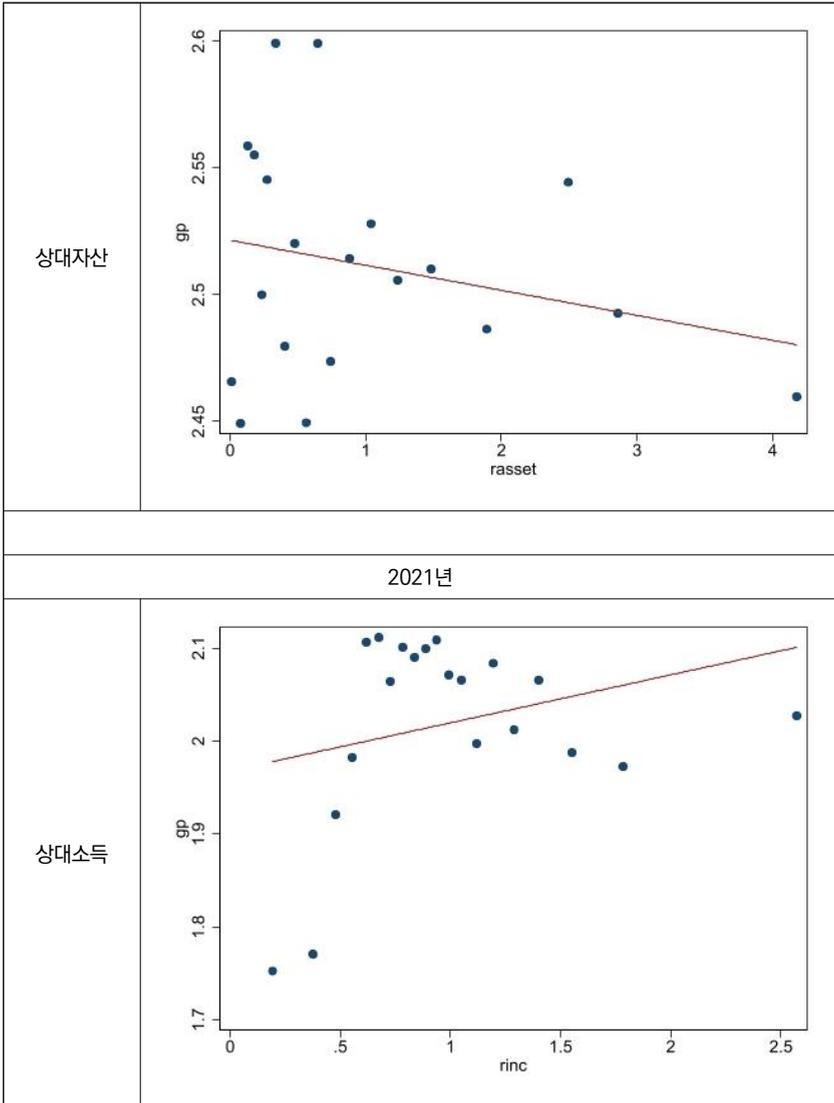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2000년의 경우 상대소득 및 상대자산 각각의 변인과 출생아 수 간 연관성은 부정적(-) 양상에 가까운 데 반해 2021년 상대소득의 경우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적(+) 형태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많을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상기 변인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대리하는 변인임을 상기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근 보다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평균적인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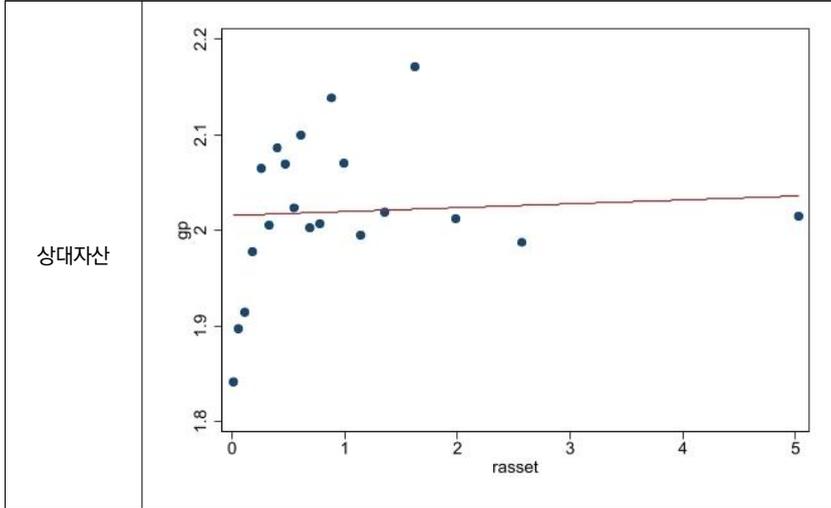
추가로, 각 연도별 상대소득, 상대자산과 자녀 필요성 간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2000년에 비하여 2021년 각각의 두 변인 간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정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소득의 변화→자녀의 필요성 가치관 변화→출생아 수 변화”의 일련의 인과적 과정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 역시도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출산 양상으로 이어지는 특성에 대한 여러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상 자녀 수에 비하여 실제 출생아 수가 작은 집단의 출생아 수 감소 변화가 2000년에 비하여 2021년 보다 증가한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저출산 양상에 대하여 상기 집계적 특성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6-3] 연도별 상대소득, 상대자산과 자녀의 필요성 변인 간 연관성 도식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 5. 17. 다운로드. <https://data.kihasa.re.kr/kihasa/main.htm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하여 작성.

## 제4절 소결

본 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횡단 측면의 집단 간 차이에 있어서는 설명되는 부분 중 교육수준과 정규직 더미 변인이 상대적으로 큰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도출된 반면, 종단적 측면의 차이에서는 설명되는 부분 중 수도권권과 상대소득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 등의 집계적이고 거시적인 출산 관련 지표가 이러한 미시적 분석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동시에, 수도권권과 상대소득의 변화에 따른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출생코호트일 수록 출생아 수와 출산 이행에 대하여 분석대상 본인의 소득과 자산보다는

상대소득에 보다 큰 부적(-) 연관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최근 출생코호트와 그 이전의 출생코호트 간 출생아 수와 출산 확률의 유의한 차이에 대해서는 상대소득의 기여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 입장에서의 사회불평등 요인으로 모형 내에서 고려한 상대소득과 상대자산 변인이 출생아 수 감소와 출산 이행 확률 감소라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이 출생아 수 감소와 출산 이행 확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과 출산조사를 활용한 분석결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다만, 본 장의 실증분석이 노정하고 있는 한계점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근본적 기제로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모형 내에서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는 활용 가능한 원시자료의 한계와 맞물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3장에서의 기초적 특성 분석을 통해 현재 젊은 층의 불안정성과 맞물린 내, 외적 측면에서의 취약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적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대상 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이외에 동일 출생코호트 내 전체 평균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상대소득 규모를 독립변인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별점이 존재하고 있다.





# 제7장

## 결론

제1절 주요 연구내용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 제 7 장    결론

### 제1절 주요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는 측면에서의 차별적 논의를 부각하고자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미 사회정책 거의 모든 범주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다분하다는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이와 맞물린 현재의 청년 세대가 경험하고 품는 여러 특징들이 과거의 청년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불평등 여부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구학적 논의는 공히 불평등과 차별적 인구 행위 간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불안정성과 맞물려 생각해 볼 여지가 다분한데, 이는 사회의 고도화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다각화가 유발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이에 대한 가중 요인이자 불안정

성의 기제 요인, 보다 정확하게 언급하면 저출산 문제를 유발하는 불안정성의 기제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불안정성의 기제 요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특성을 동일 세대 내, 동일 세대 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경험적 결론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불안정성과 출산력은 보다 중층적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구조 불평등 영향 요인을 심층적으로 개관하는 동시에, 세대 간 불평등 특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이 다각화되며 개인의 삶은 더욱 큰 불안정성을 맞이하게 된다. 자녀 돌봄, 양육 여건과 관련된 세대 간 불평등,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 압박감, 부담 등 여러 요인의 기제가 사회 불평등, 특히 세대 내 불평등을 포함한 세대 간 불평등과도 맞물려 있음을 고려하고 이러한 요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 특성을 탐색하고 고찰함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청년층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할 필요성 인식에 따라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4장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불안정성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기제로써 세대 간, 세대 내에서 빚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세대 내,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동일 세대 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린 결혼, 출산 이행

특성을 조망하였다. 우리의 분석결과는 특히, 다양한 사회정책 범주에서 노정되는 현재의 청년세대가 띠는 절대적, 상대적 취약성과 맞물린 사회경제적, 구조적 양극화가 불안정성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애 주기 내 결혼 및 출산 등의 사건 이행과의 부적 연관성의 개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장과 6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저출산 양상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5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가장 주된 배경적 요인 중 하나로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합지위 특성의 분포에 대한 출생코호트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경험적으로 드러난 정형화된 사실 중 하나는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생애과정의 변화가 반영된 양상으로서 여성 1970년대생들의 30-40대 비교용 비중이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하여 높은 특성이 관측된 점과 더불어, 1990년대생 남성의 2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이전 세대보다 낮아진 특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출생 코호트의 자원 독과점 특성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경험적인 노동시장 지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1990년대생들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은 이전 세대보다 악화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시장에서 관측되고 있는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특성이 최근 청년의 경우 보다 악화된 특성이 나타나며, 이러한 점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최근 청년의 내, 외적 취약성 내지는 상대적, 절대적 취약성과 맞물려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생애 주기 내 사건의 정상적 이행 내지는 원하는 시기에서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장은 출생코호트를 구분한 청년 세대의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

등 간 연관성에 대한 횡단적 측면과 종단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변인으로는 교육수준과 종사상 지위와 같은 일반적 특성 이외에도 동일 세대의 평균소득(자산) 대비 본인의 소득(자산)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소득과 상대자산 변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도권 변인 역시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횡단 측면의 집단 간 차이에서는 교육수준과 정규직 여부가 종단적 측면에서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수도권과 상대소득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종단적 측면의 차이는 10여년 간의 차이를 반영한 출생코호트, 즉 2005-2014년의 청년과 2015-2022년의 청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수도권과 상대소득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역과 소득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심화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실제 출산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작은 집단(집단 1), 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같거나 큰 집단(집단 2)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의 횡단적, 종단적 출생아 수의 차이와 이들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종단적 측면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집단 간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상대자산과 상대소득, 자녀 필요성 변인의 영향력이 도출된 결과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이 가치관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시적 수준에서의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결과적으로 거시적 층위의 저출산 양상을 설명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6장에서 의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서, 다양한 측면, 층위에서의 사회구조적 특성, 특히 세대 내, 세대 간 격차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누적된 젊은 층의 내, 외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2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차별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적으로, 청년 세대의 외형적, 내생적 특성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그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한계점을 보다 차별적으로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동시적 변화는 결국 사회경제적,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불안정성과 맞물린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은 청년 세대의 소위 건강한 생애 주기 과정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 저변에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노정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적지 않은 영향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현재의 청년세대가 동시적, 횡단적 측면에서 두루 경험하고 있는 내, 외적 취약성과 이와 맞물린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은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참여 특성에 집약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5장에서 노동시장 결합지위 특성의 출생코호트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6장에서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 간 격차, 종사상지위 및 동일 세대 내 상대소득 등 노동시장 참여 특성,

상대자산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저출산 간 미시적 층위의 연관성과 관련된 집단 간 차이가 거시적 층위의 저출산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였다. 비록 모든 사회정책 범주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논의를 종합적으로 특히 본 연구의 6장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젊은 층의 내, 외적 취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인 구성을 통해 이들 변인이 출생아 수와 출산 이행 확률과 공히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코호트효과를 고려하여 이전 연도의 출생코호트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이러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서, 다양한 측면, 층위에서의 사회구조적 특성, 특히 세대 내, 세대 간 격차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누적된 젊은 층의 내, 외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장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개선 방향은 프로그램,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거시구조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의 잠재적 수요자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국민적 역량 결집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간의 부분균형적 측면(partial equilibrium)에서의 접근을 지양하고, 일반균형적 접근(general equilibrium)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다각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사회적 양극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사업의

추진의 실효성이 저해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현재의 저출산 문제의 짐을 고스란히 넘기거나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느낌으로의 정책 수립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연령효과와는 상이한 코호트효과 측면에서 이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보다 중요하다 판단된다. 과거의 청년층과는 다른 현재의 청년층이 경험하고 마주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러한 상황과 맞물린 이들의 여건과 특성이 어떠한지, 이들 중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특성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세대 내, 세대 간 격차가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및 직업안정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업장 규모, 수도권-비수도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별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 범위는 상이하며, 이것이 불평등의 세대 내, 세대 간 격차를 유발하거나 혹은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도 친출산 환경 조성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범주에서의 정책 대응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대상자의 계층별, 집단별로는 정책수혜율이 상이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세대 내, 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고, 이러한 특성이 출산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커버리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범국가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이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양극화를 보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데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다.

관련하여,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과 설계가 모든 잠재적 정책 수혜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제시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다. 가령, 젊은 층과의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의 결과 내지는 설문조사 결과가 충실하게 반영된다면 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책의 안정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와 안목 등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현재의 저출산 대응은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현재 청년층의 고민과 내, 외적 취약성을 더 많이 고민하고 특히 자녀 출산을 원하지만 내, 외적 여건의 한계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고민과 미시적인 정책 설계가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본 장의 서론에서 언급한 출산에 대한 미시, 거시적 인과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시적 의사결정에 의한 출산 이행에서 정책 수요를 긴요하게 고려하는 거시적 여건의 형성과 실효성 있는 개입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청년층의 정책 수요를 긴밀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수립,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계봉오, 유삼현, 최슬기. (2022). 유배우 출산을 변화, 2005~2020: 혼인지속 기간 접근. **한국인구학**, 45(4), 71-92.
- 관계부처 합동. (2022. 2. 1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세종: 관계부처 합동.
- 고진수. (2023).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 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편), **한국의 사회동향 2023** (p. 267-278). 통계청 통계개발원.
-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https://dcollection.snu.ac.kr/public\\_resource/pdf/000000146494\\_20241116125516.pdf](https://dcollection.snu.ac.kr/public_resource/pdf/000000146494_20241116125516.pdf)
- 권일, 김미애. (2021).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대일. (2015).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와 그 변화. **노동경제논집**, 38(3), 23-51.
- 김문정. (2022). 청년 임금격차 추세 분석 및 정책함의. **재정포럼**, 2022.10., Vol. 1316, 8-29.
- 김수정. (2015). 누가 맞벌이화를 주도하는가? 맞벌이 이행에서 시기, 연령, 코호트 효과 분석. **한국여성학**, 31(4), 147-180.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유빈, 강민정, 고영우, 김영아. (2019). **청년 삶의 질 연구(II) -빈곤, 여성, 지역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윤덕. (2022. 05. 06.). **국민 67% “젠더갈등 심각”... 한국 남녀,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2022 다시 쓰는 젠더 리포트] [1]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조선일보. (업데이트 2023. 11. 28.)<https://www.chosun.com/national/>

national\_general/2022/05/06/7GH3AXAYIJHQVK6EDV4CX75PU  
A/

- 김지원, 김동욱, 구교준. (2023). 불평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불평등 추이와 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학연구**, 29(3), 171-207. DOI <https://dx.doi.org/10.19067/jgs.2023.29.3.171>에서 2024. 6. 15. 인출.
- 김창환, 김태호. (2020). 세대 불평등은 증가하였는가?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1999~2019. **한국사회학**, 54(4), 161-205.
- 박선권. (2019).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NARS 현안분석, 58, 1-1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1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시자료.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2003, 2013, 2023).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 성명재, 박기백. (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5-37.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 35-60.
- 신광영. (2022). 소득분포 분석의 네 가지 개념 -불평등, 격차, 집중, 양극화. 김윤태 (편),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pp.21-42). 한올아카데미.
- 신진욱, 조은혜. (2020). 세대균열의 현실, 세대담론의 재현-세대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시민사회와 NGO**, 18(1), 49-99.
- 신진욱. (2022). **그런 세대는 없다**. 강원: 개마고원.
- 오지혜. (2020).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모의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1), 361-393.
- 오지혜, 임정재. (2016).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0(5), 203-245.
-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유경원. (2023).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편), **한국의 사회동향 2023** (pp.199-2

- 209). 통계청 통계개발원.
- 유진성. (2022). 소득계층별 출산을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과학연구**, 41(3), 233-258.
- 윤종인. (2018).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66(1), 81-114.
- 은기수. (2018).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경력단절. **한국인구학**, 41(2), 117-150.
- 이승윤, 백승호. (2021. 10. 29.). **청년세대 내 불안정성은 계층화되는가? : 청년 불안정노동의 유형과 세대 내 격차 결정요인**.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569-593) [https://www.kli.re.kr/kliFileDownload?fileName=24.%20%EC%9D%B4%EC%8A%B9%EC%9C%A4,%EB%B0%B1%EC%8A%B9%ED%98%B8\\_%EC%B5%9C%EC%A2%85.pdf&fileNameOrg=24.%20%EC%9D%B4%EC%8A%B9%EC%9C%A4,%EB%B0%B1%EC%8A%B9%ED%98%B8\\_%EC%B5%9C%EC%A2%85.pdf&filePath=jsphome/DATA/cnfrnc/SjIem/294](https://www.kli.re.kr/kliFileDownload?fileName=24.%20%EC%9D%B4%EC%8A%B9%EC%9C%A4,%EB%B0%B1%EC%8A%B9%ED%98%B8_%EC%B5%9C%EC%A2%85.pdf&fileNameOrg=24.%20%EC%9D%B4%EC%8A%B9%EC%9C%A4,%EB%B0%B1%EC%8A%B9%ED%98%B8_%EC%B5%9C%EC%A2%85.pdf&filePath=jsphome/DATA/cnfrnc/SjIem/294).
- 이왕원, 김문조, 최을. (2016).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 변화. **한국사회학**, 50(5), 247-284.
- 이주미, 김태완. (2022).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2. 03., no.302, 8-20.
- 이철승. (2019a). **불평등의 세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철승. (2019b). 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한국사회학**, 53(1), 1-48.
- 이희정. (2022). 청년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사회계층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6(2), 45-82.
- 장인수. (2023.5.25).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MZ세대 관점으로 본 진단과 해법 발제자료집**. (pp.14-27) 건강사회운동본부 2023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책토론회, 서울. <http://healthcampaign.or.kr/%EC%BB%A4%EB%AE%A4%EB%8B%88%ED%8B%B0/%EB%B3%B4%>

EB%8F%84%EC%9E%90%EB%A3%8C%EC%9E%90%EB%A3%8C%EC%8B%A4/?uid=907&mod=document&pageid=1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31-52.

전상진. (2018).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서울: 문학과지성사.

최광은, 박민진. (2021). 청년의 주관적 사회지위가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사회과학연구**, 32(4), 209-238.

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08~202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8. 28.).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26708](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26708).

통계청. (2024a). **국가통계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에서 2024.9.1. 인출.

통계청. (2024b).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에서 2024.9.1. 인출.

통계청. (2024c). **학력,연령계층,임금계층(총액),성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11&conn_path=I3)에서 2024.9.1. 인출.

통계청. (2024d). **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3)에서 2024.9.1. 인출.

통계청. (2024e). **소득5분위별 가구주 특성** [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41&tblId=DT\\_34101\\_0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41&tblId=DT_34101_00)

- 1&conn\_path=I3에서 2024.9.1.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각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세트와 코드북], 1-25차, <https://www.kli.re.kr/klips>, 2024. 7. 25. 다운로드
- 한국노동연구원. (각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설문지], 8-25차, <https://www.kli.re.kr/klips>, 2024. 7. 25. 다운로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 세트와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kihasa> 2024. 5. 17. 다운로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1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kihasa> 2024. 5. 17. 다운로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가족과 출산조사** [데이터 세트와 코드북],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kihasa> 2024. 5. 17. 다운로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근로자의 평균임금(성/사업체규모/연령별)** [데이터세트]. 성인지통계 시스템.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TD1171&conn\\_path=I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TD1171&conn_path=I3)에서 2024.9. 1. 인출.
- 한국행정연구원. (2017, 2020,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 파일]
- 함선유, 이원진, 하은솔. (2023). **청년의 계층적 가족형성과 소득불평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광훈. (2021).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특성 및 지속성 분석. **고용이슈**, 가을호. 2021. 10. 29. pp. 112-127, <https://www.keis.or.kr/user/extra/main/3880/publication/reportList/jsp/LayOutPage.do?categoryId=130&pubIdx=7933&reportIdx=5604>
- 황선재, 계보용.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인구학**, 41(4), 65-88.
- KB부동산 데이터허브. (2024).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https://d>

ata.kbland.kr/kbstats/pir에서 2024. 6. 12. 인출.

- Abbasi-Shavazi, M. J., McDonald, P., & Hosseini-Chavoshi, M. (2009). *The Fertility Transition in Iran: Revolution and Reproduction*. Springer.
- Adserà, A. (2011). The interplay of employment uncertainty and education in explaining second births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25, 513–544.
- Akerlof, G. A., & Kranton, R. E. (2000). Economics and Ident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3), 715–753. <https://doi.org/10.1162/003355300554881>
- Anderson, T., & Kohler, H.-P. (2015). Low Fertil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3), 381–407.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5.00065.x>
- Atoh, M., Kandiah, V., & Ivanov, S. (200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Asi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w fertility situ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2(1), 42–75.
- Beaujouan, É., Zeman, K., & Nathan, M. (2023). Delayed first births and completed fertility across the 1940–1969 birth cohorts. *Demographic Research*, 48, 387–420.
-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p. 209–240) [NBER Chapters]. <https://econpapers.repec.org/bookchap/nbrnberch/2387.htm>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63–1093.

- Berg, V., Lawson, D. W., & Rotkirch, A. (2020). Financial opportunity costs and deaths among close kin a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reproductive timing in a contemporary high-income society.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87(1919), 20192478. <https://doi.org/10.1098/rspb.2019.2478>
- Bernhardt, E., & Bergnehr, D. (2013). The non-modern child? Ambivalence about parenthood among young adults. In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https://doi.org/10.4324/9780203070635>
- Bianchi, S. M. (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4), 401-414. <https://doi.org/10.2307/2648068>
- Billari, F. C., & Kohler, H.-P.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176.
- Blinder, A. S. (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 436-455.
- Blossfeld, H.-P., Klijzing, E., Mills, M., & Kurz, K. (2008).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The Losers in a Globalizing World*.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Bongaarts, J., & Feeney, G.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71-291.
- Bongaarts, J., & Feeney, G. (2000).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Rep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560-564.
- Butz, W. P., & Ward, M. P. (1979). The Emergence of Countercyclical U.S. Ferti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9(3), 318-328.
- Caldwell, J. C. (2004). Social Upheaval and Fertility Decline. *Journal of Family History*, 29(4), 382-406.
- Cherlin, A., Cross-Barnet, C., Burton, L. M., & Garrett-Peters, R. (200

- 8). Promises they can keep: Low-income women's attitudes toward motherhood, marriage, and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4), 919-933.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8.00536.x>
- Cleland, J. (2001). Potatoes and pills: An overview of innovation-diffusion contributions to explanations of fertility decline. In Casterline JB (Ed.), *Diffusion Processes and Fertility Transition: Selected Perspectives* (pp.39-65). National Academies Press.
- Coale, A. J. (1973). The demographic transition reconsidered.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Lieg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pp. 53-72).
- Comolli, C. L. (2017). The fertility response to the Great Recess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tructural economic conditions and perceived economic uncertainty. *Demographic Research*, 36(51), 1549-1600. <https://doi.org/10.4054/DemRes.2017.36.51>
- Comolli, C. L., Neyer, G., Andersson, G., Dommermuth, L., Fallesen, P., Jalovaara, M., Jónsson, A. K., Kolk, M., & Lappegård, T. (2021). Beyond the Economic Gaze: Childbearing During and After Recessions in the Nordic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7(2), 473-520. <https://doi.org/10.1007/s10680-020-09570-0>
- Cowell, F. A. (2011). *Measuring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Daniluk, J. C. (2015). "Sleepwalking into Infertility": The Need for a Gentle Wake-Up Call.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15(11), 52-54. <https://doi.org/10.1080/15265161.2015.1088990>
- Easterlin, R. A. (1976). The Conflict between Aspirations and Resourc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4), 417-425. <https://doi.org/10.2307/1352000>

doi.org/10.2307/1971619

- Edin, K., & Kefalas, M. (2005). Unmarried with Children. *Contexts*, 4(2), 16-22. <https://doi.org/10.1525/ctx.2005.4.2.16>
- Elder Jr., G. H. (1999).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25th anniversary ed (pp. xxv, 444). Westview Press.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5.00024.x>
- Eurostat. (2024). eurostat Data Browser: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 Demography, population stock and balance > Fertility (national level), Total fertility rate. eurostat. Last retrieved on Aug 26, 2024.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ps00199/default/table?lang=en&category=t\\_demo.t\\_demo\\_fer](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ps00199/default/table?lang=en&category=t_demo.t_demo_fer).
- Fairlie, R. W. (1999). The absence of the African-American owned business: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1), 80-108.
- Fairlie, R. W. (2005). An extens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o logit and probit mode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0(4), 305-316.
- Fishback, P. V., Haines, M. R., & Kantor, S. (2007). Births, Deaths, and New Deal Relief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1), 1-14.
- Freeman, E., Xiaohong, M., Ping, Y., Wenshan, Y., & Gietel-Basten, S. (2018). 'I couldn't hold the whole thing': The role of gender, individualisation and risk in shaping fertility preferences in Taiwan. *Asian Population Studies*, 14(1), 61-76. <https://doi.org/10.1080/17441730.2017.1386408>

- Frejka, T. (2011). The Role of Contemporary Childbearing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Shaping Period Fertility Trends.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Zeitschrift Für Bevölkerungswissenschaft*, 36(4), 927-958.
- Frejka, T., Goldscheider, F., & Lappegård, T. (2018). The Two-Part Gender Revolution, Women's Second Shift and Changing Cohort Fertility.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3. <https://doi.org/10.12765/CPoS-2018-09>
- Friedman, D., Hechter, M., & Kanazawa, S. (1994). A Theory of the Value of Children. *Demography*, 31(3), 375-401. <https://doi.org/10.2307/2061749>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Polity.
-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Article 2.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5.00045.x>
- Goldstein, J. R., & Kenney, C. T.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4), 506-519.
- Glenn, N. D. (2005). *Cohort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Gowen, O., Fosse, T., and Winship, C. (2023). Cross-Group Differences in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A Bounding Approach to the Gender Wage Gap. *Sociological Science*, 10, 731-768.
- Guetto, R., Bazzani, G., & Vignoli, D. (2022). Narratives of the future and fertility decision-making in uncertain times. An application to the COVID-19 pandemic.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2022), 223-260.

- Hajnal, J. (1965). European marriage patterns in perspective. In D. V. Glass & D. E. C. Eversley (Eds.), *Population in History: Essays in Historical Demography* (pp. 101-143). Arnold.
- Hellstrand, J., Nisén, J., & Myrskylä, M. (2022). Less Partnering, Less Children, or Both? Analysis of the Drivers of First Birth Decline in Finland Since 2010.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8(2), 191-221. <https://doi.org/10.1007/s10680-022-09605-8>
- Hellstrand, J., Nisén, J., Miranda, V., Fallesen, P., Dommermuth, L., & Myrskylä, M. (2021). Not Just Later, but Fewer: Novel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the Nordic Countries. *Demography*, 58(4), 1373-1399. <https://doi.org/10.1215/00703370-9373618>
- Hiilamo, H. (2019). Why fertility has been declining in Finland after the Global Recession? : A theoretical approach. *Finnish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54, 29-51. <https://doi.org/10.23979/fyp.r.85090>
- Hwang, J. (2023). Later, Fewer, None? Recent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South Korea. *Demography*, 60(2), 563-582. <https://doi.org/10.1215/00703370-10585316>
- Jalovaara, M., & Fasang, A. (2017). From never partnered to serial cohabitators: Union trajectories to childlessness. *Demographic Research*, 36, 1703-1720.
- Jann, B. (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8(4), 453-479.
- Juhn, C., Murphy, K. M., and B. Pierce, (1993).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410-442.
- Kim, C. (2023). Stratific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 In J. Kim (Ed.), *A Contemporary Portrait of Life in Korea: Research*

- ching Recent Social and Political Trends* (pp. 139-165). Springer Nature. [https://doi.org/10.1007/978-981-99-5829-0\\_7](https://doi.org/10.1007/978-981-99-5829-0_7)
- Kohler, H.-P., Billari, F. C., &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Article 4. 641-680.
- Kolk, M. (2019). Weak support for a U-shaped pattern between societal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en comparing societies across time. *Demographic Research*, 40, 27-48.
- Kreyenfeld, M., Andersson, G., & Pailhé, A. (2012). Economic Uncertainty and Family Dynamics in Europe: Introduction. *Demographic Research*, 27, 835-852.
- Kye, B. (2012). Cohort Effects or Period Effects? Fertility Decline in South Korea in the Twentieth Centu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1, 387-415.
- Kye, B., Hwang, S. J., Kim, J., & Choi, Y. (2022). Intragenerational Occupational Mobility of South Korea, 1998-2017: Implications of the Gendered Life Course Approaches for Mobility and Inequality Studie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77, 100660.
- Lee, J. (2024). Age, Period, and Cohort Analysis With Bounding and Interaction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https://doi.org/10.1177/00491241241266279>
- Lemoine, M.-E., & Ravitsky, V. (2015). Sleepwalking Into Infertility: The Need for a Public Health Approach Toward Advanced Maternal Age.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15(11), 37-48. <https://doi.org/10.1080/15265161.2015.1088973>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esthaeghe, R. J., & Neidert, L. (2006).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Exception or Textbook Exampl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4), 669–698.
- Lesthaeghe, R., & Surkyn, J. (1988).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1–45. <https://doi.org/10.2307/1972499>.
- Lesthaeghe, R., & van de Kaa, D. J. (1986). Twee demografische transitie ('Two demographic transitions?'). In R. Lesthaeghe & D. J. van de Kaa (Eds.), *Bevolking: Groei en krimp* (pp. 9–24). Van Loghum-Slaterus.
- Lesthaeghe, R. (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IPD working paper 1991-2. Interuniversity programme in demography.
- Liefbroer, A. C., Klobas, J. E., Philipov, D., & Ajzen, I.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A conceptual framework. In D. Philipov, A.C., Liefbroer, & J. E. Klobas (Eds)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pp. 1–15).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Luo, L. (2013). Assessing Validity and Application Scope of the Intrinsic Estimator Approach to the Age-Period-Cohort Problem. *Demography*, 50(6), 1945–67.
- Luo, L. and Hodges, J. (2020). Constraints in Random Age-Period-Cohort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50(1), 276 – 317.
- Martin, Steven P. (n.d.). *Growing Evidence for a “Divorce Divide”? Education and Marital Dissolution Rates in the U.S. since the 1970s*. Working Paper.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Retrieved August 26, 2024, from [https://www.russellsage.org/sites/all/files/u4/Martin\\_Growing%20Evidence%20for%20a%20Divorce%20Divi](https://www.russellsage.org/sites/all/files/u4/Martin_Growing%20Evidence%20for%20a%20Divorce%20Divi)

d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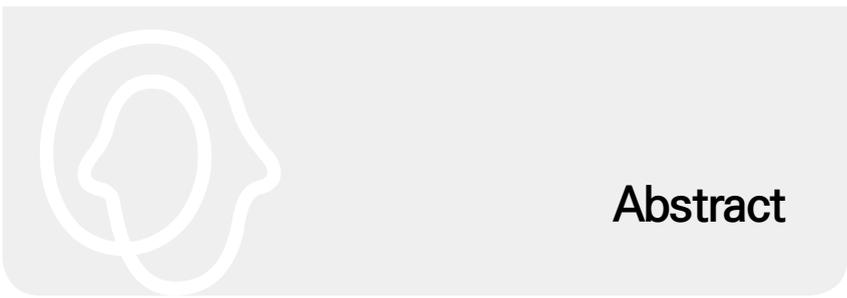
- Mason, W. M., and Fienberg, S. E.. (1985). Introduction: Beyond the Identification Problem. In Mason, W. M. and Fienberg, S. E. (Ed).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yond the Identification Problem*(pp.1-8). New York: Springer.
- McDonald, P. (2000a).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Article 3. 427-439.
- McDonald, P. (2000b).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1-16. <https://doi.org/10.1007/bf03029445>
- McLanahan, S. (2004). Diverging Destinies: How Children Are Faring unde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41(4), 607-627.
- McLanahan, S., & Jacobsen, W. (2015). Diverging Destinies Revisited. In P. R. Amato, A. Booth, S. M. McHale, & J. Van Hook (Eds.), *Families in an Era of Increasing Inequality: Diverging Destinies* (pp. 3-23).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https://doi.org/10.1007/978-3-319-08308-7\\_1](https://doi.org/10.1007/978-3-319-08308-7_1)
- Miettinen, A., & Jalovaara, M. (2020). Unemployment delays first birth but not for all. Life stage and education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employment uncertainty on first birth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43, 100320. <https://doi.org/10.1016/j.alcr.2019.100320>
- Mills, M., & Blossfeld, H. P. (2003).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changes in early life courses.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6, 188-218. <https://doi.org/10.1007/s11618-003-0023-4>
- Myrskylä, M., Kohler, H.-P., & Billari, F. C. (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 741-743, <https://doi.org/10.1038/460741a>

- oi.org/10.1038/nature08230
- Neels, K., & De Wachter, D. (2010).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of Belgian fertility: How are they related to rising female educational attainment?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8, 77-106.
- Oh, J., Lee, J., & Woo, H. (2020). Who Gets Married? Parent's Household Income, Individual's Education, and Entry into Marriage in South Korea. In H. Park and H. Woo (eds.) *Korean Families Yesterday and Today* (pp.243-270).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Oaxaca, R.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693-709.
- Oaxaca, R., & M. R. Ransom. (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1), 5-21.
- Philipov, D., & Berghammer, C. (2007). Religion and fertility ideals, intentions and behaviour: A comparative study of European countrie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71-305.
- Price, D., Bonsaksen, T., Ruffolo, M., Leung, J., Chiu, V., Thygesen, H., Schoultz, M., & Geirdal, A. O. (2021). Perceived Trust in Public Authorities Nine Months after the COVID-19 Outbreak: A Cross-National Study. *Social Sciences*, 10(9), Article 9. <https://doi.org/10.3390/socsci10090349>
- Rainwater, L., & Smeeding, T. M. (2003). *Poor Kids in a Rich Country: America's Childr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ussell Sage Foundation. <https://www.jstor.org/stable/10.7758/9781610444620>
- Raley, R. K. (2001). Increasing fertility in cohabiting unions: Evidence fo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38(1), 59-66. <https://doi.org/10.1353/dem.2001.0008>

- Raymo, J. M., Park, H., & Yu, J. (2023). Diverging Destinies in East Asia. *Annual Review of Sociology*, 49(Volume 49, 2023), 443-463. <https://doi.org/10.1146/annurev-soc-020321-032642>
- Rotkirch, A. (2020). The wish for a child.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20, 49-62.
- Ryder, N.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 Savelieva, K., Jokela, M., & Rotkirch, A. (2023). Reasons to Postpone Childbearing during Fertility Decline in Finland. *Marriage & Family Review*, 59(3), 253-276. <https://doi.org/10.1080/01494929.2022.2083283>
- Skirbekk, V., & Samir, K. C. (2012). Fertility-Reducing Dynamics of Women's Social Status and Educational Attainment. *Asian Population Studies*, 8(3), 251-264.
- Skirbekk, V. (2023). *Low, but not too low, fertility can represent a positive development*.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1.
- Sobotka, T. (2004). Is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Explained by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2), 195-220.
- Sobotka, T., Skirbekk, V., & Philipov, D. (2011). Economic Recession and Fertility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2), 267-306.
- Sobotka, T., Zeman, K., Lesthaeghe, R., Frejka, T., & Neels, K. (2011).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Cohort Fertility: Austria, Germany and Switzerland in a European Context.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36(2-3), 417-452.
- Thomson, D. (1989). *Selfish Generations: How Welfare States Grow Old*. The White Horse Press.

- Trinitapoli, J., & Yeatman, S. (2011). Uncertainty and Fertility in a Generalized AIDS Epidemic.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935-954. <https://doi.org/10.1177/0003122411427672>
- Ursin, G., Skjesol, I., & Tritter, J. (2020). The COVID-19 pandemic in Norway: The dominance of social implications in framing the policy response. *Health Policy and Technology*, 9(4), 663-672. <https://doi.org/10.1016/j.hlpt.2020.08.004>
- Vignoli, D., Bazzani, G., Guetto, R., Minello, A., & Pirani, E. (2020). Uncertainty and Narratives of the Futur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Contemporary Fertility. In R. Schoen (Ed.), *Analyzing Contemporary Fertility* (pp. 25-47).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https://doi.org/10.1007/978-3-030-48519-1\\_3](https://doi.org/10.1007/978-3-030-48519-1_3)
- Vignoli, D., Drefahl, S., & Santis, G. D. (2012). Whose job instability affects the likelihood of becoming a parent in Italy? A tale of two partners. *Demographic Research*, 26, 41-62.
- Vignoli, D., Guetto, R., Bazzani, G., Pirani, E., & Minello, A. (2020). A reflection on economic uncertainty and fertility in Europe: The Narrative Framework. *Genus*, 76, 1-17. <https://doi.org/10.1186/s41118-020-00094-3>.
- Yang, Y., and Land, K. (2008). Age-period-cohort Analysis of Repeated Cross-Section Surveys: Fixed or Random Effect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6(3), 297-326.
- Yang, Y., Schulhofer-Wohl, S., Fu, W. J. and Land, K. C. (2008). The Intrinsic Estimator for Age-Period-Cohort Analysis: What It Is and How to Use I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3(6), 1697-736.
- Yoo, S. H. (2014).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cohort fertility during the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0, 1463-1494.

- Yoo, S. H. (2016).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cohort marriage: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5, 1045-1078.
- Yoo, S. H., & Sobotka, T. (2018). Ultra-low fertility in South Korea: The role of the tempo effect. *Demographic Research*, 38, 549-576.
- Zaidi, B., & Morgan, S. P. (2017).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A Review and Appraisal.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1), 473-492. <https://doi.org/10.1146/annurev-soc-060116-053442>
- Zeman, K., Beaujouan, E., Brzozowska, Z., & Sobotka, T.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 651-690. <https://doi.org/10.4054/DemRes.2018.38.25>



## Abstract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low fertility rates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birth cohorts in Korea

Project Head: Chang, Insu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pplement discuss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ultra-low fertility rate. We focused on the possibility that the internal and external vulnerabilities of the current youth generation could negatively affect their progression to key life stages,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We also considered how the rapid decline in fertility rates may be linked to increasingly individual-level disparities caused by the polarization of social structures and various forms of inequality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Furthermore, we determined that these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broader social instability currently recognized as a pressing concern in Korea.

We began by examining discussions on intra- and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We reviewed various previous discussions on topics such as inequality and discriminatory population behavior, as well as inequality and instability in Korea. In addition, we explored recent trends in instability by focusing on intra- and intergenerational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differences in values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Moreover,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as reflected in labor market status mobility and examined how these factors might contribute to low birth rates. Finally, throug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of the correlation between birth transitions and socioeconomic inequality by birth cohort, we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internal and external vulnerabilities of the youth are combined as one of the various reasons for the low birth rate problem in Korean society.

Our findings suggest that Korea's policy responses to low birth rates need to consider ma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for improving socioeconomic inequality in addition to the substantive promotion of programs and projects. These can be summarized as the formation of macro-level conditions that urgently consider policy demands in birth transition by micro-level decision-making and effective policy interventions.

**Key words:** socioeconomic inequality, youth generation, instability, low fertility rate, fertility, social structure, labor market, decomposition model, cross-sectional study, longitudinal study